

아산시 비전설정과 실천전략 연구

제 출 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비전설정과 실행전략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원 장 강 현 수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아산시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5
2.1 아산시 현황 및 여건	5
2.2 관련 계획 검토	12
2.3 도시정책 패러다임 검토	17
2.4 아산시민의 행복결정 요인	38
제3장 아산시 비전 설정	42
3.1 비전 설정을 위한 사전 탐색	42
3.2 비전 설정을 위한 키워드 도출	46
3.3 비전 제안	48
제4장 아산시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	50
4.1 지역도시분야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	51
4.2 교통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선진도시	64
4.3 환경분야 : 건강 생태회랑 친환경도시	78
4.4 안전·안심분야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안심 도시	87
4.5 산업경제분야 : 지역 선순환 경제도시	96
4.6 농업농촌분야 : 친환경 농업 기반 다기능 농업도시	104
4.7 문화관광분야: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112
4.8 사회복지분야 :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121
4.9 교육분야 : 학습이 일상화된 평생학습도시	127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1
참고 문헌	143
부록 1	147
부록 2	153
부록 3	174

표 목 차

[표 2-1] 행정 구역	6
[표 2-2] 인구현황	7
[표 2-3] 타시도 및 시군 총소비지출 비용(2012년)	8
[표 2-4] 아산시 대기업 법인지방세 징수 현황	9
[표 2-5] 아산시 300명 이상 기업 종사자수	9
[표 2-6] SWOT 분석 결과	11
[표 2-7]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2
[표 2-8] 충남경제비전 2030의 비전과 추진전략	13
[표 2-9]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3
[표 2-10]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별 인구배분	15
[표 2-11]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6
[표 2-12]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주요 전략	20
[표 2-13] 서울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	36
[표 2-14]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결과(개인의 속성)	39
[표 2-15]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결과(영역별 중요성)	40
[표 3-1] 역대 시정비전과 목표	42
[표 3-2] 관련 계획에서의 아산 미래상과 비전	43
[표 3-3] 민선6기 주요사업에 대한 공무원 자체평가	45
[표 4-1] 지역도시정책 전략-시책 체계	51
[표 4-2] 국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방법들	59
[표 4-3]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한 정비 가능성 검토	62
[표 4-4] 교통정책 전략-시책 체계	64
[표 4-5] 환경정책 전략-시책 체계	78
[표 4-6] 안전·안심정책 전략-시책 체계	87
[표 4-7] 산업경제정책 전략-시책 체계	95
[표 4-8] 농업농촌정책 전략-시책 체계	104
[표 4-9] 문화예술정책 전략-시책 체계	112
[표 4-10] 생활문화 활동 유형	114
[표 4-11] 아산시 대표축제(2017년 기준)	116
[표 4-12] 사회복지정책 전략-시책 체계	121
[표 4-13] 교육정책 실현전략-시책 체계	127
[표 4-14] 서울시 학교간 협력교육과정 운영유형	13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그림 1-2] 아산시 비전설정의 개념	3
[그림 1-3] 연구의 진행과정	3
[그림 1-4] 비전과 실천전략 체계	3
[그림 2-1] 아산시 위치도	5
[그림 2-2] 아산시 위치 및 행정구역	7
[그림 2-3] 인구 증감율(2006-2015)	8
[그림 2-4]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미래상	14
[그림 2-5]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간구조	14
[그림 2-6]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	15
[그림 2-7] 한국 도시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17
[그림 2-8]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4)	18
[그림 2-9] 한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1970~2040)	19
[그림 2-10] 국가별 4차산업혁명 대비 수준 (한국 25위)	20
[그림 2-11] 2014년 연평균 기온 분포도	21
[그림 2-12] 2010.9.21. 서울시내 집중호우(259.5mm/일)	21
[그림 2-13] 5대 도시권 중심의 대도시권화	22
[그림 2-14] OECD 회원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23
[그림 2-15] 충남 시·군별 외국인 주민 수	24
[그림 2-16] 역대 해비타트 회의 의제와 주요결과	25
[그림 2-17]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	28
[그림 2-18]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의 비전	31
[그림 2-19] 서울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급 현황	32
[그림 2-20] 입지적정화계획의 개념도	34
[그림 2-21]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 지정	34
[그림 2-22] 건강도시 강동의 비전과 목표(6대 전략과 20개 실천과제)	36
[그림 3-1] 키워드를 통한 아산시 주요관심과 이슈	43
[그림 3-2] 아산시 비전과 키워드 “행복”	64
[그림 3-3]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포용”의 개념	64
[그림 3-4] OECD 지역개발 장관회의 : 도시분야 포용적 성장	47
[그림 3-5]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비전	48

[그림 3-6] 아산시 비전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	49
[그림 4-1] 아산시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체계	50
[그림 4-2] 지속가능한 콤팩트시티 이미지	52
[그림 4-3] 아산시의 공간구조 현황(상주인구와 종사자인구 그리고 유동인구)	53
[그림 4-4] 아산시 개별 개발행위 협의·허가의 공간적 분포	54
[그림 4-5] 아산 등 충남의 공장분포 현황	55
[그림 4-6] 유희토지 조사 사례	56
[그림 4-7]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7 5
[그림 4-8] 빈집 특별법 등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요	57
[그림 4-9] 빈집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예시)	58
[그림 4-10] 창업지원주택	60
[그림 4-11] 대학협력형 주택	61
[그림 4-12]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61
[그림 4-13] 아이디어 스토어 사례: 영국	63
[그림 4-14] 아이디어 스퀘어 개념의 적용: 아산 장미마을(예시)	63
[그림 4-15] 아산시 마중택시	65
[그림 4-16] 관광 목적의 셔틀버스 운영 사례(대구 중구 '골목투어 청라버스')	6 6
[그림 4-17]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67
[그림 4-18]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67
[그림 4-19]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	68
[그림 4-20] 당진천변 보행환경 개선 사례	68
[그림 4-21]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구상	69
[그림 4-22]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사례	70
[그림 4-23] 공원지하 주차장 조성 사례	71
[그림 4-24] 공유주차제 시행 사례	71
[그림 4-25]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장착 촉진 사례	72
[그림 4-26] 합동 교통안전 증진대책 수립	73
[그림 4-27] 생활도로 교차로 교통안전 고도화 방안(시설설치 사례)	74
[그림 4-28] 스쿨존 인식 개선 사례	74
[그림 4-29] 대형차 공용주차공간 확보 사례	75
[그림 4-30] 소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례	76
[그림 4-31] 칼라 유도선 설치 사례	77
[그림 4-32] 아산시 중요산림 보전·관리 우선순위(상) 및 지역산림생태축(안)	79
[그림 4-33] 충남 중요야생동물 분포도	80
[그림 4-34] 아산시 중요 논습지 분포도(사례)	82
[그림 4-35] 대규모 중앙분리대 사례(대구시 수성구, 길이1.2km이상/폭20m이상)	83

[그림 4-36] 시가지 내 잔존림 사례	84
[그림 4-37] 아산시 잔존림과 공공시설 분포도	85
[그림 4-38] 아산시 바람길 분석 사례	86
[그림 4-39] 위기대응체계(서울안전누리)	89
[그림 4-40] VR을 활용한 가상훈련 시스템(한구소방안전협회)	89
[그림 4-41] 안전사고 STOP운동(경기도시공사)	90
[그림 4-42] 선제적 산업가스 안전체계 구축(가스안전공사)	90
[그림 4-43] 아산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16)	9
[그림 4-44] 일본의 방재핸드북(예시)	92
[그림 4-45] 일본의 다양한 재난용품(예시)	93
[그림 4-46] 재난 대비용 가방 구성품	93
[그림 4-47] 외국인근로자 안전매뉴얼	94
[그림 4-48] 어린이 교통안전놀이터	94
[그림 4-49]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	95
[그림 4-50] 어린이 사각지대 교통안전 캠페인	95
[그림 4-51] 국가혁신클러스터 예시: 강원 원주시	98
[그림 4-52] 산업연관표상 농업분야에서 조미료 및 유지산업의 위치	109
[그림 4-53]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례(세종시)	113
[그림 4-54]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창의도시' 구현방안	114
[그림 4-55] 영국 에딘버러성을 배경으로 한 프린지 페스티벌	116
[그림 4-56] 예술 치유 개념과 사례	119
[그림 4-57] 전문병원 클러스터로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 역할 수행(예시)	120
[그림 4-58] 아산의 대장간	120
[그림 4-59] 공공시설과 연계한 목욕탕 설치(사례)	124
[그림 4-60]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129
[그림 4-61] 도시유형별 도입가능 검토	129
[그림 4-6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130
[그림 4-63] 아산 행복교육협의체 구축방안	130
[그림 4-64] 연합형교육과정 운영학교	132
[그림 4-65]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32
[그림 4-66] 남양주시 사례: 평생학습시스템	134
[그림 4-67] 칠곡군 인문학 마을사업	140
[그림 5-1] 아산시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체계	141
[그림 5-2] 정책과 업무와 시민행복 관계	142
[그림 5-3] 아산시 미래비전(예, 키워드 '행복') 실현을 위한 체계구축(예시)	141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많은 도시들이 비전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지만, 비전의 적절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물론, 많은 준비와 검토, 공감을 거쳐 비전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정의 연속성과 세부 정책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함
- 이러한 판단에서 아산시 민선5-6기의 비전 키워드인 “행복”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에서 연구를 출발함
 - 민선5-6기 아산시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아산’ 임.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복” 이 시정 비전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음
 - 하지만, 행복국가로 잘 알려진 부탄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고, 일본 아라카야구는 구정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스템” 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현재 아산시의 비전 키워드인 “행복” 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해석과 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와 고민이 요구됨
- 비전은 방향성이 중요하고, 미래성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최근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 등 다각적 검토가 요구됨

■ 연구 목적

- 많은 계획과 정책에서 비전이 제안되고, 새로운 시정이 시작될 때마다 또 다른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소극적임
- 본 연구는 민선5-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현재 비전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비전에 대해 제안하고, 예시적 실천전략을 제시함
-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민선5-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7기 이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키워드를 도출하고, 몇 가지 비전을 제시함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아산시 2개 읍 9개 면, 6개 동 아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면적은 542.2km²(해수면 11.74km² 포함)임



[그림 1-1] 연구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기준년도로 하며, 분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함
- 연구의 목표연도는 아산시 중장기계획 등과 일치한 2025년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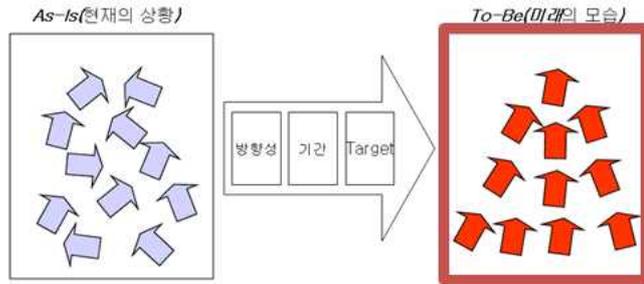
■ 연구 주요내용

- 연구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비전 설정과 비전 실현을 위한 예시적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비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아산시 역대 시정 비전과 목표, 최근의 주요이슈,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을 분석함

■ 연구 방법

- 비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그림 1-2>와 같이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방향성 제시임

**아산시 미래 모습을 일정한 방향성에 따라
기간과 타겟을 고려하여 명확한 말로 표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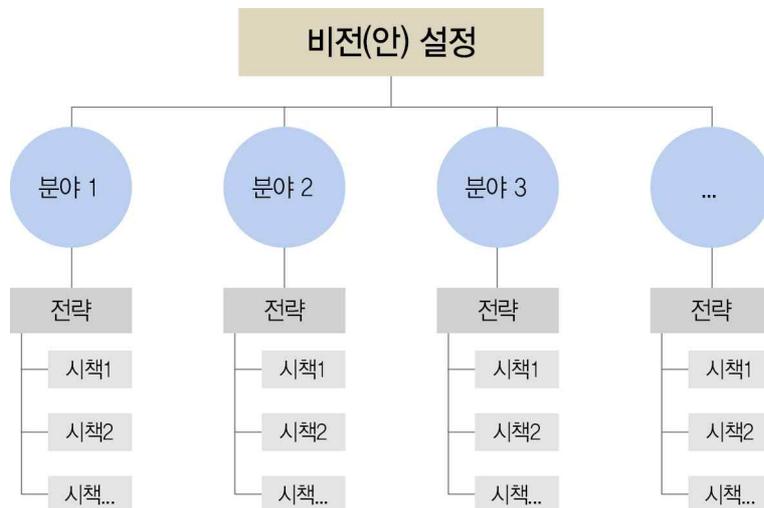
[그림 1-2] 아산시 비전설정의 개념

-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비전 설정의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비전 키워드와 비전을 도출하고, 비전 실천전략을 제안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함



[그림 1-3] 연구 진행과정

- 비전체계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명확하게 <그림 1-4>와 같이 제시함



[그림 1-4] 비전과 실천전략 체계

- 실현성 높은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워크숍, 공무원 의식조사 및 워크숍을 실시함
 - 분석에 의해 도출된 비전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전을 도출하고, 도출된 비전에 대해 공무원 설문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의 최적 비전을 제안함
- 이를 기초로 최종 비전은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보다 정밀한 검토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제2장

아산시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2.1 아산시 현황 및 여건

■ 지리적 측면

-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동서간 연장거리 29km, 남북간 연장거리 34km이며, 동쪽은 천안시, 서쪽은 당진군, 남쪽은 예산군·공주시, 북쪽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접함
- 산지관련 남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지나 높은 산지를 형성하며, 아산시 중앙에는 영인산(364m), 남부는 광덕산(699m)·망경산(600m)·봉수산(534m)·설화산(441m)·배방산(361m), 북부는 고용산(294m)·연암산(293m)이 있음
- 하천관련 북서부에는 아산만이 있으며,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삽교천과 안성천의 하구에 삽교호와 아산호가 있음, 동으로 봉강천, 서로는 삽교천, 중앙으로는 곡교천 등 그 유역을 따라 국내 유수의 온천수 등이 분포되어 있음

■ 입지적 특성

- 북으로 경기도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둔포면은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평택지원특별법 내 포함되는 지역임
- 편리한 교통여건 및 수도권 팽창의 제한으로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첨단 산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광역아산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첨단산업(반도체, 전자산업 등)이 입주해 있음
- 서울 기점으로부터 96km, 수도권 내 수원시와는 53km, 대전광역시와는 91.3km거리에 위치한 국토 중심임



[그림 2-1] 아산시 위치도

■ 기상·기후 특성

- 아산시는 여름은 고온다우, 겨울은 다설지역이며 연평균 기온은 지난 5년간 11.98℃이며, 최고기온은 36.9℃, 최저기온은 -20.2℃임
- 아산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65mm이고, 7~8월의 강수량은 약 550mm로 연중 강수량의 약 48%가 여름에 집중함
- 아산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은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불며 연평균 풍속은 2.42m/sec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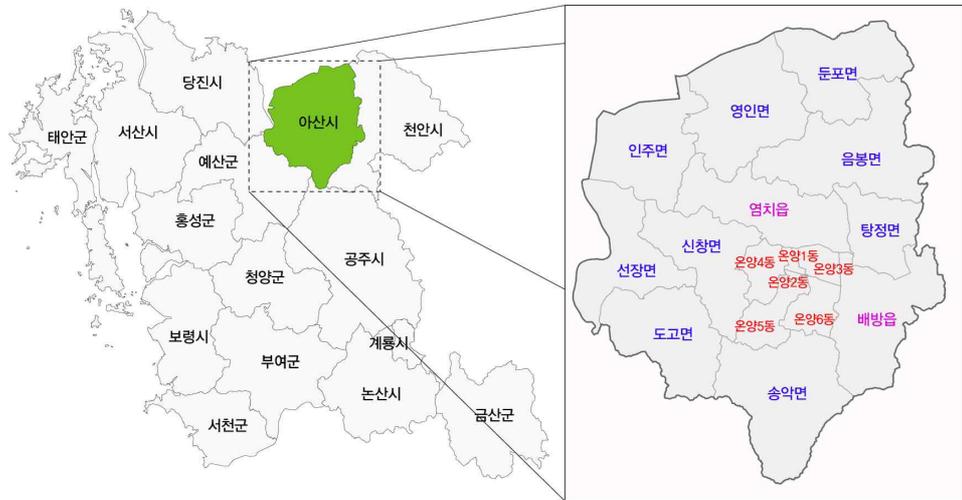
■ 행정 구역

- 아산시의 전체면적은 542.18km²로 충청남도 16개 시군가운데 9번째 순이며 면적구성 비로는 충남의 6.3%를 차지하고 아산시 행정구역은 2개읍, 9개면, 6개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임
- 아산시 읍면동별 면적을 보면 송악면이 61.16km²로 가장 넓고, 온양1·2동이 2.19km²로 가장 작음

[표 2-1]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읍	면	동(법정동)	통리	반
염치읍	42.15	7.8	1	-	-	31	107
배방읍	49.63	9.2	1	-	-	71	414
송악면	61.16	11.3	-	1	-	28	54
탕정면	24.20	4.5	-	1	-	26	99
음봉면	59.08	10.9	-	1	-	38	183
둔포면	41.18	7.6	-	1	-	41	122
영인면	56.28	10.4	-	1	-	33	114
인주면	45.08	8.3	-	1	-	30	134
선장면	37.65	6.9	-	1	-	31	89
도고면	43.83	8.1	-	1	-	32	85
신창면	39.69	7.3	-	1	-	44	204
온양 1동	2.19	0.4	-	-	1	15	93
온양 2동			-	-		17	81
온양 3동	6.27	1.2	-	-	3	28	207
온양 4동	10.06	1.9	-	-	5	25	204
온양 5동	13.02	2.4	-	-	4	24	202
온양 6동	10.74	2.0	-	-	6	25	186

자료 : 아산시 통계연보(2016)



[그림 2-2] 아산시 위치 및 행정구역

■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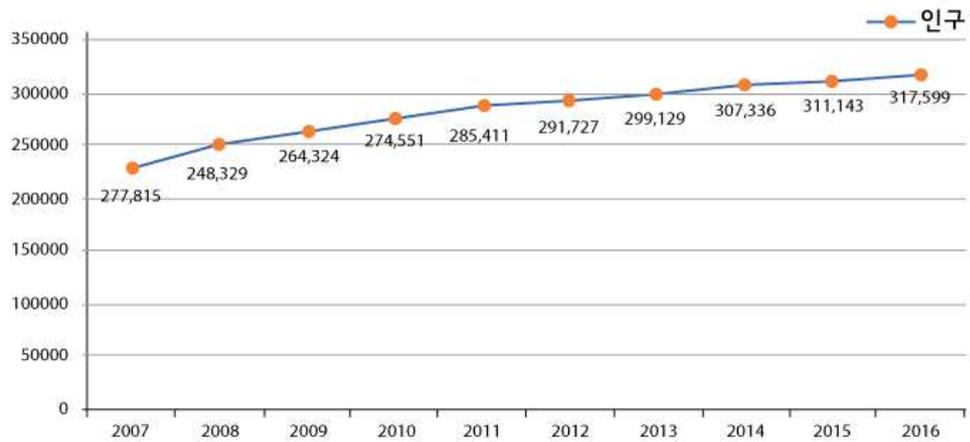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08%이며 아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방읍(68,194명)이며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선장면(4,020명)임

[표 2-2] 인구현황

(단위 : 명, 세대, %)

구분	세대수	계	인구 수			세대당 인구
			남	여	외국인	
합 계	124,223	317,599	155,692	147,237	14,670	6,456
염치읍	3,294	7,728	3,906	3,543	279	-153
배방읍	25,404	67,102	33,604	32,483	1,015	-1,027
송악면	1,834	4,285	2,207	2,032	46	52
탕정면	9,218	22,779	11,546	10,490	743	-931
음봉면	8,632	21,665	10,891	9,612	1,162	4,444
둔포면	6,458	16,261	7,488	6,100	2,673	1,921
영인면	2,835	6,957	3,242	2,901	814	-62
인주면	3,824	8,391	4,232	3,469	690	-117
선장면	1,699	3,964	1,846	1,721	397	-81
도고면	2,271	4,899	2,481	2,309	109	-106
신창면	9,913	26,210	11,896	10,987	3,327	641
온양 1동	3,852	8,624	4,252	4,023	349	1,768
온양 2동	3,592	8,815	4,065	4,048	702	-258
온양 3동	11,922	33,102	16,079	16,400	623	-411
온양 4동	7,742	21,028	10,358	9,950	720	-277
온양 5동	11,113	28,820	14,336	13,758	726	233
온양 6동	10,620	26,969	13,263	13,411	295	820

자료 : 아산시 통계연보(2016)



[그림 2-3] 아산시 인구 증감율(2006-2015)

■ 지역소득 역외유출

- 충남소득의 70% 정도를 아산/당진/천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산시의 경우도 1인당 GRDP의 40%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아산시의 연간 총소비지출액 24,651억원 중 지역 내에서 소비는 13,290억원으로 53.9%를 차지하고, 타 시도에서 소비된 5,742억원과 충남 내 타 시군에서 소비된 5,619억원 등 역외소비지출이 46.1%나 차지함

[표 2-3] 타시도 및 시군 총소비지출 비용(2012년)

(단위 : 억원)

소비항목	아산시 총지출	아산 지역내 지출	타시도 지출	충남 타시군 지출
식료품	6,903	3,930	1,429	1,544
의류 및 신발	2,996	1,501	701	794
가정용품	1,868	1,078	355	435
보건	2,316	1,439	366	511
오락·문화	2,622	1,263	742	617
교육	5,035	2,615	1,284	1,136
외식	2,909	1,464	864	581
계	24,651	13,290	5,742	5,619

자료 :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아산시 가구소비를 중심으로(2013), 충남연구원

■ 대기업에 대한 높은 재정 및 일자리 의존도

- 대기업(삼성 및 현대)에 대한 일자리, 부가가치의 의존도 높음
- 2015년 10월말 현재, 법인지방세 징수액 1,344억원 중 삼성 42.8%(575억원), 현대 12.9%(174억원) 납부했으나 대기업 영업이익의 증감에 따라 법인 지방세 납부액이 매우 불투명함

[표 2-4] 아산시 대기업 법인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법인명	납부현황						비고
	합계		법인소득		특별징수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삼성전자	227	340	189	295	38	45	
코닝정밀소재	270	70	206	20	64	50	
삼성디스플레이	416	165	279	20	137	145	
삼성합계	913	575	674	335	239	240	
현대자동차	75	121	48	103	27	18	
현대모비스	36	53	35	52	1	1	
현대합계	111	174	83	155	28	19	
총합계	1,024	749	757	490	267	259	

자료 : ' 14년 연말기준 ' 15년 10월 말 기준자료 : 아산시 내부자료(2015)

- 3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체 수는 전체의 0.15%에 불과하지만 종사자는 2014년 기준 28.6%로 대기업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아산시 300명 이상 기업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연별	전체		300명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	19,858	153,555	29	41,204
	100	100	0,1	26,8

자료 :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 온천관광산업 매력 감소

- 온천 자원유형 관광지는 지정된지 10년 이상된 관광지가 대부분으로 수명 주기상 정체단계, 쇠퇴단계에 분포하여 온천 자원의 관광매력도가 저하됨

- 수도권 전철 연장개통 이후, 무임권을 이용해 온천관광을 즐기는 노인층의 증가로 온천이용객 수는 증가하였으나 단순목욕이용, 노인층의 낮은 소비력, 노인층 증가에 따른 젊은층의 방문기피 등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는 저하됨
- 수도권전철의 개통 이후, 내방객의 증가로 온천수 사용량이 증가(일일 7,800톤 ~ 1만500톤) 하여 온양온천, 아산온천의 온천수 고갈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온천수 사용량 절감 등 온천수 관리진행¹⁾이 필요함

■ 도시지역 내 격차 및 응급의료체계 미흡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원도심의 기능 및 정체성 약화 및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간적으로 단절됨
-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인 온양6동 (5.1%)이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고, 신개발지역인 탕정면이 가장 낮은 것(0.4%)으로 나타남
- 충남외고, 충남삼성고 등 많은 특목고가 탕정 등 신도시에 몰려 있음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있으나 시민의 응급의료 욕구에 비하여 응급의료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농촌지역 비중 및 인구 감소

- 농촌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 지속됨
- 2005년 농가인구 34,791명에서 2014년 26,775명으로 30% 감소함
- 농지면적은 2009년 17,051ha에서 2014년 15,828ha 지속적으로 감소함

■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SWOT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음. 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이를 극대화하여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민선5-6기 비전 키워드인 “시민 행복”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1) 온양, 도고, 아산온천 정기온천자원조사용역(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성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건강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보다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며, 아산시 지역과 시민구성원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요구됨

[표 2-6]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GRDP(지역내총생산) - 첨단 산업의 요충지 - 높은 청년 인구비율 - 동북아 교류의 허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불균형 발전 - 청년의 낮은 정주율 - 브랜드 및 랜드마크 부족 - 지역거점 유통망·도매시장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등 관심 확대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어려움 - 주변 경쟁도시로 인구 유출 위험 - 높은 경제적 대외 의존도 - 가족적인 저출산·고령화

2.2 관련 계획 검토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 (비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기본방향)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교육·복지, 매력적인 문화·환경, 내실 있는 산업경제, 활력 있는 농어촌 등으로 수립함

[표 2-7]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추진전략	주요과제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호혜와 나눔의 사회적 경제 육성	- 순환과 공생의 농·림·축·수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서비스업의 지식 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기반 조성 -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근심 없는 맞춤복지·평생교육 실현	- 안정적인 에너지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 지역특성에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 친환경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 (시사점)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한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충남경제비전(2030)

- (비전)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
 - 사람을 행복하게, 지역을 가치 있게
- (기본방향) 창의적 인재, 좋은 일자리,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적 지역경제 생태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거점 등으로 수립함

[표 2-8] 충남경제비전 2030의 비전과 추진전략

구분	주요 내용
비전	-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
기본 목표	- 창의적 인재, 좋은 일자리,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적 지역경제 생태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거점
추진 전략	- 청년혁신인재 양성, 인재와 일자리 선순환 환경조성, 다변화된 미래성장산업 육성, 효과적 기업지원체계 구축, 행복한 삶을 이끄는 정주환경 조성,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 육성, 서민경제와 공동체경제 지원, 시군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촉진,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 바닷길 조성 등

[표 2-9]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중국 및 동아시아 교두보로서의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조성	- 서산(가로림만)~천안·아산을 연계하는 아산만권은 우리나라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된 최대의 산업집적지 - 충남의 지리적 산업적 강점을 활용, 아산만권을 중국 및 동아시아 진출입의 전진기지로 조성 - 중국 내수시장 공략 및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적 산업육성 및 산업단지별 특성화 추진
중국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산업입지 및 육성	-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고부가가치 금속 및 화학소재 산업육성
아산만권 산업단지의 특성화를 추진(대외 연계성 고려산업 특화)	- 대신(유기화학, 수소), 석문·송산(금속소재 및 기계부품), 인주(지능형자동차 부품), 천안(전기전자, 이차전지 등)
국내외 자원을 결합한 국제창업 촉진을 위한 국제창업지구 구축	- 비제조형 창업지구(천안아산), 제조형 창업지구(석문 등 산단)
기타 주요 전략들	- 대중국 및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항만물류 기반 확충 - 경기도와 협력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시사점) 중국 및 동아시아 교두보로서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조성과 산업 단지의 특성화를 추진

■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

-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미래상을 아산시를 둘러싼 여건변화와 시정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성별·연령별·계층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을 도모함
-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성평등 가치구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키워드 도출과 시민의식 조사를 통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여유로운 삶, 넉넉한 일자리가 있는 풍요로운 아산”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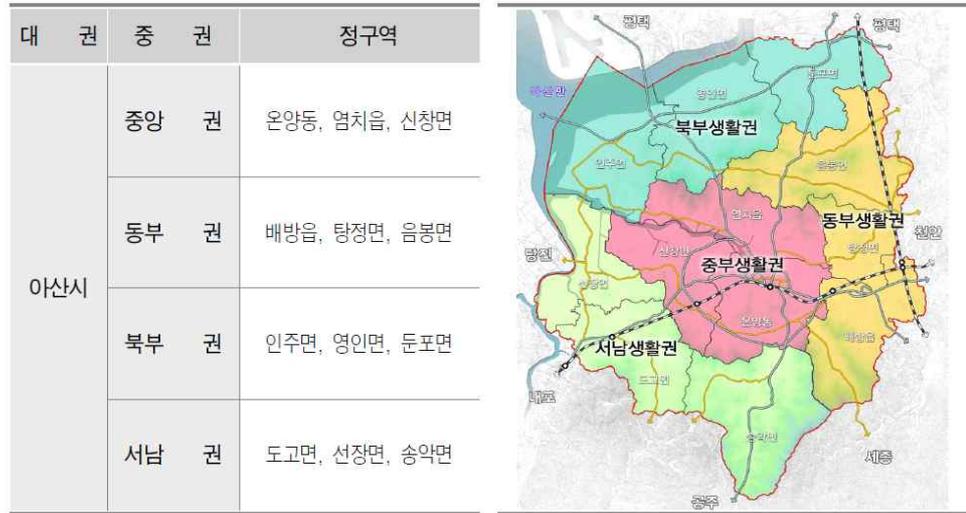
[그림 2-4]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미래상

- 이러한 아산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는 아산시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축, 수도권, 내포신도시, 세종시와 연계체계 강화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축, 당초 순환형 발전축을 주발전축과 보조발전축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주발전축은 내포신도시와 온양, 천안을 연계할 수 있는 국도 21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축과 내포신도시 ~ 도고 ~ 온양 ~ 아산신도시 ~ 천안을 연계하는 축 2개로 설정함



[그림 2-5]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간구조

- 그러나 2030년 65만명을 목표로 한 아산시의 생활권계획은 온양 도심 및 신도시권을 제외하면, 배후 생활권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심기능이 미약하거나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 도시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생활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성장축을 고려하여 중생활권을 설정하고, 읍·면 단위의 기초 소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연결한 소생활권간에는 상호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2-6]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

- 생활권별 인구배분은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한 인구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 2030년 목표인구는 2010년 현재인구 27.5만명, 자연적 증가인구 2.9만명, 사회적 증가인구 30.0만, 주간활동인구 5.1만을 합한 약 65만명으로 계획하고, 생활권별로는 중앙 38.4%, 동부 42.3%, 북부 13.1%, 서남 6.2%로 배분하였으며, 서남생활권은 대부분 산악으로 형성된 지역특성에 따라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표 2-10] 생활권별 인구배분

구분	합계		2010년 현재인구 (명)	증가인구(명)			
	인구(명)	점유율(%)		소계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주간 인구
계	654,701	100.0	274,551	380,150	28,615	300,245	51,290
중앙권	251,112	38.4	144,235	106,877	15,032	72,173	19,672
동부권	277,219	42.3	90,214	187,005	9,403	155,884	21,718
북부권	85,854	13.1	26,698	59,156	2,783	49,647	6,726
서남권	40,516	6.2	13,404	27,112	1,397	22,541	3,174

■ 2025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 (비전) 시민이 행복한 아산
- (기본방향)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아산시민의 생활만족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제공 등으로 수립함
 - (시민이 행복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주관적·객관적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표현
 - (행복한 아산) 모든 시민이 고르게 행복하고 다양한 잠재력과 매력이 발현되어야 하며, 방문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시민중심의 행복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

[표 2-11]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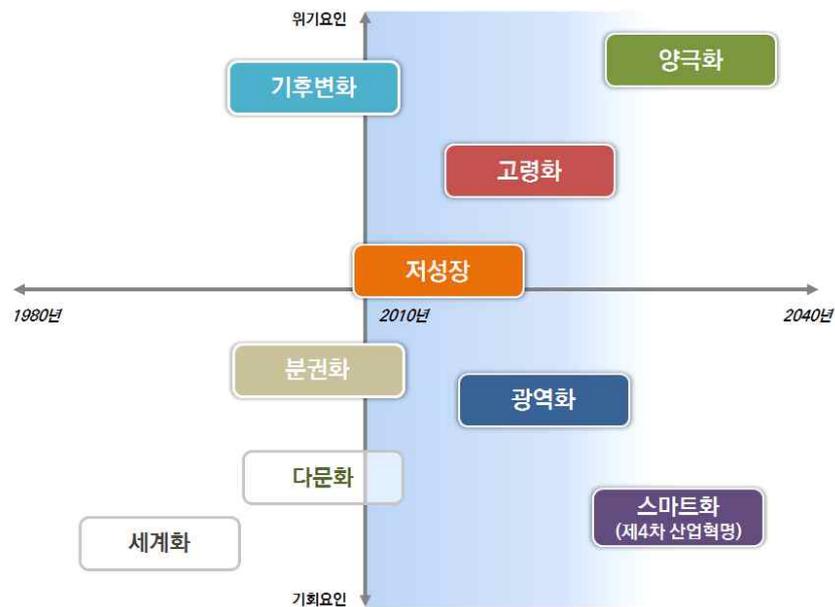
추진전략	주요과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 건강도시보건의료서비스강화, 재활병원, 산재병원유치 - 아산평생학습관 분원 설치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도시	-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제고 - 친환경자동차(수소차)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창조허브센터 건립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콜센터 유치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 도시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실개천 살리기 및 자연정화습지 조성사업
균형 발전하는 동반성장 도시	- 거점형 산지유통센터 건립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 성매매 우려지역(속칭 장미마을) 특화거리 조성 및 싸전부지 개발 - 아산 로컬푸드 확대 및 활성화
매력적인 온천문화 도시	- 관광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온천의료관광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 - 서북부권 복합레저타운 조성

- (시사점) 첨단산업도시기반 고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 매력도 강화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2.3 도시정책 패러다임 검토

1. 한국 도시의 여건 변화와 도전과제

- 최근 한국 도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산업 및 도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1970~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점차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 3% 전후의 저성장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했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도시공간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고 도시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공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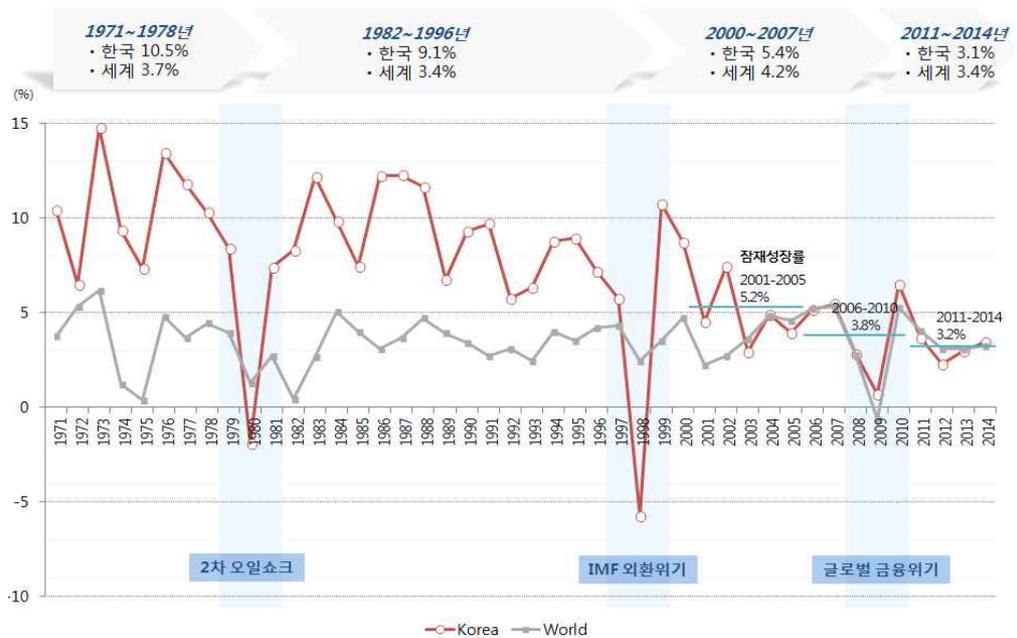


[그림 2-7] 한국 도시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 한국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광역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회요인도 있지만,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극복해야 할 위기도 공존함
- 이밖에도 양극화, 분권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정책 패러다임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저성장²⁾

-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011~2014년 평균 3.1% 수준으로, 1980년대 8.8%, 1990년대 7.1% 이후 하락세 지속
 - OECD(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4~2030년 2.9%에서 2031~2060년 1.6%로 감소할 전망
- 성장동력 약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우려
 -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투자 감소, 사회보험 재정 구갈, 국가부채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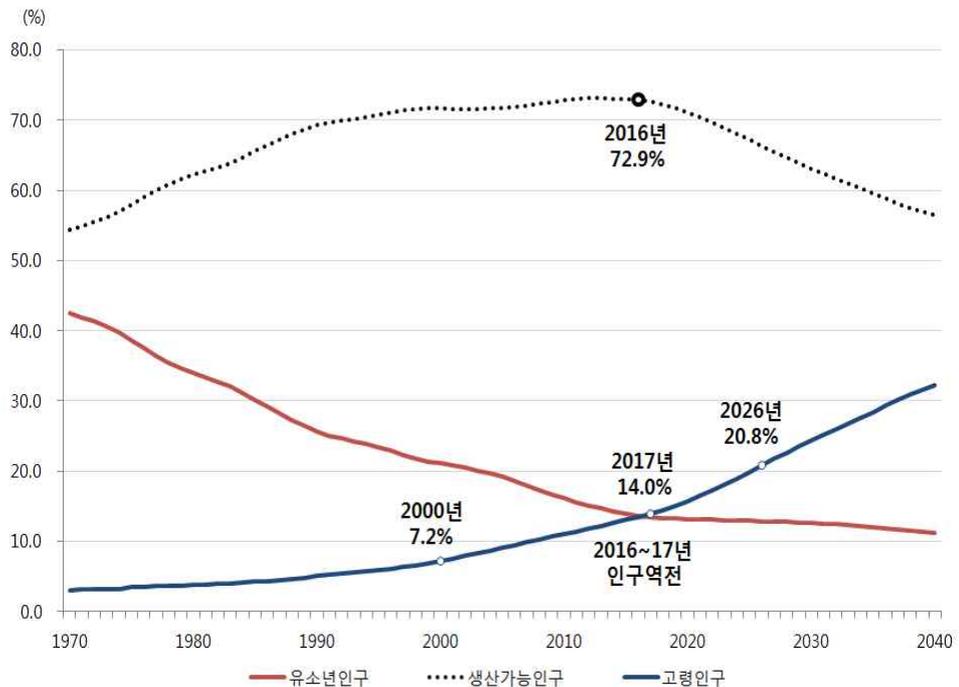
[그림 2-8]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4)

자료 : OECD;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ISSUE PAPER》 통권 제213호, p.1, 재구성

2)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한다』, 한울, pp.34~46;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pp.15~26을 참고하여 재구성.

■ 고령화³⁾

- 총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 도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2014)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010년 4,800만 명으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72.9%)을 정점으로 감소, 2040년 2,88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미국의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Harry S. Dent)는 2018년을 한국의 핵심소비 연령층(45~49세 인구)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 시기라 예측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62만 명,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2030년에는 1,269만 명, 전체의 24%까지 늘어날 전망
 - 우리나라는 고령화율 7%에서 20%이상이 되기까지 26년이 소요되어, 일본 37년, 프랑스 157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Aging in place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다원화 필요
 -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의료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 집적 등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정비 요구



[그림 2-9] 한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1970~2040)

자료 : 통계청, 2014, 장래인구추계

3)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한다』, 한울, pp.34~46;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pp.15~26을 참고하여 재정리.

■ 스마트화(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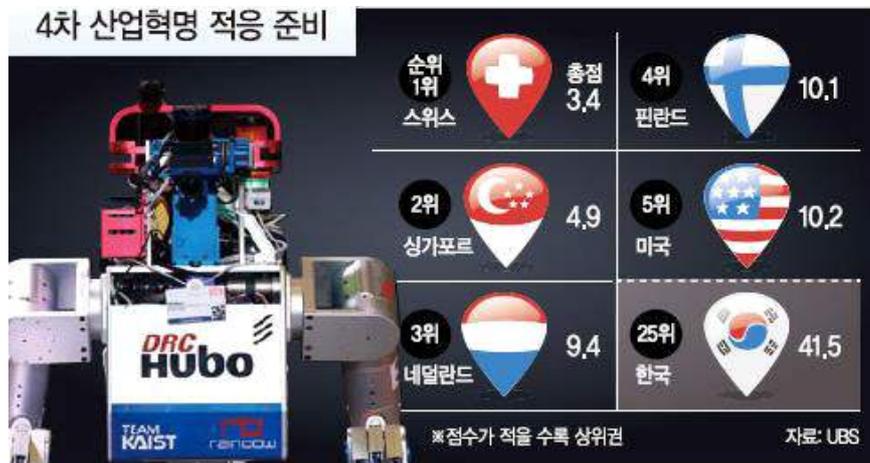
-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제조업 기반의 기술 혁신 추진

[표 2-12]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주요 전략

국가	주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미국	-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첨단제조업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독일	-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Industry 4.0' 을 발표 ·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추진
일본	- 일본산업부흥전략, 산업 경쟁력강화법 · 비교우위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육성 및 확보체계 개혁, 지역혁신
중국	-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진화 전략 '제조업 3.0' 을 발표 · IT 융합,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제조업 소프트 파워 강화 등

자료 :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05호, 2016.8.12., 현대경제연구원, p.2 재구성

- 우리나라는 기존 성장방식에 한계, 신성장동력에 대한 요구 증가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낙수 효과에 기반한 한국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특정 산업·기업이 성장해도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
 - 고령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주된 성장 동력이었던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면서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전망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과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할 필요



그래픽디자인: 박지영

[그림 2-10] 국가별 4차산업혁명 대비 수준 (한국 2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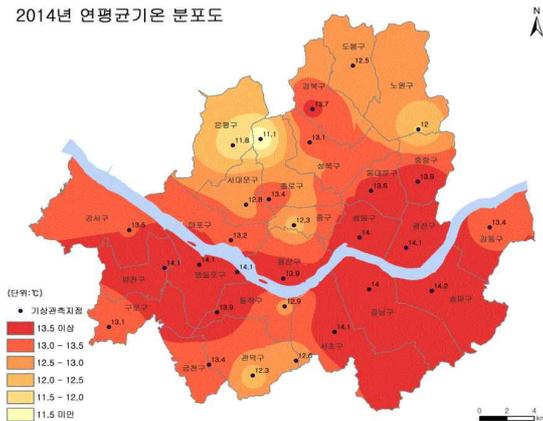
자료 : "노동유연성 83위... 개혁 지금 안하면 4차산업 '낙오'" (헤럴드경제, 2016.1.20)

-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융·복합 도시공간 수요에 대응 필요
 - 사물인터넷(IoT), 사용자 맞춤형 기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과 도시공간의 융·복합 수요에 대응할 필요
 -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도시관리의 효율성 증대,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기후변화

- 평균 기온 상승
 - 2016년 서울시 폭염특보 기간은 총 41일로, 최고 기온은 36.6℃
 - 2001~2010년 서울의 평균 기온은 13.0℃로 1970년대(11.9℃)에 비해 약 1℃ 상승하였으며, 2011~2040년 서울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0.6~0.8℃이상 상승한 13.6~13.8℃로 전망⁴⁾
-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국지적 폭우·폭설도 증가
 - 지난 40년간 서울시 연 강수량 1970년대 1,276.5mm에서 2000~2009년 1,464.5mm까지 증가
 - 강수일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7~8월 강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여름철 집중 강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도시로의 전환 요구
 -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개편과 역세권 고밀개발 필요성 대두

2014년 연평균기온 분포도



[그림 2-11] 2014년 연평균 기온 분포도

자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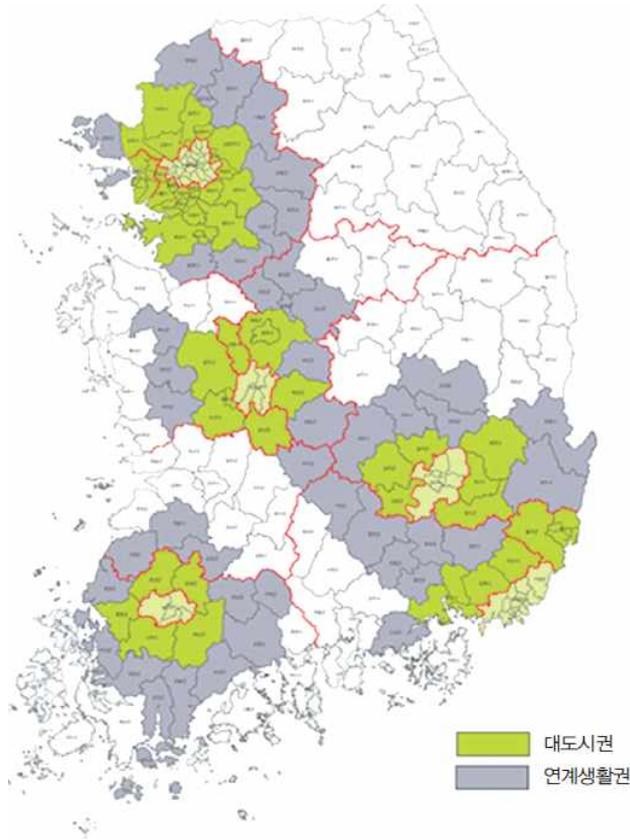
[그림 2-12] 2010.9.21. 서울시내 집중호우(259.5mm/일)

자료: 기상청, 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서울」, p.102.

4) 기상청, 2012, 「서울·인천·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pp.10~11.

■ 광역화

-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세종, 대구, 부산·울산, 광주 등 5개 대도시권 형성⁵⁾
 - 서울 인구나 산업경제 기능은 서울대도시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대도시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 인구의 공간적 분포는 5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되는 경향
- 아산시 '성장'의 계획적 수용 필요
 - 아산시는 2030년까지 인구 증가 및 시가지 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성장 압력을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기반시설 공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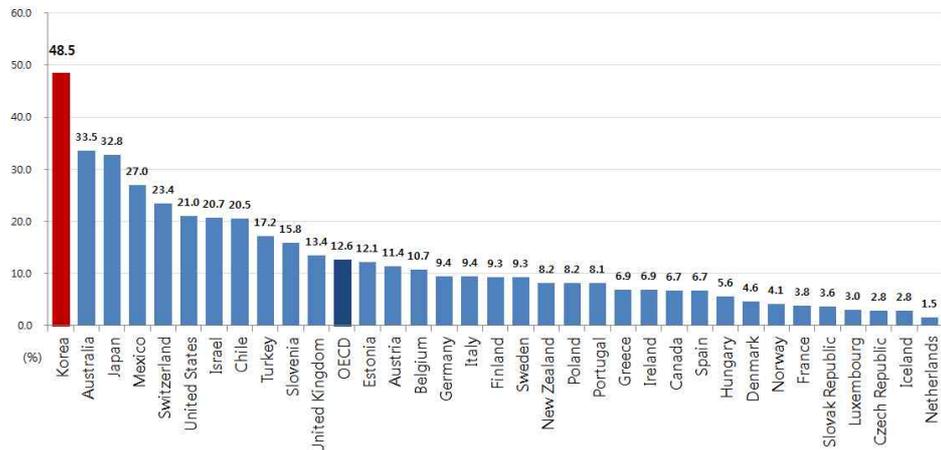
[그림 2-13] 5대 도시권 중심의 대도시권화

자료 : 경기도, 2015,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연구」, p.137.

5) 박세훈·정윤희·박근현, 2013, “도시인구 감소 실태와 도시계획 대응방안”, 《국토정책브리프》, 422호, 국토연구원; 경기도, 2015,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연구」, p.130~137;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pp.371~373.

■ 사회적·공간적 양극화⁶⁾

- 저성장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우려
 - 소득과 고용 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로 빈곤층은 늘어나고 중산층은 감소하는 경향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⁷⁾는 1990년 0.266 → 2010년 0.315로 증가
- 특히 노인층이 직면하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5%(2012년)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일본 32.8%, 미국 21.0%, 영국 13.4%, 프랑스 3.8% (OECD, 2016: 57)



[그림 2-14] OECD 회원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주 : 2012년 또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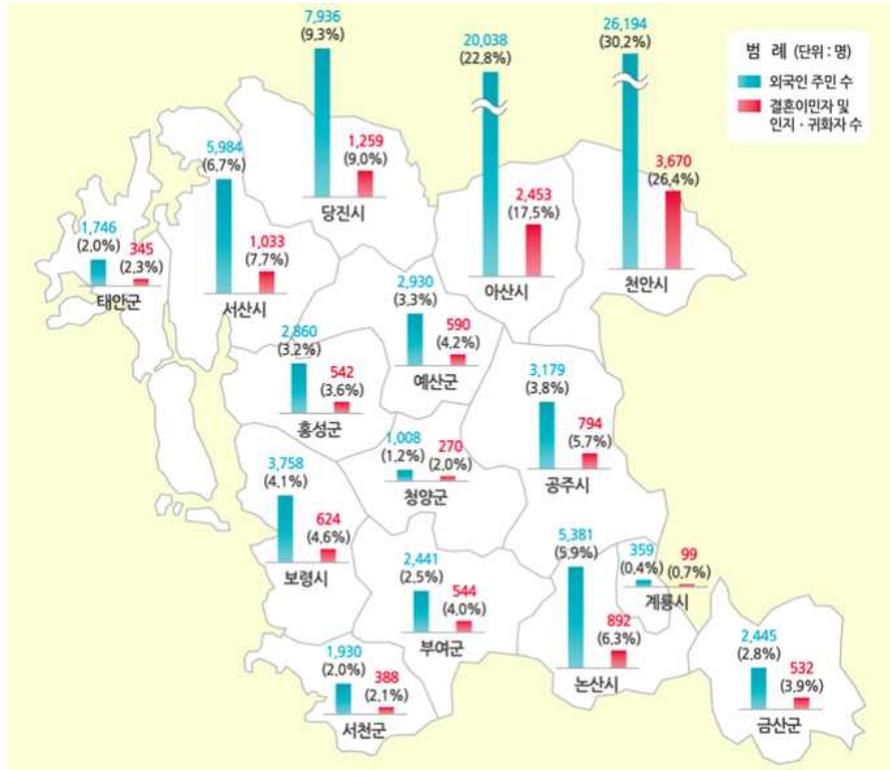
자료 : OECD, 2016. "Poverty rates and poverty gaps", OECD Factbook 2015-16, p.57.

- 성장에 따른 사회적·공간적 불평등에 대응 필요
 - 2015년 충남 전체 외국인수는 8.8만 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규모
 - 충남도 내 시군별로는 천안(2.6만 명), 아산(2.0만 명), 당진(0.8만 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⁸⁾
 - 한편 2010년 충남의 빈 집은 약 6.6만 호이며, 이 중 1.6만 호가 일부 또는 절반 이상 파손된 집으로 주거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아산시의 빈 집은 0.9만 호 규모로 충남 전체 빈 집의 13.3%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지역의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

6)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한울, pp.52~57;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pp.15~17을 참고하여 재정리.

7)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임

8) 임준홍 외, 2016, 『충청남도의 빈집 실태와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 충남연구원, pp.54~63.



[그림 2-15] 충남 시·군별 외국인 주민 수

자료 : 충남연구원, 2017.11.13, 충남 외국인 주민현황,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스 35호

■ 분권화⁹⁾

- 지방자치제 도입 20여 년 경과,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용 필요
 - 1994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도시행정·계획에서 벗어나 상향식 도시계획 추진 중
 -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활성화하는 등 서울형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
- 제한적인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권한¹⁰⁾
 - 복지비 등 행정수요 및 예산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는 데 비해, 중앙-지방 간 세수 구조 불균형(수입 8:2, 지출 4:6)으로 재정자율권은 부족한 실정

9)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한다』, 한울, pp.52~57;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pp.15~17을 참고하여 재정리.

10) “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5.7.22.)

2. UN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¹¹⁾

■ 전세계적 도시의제를 제시한 제3차 UN 해비타트

- 2016년 UN 해비타트에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권(Right to th C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 및 인간정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시의제’¹²⁾를 채택
 - 기존의 주거문제 위주에서 도시정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거 및 도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림 2-16] 역대 해비타트 회의 의제와 주요결과

자료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UN 해비타트III 배경 및 주요결과, p.5.

-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대응
 - UN 해비타트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라는 핵심 과제에 주목하였음
 -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 따르면 2050년 세계 도시 인구는 현재의 약 2배가 될 전망이며, 도시화는 21세기의 가장 변혁적인 트렌드(Transformative Trend)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는 주택, 기반시설, 기초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안전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대한 도전과제임

11) 서울시,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 도시변화진단」의 이슈리포트 내용을 요약·재정리한 것임

12) 새로운 도시의제는 총 175개 조항으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를 위한 키토선언(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 과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Quito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w Urban Agenda)’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도시의제 주요 내용

- 새로운 글로벌 도시비전 ‘모두를 위한 도시’
 - 키토 선언에서는 ‘도시권(Right to the City)’ 을 의미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를 공유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평등한 권리, 포용적인 도시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가별 여건을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주민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음
- 포용도시와 회복력 있는 도시 강조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공약’ 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통합적 도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수단 제시
 - **[사회적 측면]** 도시빈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도시화가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포용도시로의 전환 강조
 - 특히 소득계층을 고려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차별 없는 물리적·사회적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 강화, 특히 차별 없는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강조
 - 영세 및 중소기업의 지원, 빈곤층·여성·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을 강조
 - **[도시계획 측면]** 복합개발, 자연 자원 및 토지관리 개념을 반영한 도시공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을 우선하는 공간개발 전략 권장
 - **[환경적 측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 강조
 -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기술발전을 통한 스마트도시화,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개발,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 등을 제안
-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을 위해 ① 도시거버넌스 구축, ② 도시 계획 및 관리, ③ 이행 수단 등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
 - **[도시거버넌스 구축]** 포용적이고 이행가능하며 참여적인 도시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를 이행할 것을 제안함
 -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력 도모,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 강조
 - 또한 국토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 연령 및 성을 고려한 참여적 계획 수립 등 제시
 - **[도시 공간개발 계획 및 관리]** 주로 도시계획, 공간개발, 주택정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단기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결과간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인 계획 수립 강조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다원화(Polycentrism), 적정밀도와 연결성(Appropriate Density and Connectivity), 공간의 복합적 이용(Multiple Use of Space), 교통 및 이동(Transport and Mobility)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특히 문화(Culture)와 문화유산(Culture Heritage)을 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공간개발은 도시재생을 우선으로 하고, 계획적 도시 확장 및 충전식 개발을 통해 도시 난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도록 함
-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위한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Mixed Income),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의 개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의 확충 등을 강조
- [이행수단] 국가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 및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배분, 각종 기금 및 펀드 활용 등을 제시
-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의 모니터링
 - ‘후속조치 및 검토’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

■ 한국 도시정책에 주는 시사점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방향 지향
 - ‘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 등 키토 선언의 구호는 도시화의 혜택을 모든 도시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표방하고 있으며, 도시화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촉구
 - 새로운 도시의제가 ‘포용도시’로 대변되는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보완·강조되었지만, 도시의 지속가능성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지향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 강조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한 기제로서 도시계획의 중요성 강조
 - 도시화에 따른 편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 제안
 - 2015년 해비타트에서 발간한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도시계획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합의·도출한 도시계획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3. 최근 도시정책 패러다임 동향¹³⁾

- 한국 사회는 저성장,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
 - 양적 성장 중심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성장위주 도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저성장, 고령화, 스마트화, 분권화 등 여건 변화 속에서 포용적이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성장과 개발속도의 정상화 과정)

13)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한다』, 한울, pp.348~349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저성장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 ‘생활도시(Livable City)’, ‘포용도시(Inclusive City)’, ‘공유도시(Sharing City)’, ‘압축도시(Compact&network City)’, 건강도시(Healthy City) 등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지향 필요



[그림 2-17]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

■ 생활도시(Livable City)

- 저성장기 우리 사회는 성장사회가 아니라 성숙사회를 지향
 - 일본에서는 ‘성숙사회’ 를 양적 확대만 추구하는 경제성장에서 정신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정의
 - 도시정책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과밀해소, 혼잡완화, 직주근접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
-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도시(livable city)
 - 시민(생활자)의 관점에서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
 -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가장 중시하여 생활하기 편리한 활기찬 도시를 실현
- 지역생활권별 특성에 맞게 생활서비스의 유연한 공급 필요
 - 지금까지의 생활서비스는 행정구역별 인구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초점을 맞춘 차별적인 공급 계획과 기준 필요

- 2012년 서울시, 도보권 내 각종 공공시설 체계적·종합적 공급 위해 추진
 - 시민들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즉 도보권 내에서 도서관, 소공원, 생활체육시설, 문화 시설,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
 - 기존의 공공시설이 특정 지역에 대규모 시설로 공급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 간 사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 전역에 소외지역이 없도록 함
 - 2012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을 대상으로 시범 공급계획 수립,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25개 자치구에 필요한 시설을 골고루 공급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공공지, 체비지 등을 활용한 공공편의시설 공급 유도
 - 이용률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민간시설, 활용가능한 공공공지와 체비지 등 자투리 국공유지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 시행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편의시설 공급 유도
- 2014년 ‘서울정책지도’를 통해 시설별 우선 설치지역 도출, 정책평가에 활용¹⁵⁾
 - 2014년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전수 조사(1만 4천여 개소)
 - 시설별로 연령별 인구밀집도, 도보접근권역도, 향유도, 수요예측도 등을 분석하여 균형적인 시설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우선 설치지역 도출
 - 예) 도서관 : 광진구 구의동·자양동 일대 등 13개구 22개동이 우선 설립 필요지역으로 도출

■ 포용도시(Inclusive City)

- 저성장기 사회적·공간적 격차의 심화 우려
 - 우리 사회는 저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성장과 과도한 개발이익 추구에 따른 부작용 경험
 - 경제적 불평등은 저소득층, 장애인, 세입자,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저성장기 한국 사회에서는 향후 사회적, 공간적 배제가 심화될 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 실현
 - 저소득층, 장애인, 세입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 필요

14) “서울시, ‘걸어서 10분 거리’ 에 공공시설 골고루 확충” (서울시 보도자료, 2012.3.23.)

15)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4426>)

-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의·직·주(醫職住) 근접 실현 필요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
 -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여 저소득층·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지역 거점에 공급하여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공급 필요

사례 서울시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2014~2018' 16)

-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2014)
 - 다문화시대, 다같이 일구는 다양성의 가치' 라는 의미를 담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함
 - 외국인주민단체 및 시민단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임
-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가치 확산
 -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증진정책을 추진함. 외국인주민인권팀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외국인주민 쉼터를 육성·운영함. 또한 '서울통신원' 등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피해와 차별을 예방함
 -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행사와 이벤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함¹⁷⁾
- 외국인주민 참여가 자유로운 선진 다문화도시 지향
 - 2015년 국적별·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는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주민과 성장을 공유
 - 외국인주민이 경험하는 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를 확충하고, 한국어교육을 온라인·모바일 등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축함
- 외국인주민의 역량 강화
 - 서울시민으로서 알아야할 기초적인 법·질서 등을 교육하는 '시민되기 아카데미' 를 운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교실 운영 및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를 개최함

16) "외국인주민 40만 시대「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서울시 보도자료, 2014.5.9.)

17) 공무원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민간재원을 활용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등 추진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



[그림 2-18]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의 비전

자료 :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 (서울시 보도자료, 2014.5.9.)

■ 공유도시(Sharing City)

- 저성장기 사회적 연계를 통해 한정된 자원 공유 필요
 - 공유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고도성장기 자원의 독점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 공동체, 지역기반 네트워크에 기초한 공유도시(sharing city) 지향
 - 공유都市는 시민과 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실현
 - 지역 기반의 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확충
 - 철도, 터미널 등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공공 공간을 확충할 필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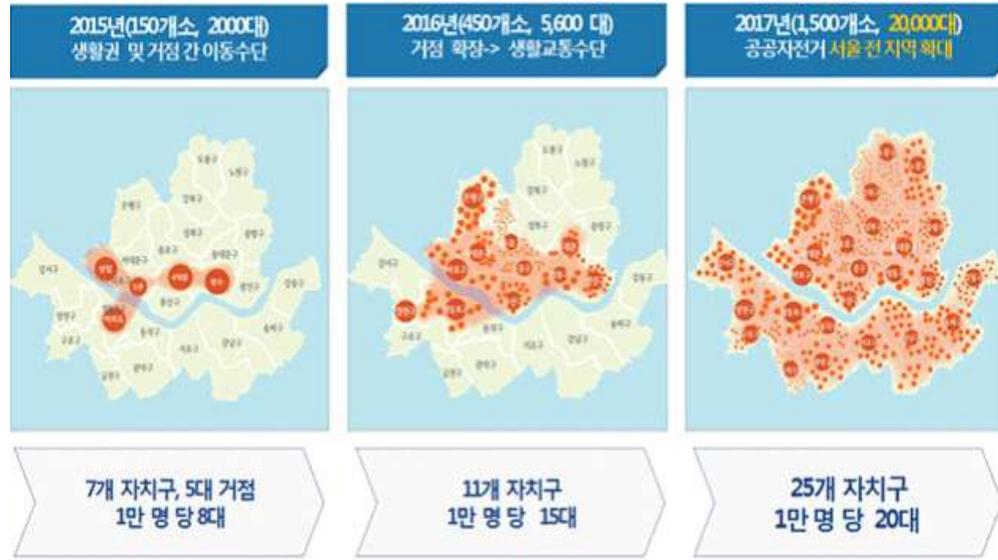
‘공유도시 서울’ 정책 추진

-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 선언 및 ‘공유 촉진 조례’ 제정(2012.12.)
 -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복지, 환경, 일자리 등 급증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대여소 450개소), 나눔카(1,922대), 주차장 공유(3,000여 면), 세어하우스, 공공시설 개방(1,007개) 등 공유 프로그램 운영 중임¹⁸⁾
 -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가능한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가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¹⁹⁾

- 2015년 9월 지역 여건과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여의도, 신촌, 4대문안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따릉이 서비스 시작, 2016년 기준 총 11개 자치구에서 450개 대여소 운영 중
- 서울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유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따릉이’ 1위 차지²⁰⁾
- 2017년 하반기 시민 1만명 당 공공자전거 20대 수준, 대여소 간격 500m 이내 기준을 적용, 2만대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

※ 참고 : 파리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 ‘벨리브(Velib)’ 23,600대 공급(2016년 기준)



[그림 2-19] 서울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급 현황

자료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대 시대 연다” (내 손안에 서울, 2017.3.20)

○ 민-관협력 코워킹공간 운영 : 신림 아지트(AZIT) 사례²¹⁾

- 신림 아지트(AZIT)는 2014년 10월 개설되었으며, 관악구청과 사회적기업 어반하이브리드(URBANHYBRID)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 지역 내 경로당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소규모 기업, 지역 활동가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모임, 강의, 문화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1인기업,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회의·업무 등을 위한 코워킹 업무공간 제공
- 지역 자원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활동 지원

18)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sharecityseoul/>)

19) “강동구 22곳·강서구 42곳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본격 확대운영” (서울시 보도자료, 2017.4.26.)

20) “따릉이 ‘타보니 좋더라’ ,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내 손안에 서울, 2017.7.31.)

21)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 사회적기업 어반하이브리드 홈페이지(<http://urbanhybri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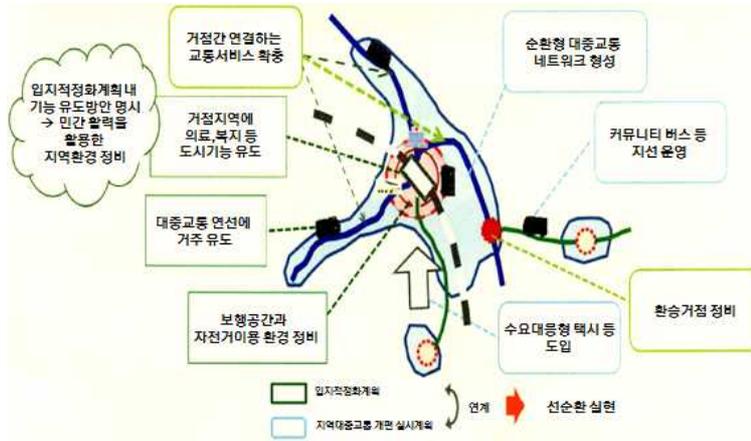
■ 콤팩트·네트워크 도시(Compact & Network City)

- 저성장기 다양한 기성시가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저성장기에는 고도성장기와 같이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의 팽창적 개발, 외연적 확산 불가능
 -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수법을 적용하고, 한정된 토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지향
 - 콤팩트한 거점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도시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compact & network city) 지향
-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중심지 육성
 - 도시공간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
 -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고밀·효율화하여 장거리·교차 통근을 줄이고 업무·상업·문화 등 중심기능을 집적

사례 콤팩트+네트워크 마을만들기를 위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 입지적정화계획의 도입배경과 의의
 - 일본 전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가 맞물리면서 고도성장기에 집중 공급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거점에 유도하고, 지역 교통네트워크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추진
 - 일부 기능이 아닌 주거 및 의료 복지, 상업, 대중교통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을 고도화 함
 - 지방재정 악화와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에 당면하여 공공시설의 재배치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민간기능 유도
-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 지정²²⁾
 - '도시기능유도구역' 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상업·대중교통 등 도시 기능을 집적시키고,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그 주변은 '거주유도구역' 으로 지정, 적절한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

22) 国土交通省,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2015.6.1. 발표자료)



[그림 2-20] 입지적정화계획의 개념도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に基づく立地適正化計画



[그림 2-21]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 지정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に基づく立地適正化計画

■ 건강도시(Healthy City)

- WHO의 '건강도시'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²³⁾
-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건강'을 핵심 요소로 설정
 - '건강도시'는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해 도시개발에서 '건강'을 핵심적인 요소로 설정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의미함²⁴⁾

23)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

24) 김용창,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편익의 공유 도시”,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한울, pp.74~75.

- 도시 내 빈곤,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 주거지 노후화, 참여의 감소, 환경파괴 등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는 ‘건강’ 요소를 소극적으로만 고려하였음
- 건강도시에서의 ‘건강’ 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의미임
-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양호한 주거환경, 고용·업무환경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개선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사례 서울시와 강동구 건강도시 운영 사례

- 서울시 :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사업 (2015)²⁵⁾
 - 인구 10만, 3~4개 행정동 규모의 생활권단위로 건강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집단별 발생하는 건강격차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생활권단위로 건강 관련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건강공원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사업,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위해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건강 검진율 향상 사업, 노인건강문제 개선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함
 - 2015년 2월부터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며, 생활권별 건강의제 발굴 → 건강문제 분석 및 진단 → 주민 소모임 발굴 및 조직화 등 추진 중임(2015년 말 기준)
- 강동구 :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지향²⁶⁾
 - 2016년 ‘강동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였으며,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건강거버넌스 구축,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등 6대 전략과 20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2-22) 참고
 -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 목표를 ‘좋은 도시 거버넌스’ 로 설정하고 주민 주도의 건강도시 조성을 추진함
 -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 마을공동체, 생활체육회 등 각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독려함
 - 구에서는 건강도시추진단(TF)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주요 추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① 건강도시 정책인프라 구축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사업 등 추진
 - ②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선도적 추진 : 건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활동적이고 건강한 학교 및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신체활동 증진 도모
 - ③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등 추진
 - ④ 국내외 건강도시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25) 문은숙·서명희, 2015,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pp.158~164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26) 강동구는 2007년 건강도시 최우수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건강한 어린이터), 2008년 ‘건강도시 강동’ 선포 및 2011년 ‘건강도시팀’ 을 신설하였음 (강동구 홈페이지, <http://www.gangdong.go.kr/>)

[표 2-13] 서울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

목표	- 소생활권 단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 주민 주도의 건강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내용	소생활권 건강 네트워크 - 주민주도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 - 건강분야 민간지원 개발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지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다각적 문제 접근 - 도출된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건강지원 공유창구 역할
	↑ ↑ ↑
지원 사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지원단 '주민참여 건강증진(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팀' -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건강네트워크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지원 등

자료 : 문은숙 · 서명희, 2015,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p.159.



[그림 2-22] 건강도시 강동의 비전과 목표(6대 전략과 20개 실천과제)

자료 : 강동구, 2017, "건강도시 리플렛" .

4. 시사점

- 지금까지 한국 도시가 직면한 도전과제, 제3차 UN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의제, 최근 도시정책 패러다임 등을 살펴본 결과, 향후 한국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패러다임은 생활도시, 포용도시, 공유도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건강도시 등 크게 다섯 가지 도시 상으로 요약됨
- 첫째, 수요자인 시민(생활자)의 관점에서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도시기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둘째,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저성장, 고령화 등은 사회적·공간적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세입자,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과 도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새로운 도시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도시’를 지향해야 함
- 셋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에 기초한 ‘공유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공유도시는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자 하는 시민 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
- 넷째, 새로운 도시정책은 도시공간을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사회·경제활동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건강도시’를 지향해야 함. 지자체와 관련기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찬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4 아산시민의 행복결정 요인

■ 분석방법

- 아산시민 행복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충남사회지표조사(2017년, 2017년) 자료를 활용함
- 개인의 행복감에 대한 결정요인은 관련 선행연구(임준홍·홍성효(2014))에서의 모형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함으로써 실증적으로 분석함

$$happiness_j = \alpha_0 + Z_j\zeta + \epsilon_j \quad (1)$$

- 종속변수인 $happiness_j$ 는 개인 j 의 행복감에 대한 자기-보고식 점수(0점 : '전혀 행복하지 못함' 부터 10점 : '매우 행복함' 까지의 11점 척도)에 해당
- Z_j 는 개인의 속성-즉, 남성 여부, 연령과 이의 자승, 학력수준, 혼인상태, 종교 유무, 질병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실업 여부 등-을 포함하고,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냄
- 연도별 지역별 회귀분석결과는 시점 간 그리고 지역 간 개인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차이가 있음
- 아산시와 충남 전체를 비교하면 2012년의 경우 질병 유무와 월평균 가구소득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충남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 행복도가 크게 하락 하지만, 아산시의 경우에는 질병의 행복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Easterlin (1974)의 결과에 의하면 4백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행복도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충남의 경우, 가구 소득의 상승이 행복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산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2017년은 2012년 대비 아산시와 충남 전체의 행복도 결정요인의 상이성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과 혼인상태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점 간 비교에서는 2012년에 비해 최근에 실업 여부와 질병 유무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보다 커진 것으로 파악
 - 2012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도가 미혼과 사별, 이혼의 순으로 높았으나 2017년은 미혼이 사별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분석²⁷⁾

27) 2017년에는 질병의 유무에 대한 문항 대신에 주관적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물으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를 질병이 있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로 인해 해당 변수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두 연도 자료에서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아산시민 행복도 결정요인의 두 시점 간 변화를 충남 전체의 해당 변화를 고려한 상대적 변화로 재해석하면, 아산시민들에게 있어 최근에 학력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이 행복의 실감에서 보다 중요해졌고, 종교에 대한 영향은 작아진 것으로 분석
- 특히, 고학력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고소득의 경우, 충남 도민 대비 아산시민의 행복도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높아짐

[표 2-14]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결과(개인의 속성)

구 분	2012		2017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남성	-0.0255	-0.0078	0.023	-0.082**
	(-0.37)	(-0.31)	(0.31)	(-2.95)
연령	-0.0312*	-0.0269**	-0.034*	-0.033**
	(-2.40)	(-6.02)	(-2.43)	(-6.78)
연령 상승	0.0003*	0.0002**	0.000+	0.000**
	(2.18)	(5.63)	(1.78)	(6.40)
학력수준				
고등학교 이하	-0.2919**	-0.2948**	-0.201*	-0.373**
	(-3.82)	(-9.64)	(-2.22)	(-10.72)
대학원 이상	0.3961+	0.4270**	0.829**	0.668**
	(1.66)	(4.78)	(2.99)	(6.9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0.5042**	0.4853**	0.610**	0.535**
	(4.26)	(9.99)	(4.65)	(10.04)
사별	0.0749	0.0626	0.366+	0.220**
	(0.41)	(0.96)	(1.85)	(3.19)
이혼	-0.3201+	-0.3918**	0.003	-0.209*
	(-1.73)	(-4.36)	(0.01)	(-2.49)
종교 있음	0.2323**	0.2066**	0.104	0.185**
	(3.51)	(8.45)	(1.36)	(6.79)
질병 있음	-0.0451	-0.1418**	-0.719**	-0.815**
	(-0.54)	(-4.93)	(-6.18)	(-21.40)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6942**	-0.3270**	-0.231	-0.298**
	(-5.30)	(-7.08)	(-1.42)	(-5.35)
1~2백만원	-0.3805**	-0.2620**	-0.357**	-0.332**
	(-3.62)	(-6.47)	(-2.79)	(-7.23)
2~3백만원	-0.3291**	-0.1873**	-0.206+	-0.088*
	(-3.42)	(-4.79)	(-1.77)	(-2.03)
4백만원 이상	-0.1153	0.1189**	0.190+	0.171**
	(-1.09)	(2.83)	(1.75)	(4.12)
실업	-0.3256*	-0.2880**	-0.792*	-0.773**
	(-2.50)	(-6.56)	(-2.49)	(-7.19)
상수항	6.9930**	6.9370**	6.853**	7.040**
	(27.01)	(73.84)	(23.55)	(65.09)
관측수	2,791	28,628	2,701	27,276
Adj. R-squared	0.0634	0.0521	0.0888	0.090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개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됨

- 개인의 행복도에서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식 (1)에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회귀식에 포함할 수 있음²⁸⁾
 -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산시민들에게 있어 의료시설 접근성, 대기의 질, 이웃에 대한 신뢰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행복도 증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고 문화예술시설이나 문화여가활동의 절대적 중요성은 비록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함

[표 2-15]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결과(영역별 중요성)

구 분	2012		2017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문화예술시설/문화여가활동	0.0508* (2.52)	0.0825** (11.63)	0.018* (2.01)	-0.001 (-1.51)
의료시설 접근성	0.0426** (2.66)	0.0676** (12.17)	0.209** (4.37)	0.034** (3.35)
대중교통(버스)/전반적인 대중교통	0.0380* (2.23)	0.1141** (16.66)	0.009+ (1.94)	0.003** (4.30)
대기의 질	0.1198** (6.61)	0.1227** (20.66)	0.123** (3.54)	0.049** (3.23)
안전(자연재해)	0.0979+ (1.86)	0.0691** (6.45)	0.016 (1.46)	-0.003 (-1.15)
전반적인 가족관계	0.3802** (19.67)	0.3906** (57.13)	0.057 (1.41)	0.020** (5.65)
이웃에 대한 신뢰/ 지역에 대한 소속감	0.0944* (2.43)	0.1573** (6.50)	0.400** (7.98)	0.104** (4.1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개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시하지 않음

28)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삶을 구성하는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고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에 자료의 보완을 통해 시도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함의

- 시민의 행복도 개선은 행복이 개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최종 성과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많은 정책대상 가운데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주관성, 심리학적 접근, 개인 차원의 영역으로 간주됨으로 인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못함²⁹⁾
- 하지만, 최근에는 OECD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부탄 등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증진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통계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주시, 인천시의 부평구 등을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복 혹은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아산시 역시 시정의 최종 목표가 시민의 행복증진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아산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됨. 비록 경제적 취약계층과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취약계층 간 상당부분이 중첩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을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식별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정책이 물질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음
- 하지만,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결과(Boarini et al., 2012)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웰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웃에 대한 신뢰이며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정책의 추진보다는 비물질적 정책의 추진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아산시 역시 적어도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기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행복 혹은 삶의 질을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적 시각에서 변화가 이뤄지면, 부탄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와 같이 정책의 평가기준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포함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시책의 마련이 뒤따라야만 행복증진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작용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음

29) 한편, Krueger and Schkade(2006)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기-보고식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과 같은 객관적 변수 못지않게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조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

아산시 비전설정

3.1 비전설정을 위한 사전 탐색

■ 아산시 역대 시정비전과 목표

- 아산시의 역대 민선시정 비전과 목표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선3기와 그 이후는 많은 변화가 있음
- 민선3기까지는 성장을 위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면, 4기부터는 ‘시민’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있고, 민선5-6기는 ‘시민행복’이 키워드로 등장함
- 이러한 측면에서 시정 운영방향의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 역대 시정비전과 목표

구분	비전과 목표
민선1, 2기	비전 : 새롭게 도약하는 아산건설 목표 : ① 시민 만족 봉사 행정, ② 창의적인 경영 행정, ③ 개발과 보존의 조화, ④ 교육과 문화의 창달
민선3기	비전 :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목표 : ① 조직문화의 혁신, ② 지역발전 기반구축, ③ 대화협력의 강화
민선4기	비전 :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 목표 : ① 조직문화의 혁신, ② 지역발전 기반구축, ③ 대화협력의 강화
민선5기	비전 : 시민이 행복한 아산 목표 : ① 지속가능 한 성장기반 구축, ② 수준 높은 교육·문화도시 건설, ③ 따뜻한 복지실현, ④ 깨끗한 시정 구현
민선6기	비전 : 시민이 행복한 아산 목표 : ① 시민만족 우선, ② 동반성장 추구, ③ 지속사회 구축, ④ 시민공감 실현

■ 언론으로 본 아산시 이슈와 관심

- 최근 3년 간 언론에 비친 아산시의 주요 관심과 이슈를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아동’, ‘시민’, ‘교육’ 등 사람 중심의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음

■ '시민이 행복한 아산' 위한 민선5-6기 노력

- 아산시는 민선5-6기 시정 비전을 '시민이 행복한 아산'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아산시는 '아산시민헌장'과 '아산서비스헌장' 등을 선포함
- 아산시민헌장에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아산의 문화와 예술 계승과 시민생활의 질을 강조함

[아산시민헌장]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공질서와 도덕을 존중하며 공동체의식으로 시민화합을 이룩한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온천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준다.
 전통문화 유산과 예술을 가꾸고 계승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인다.
 창의력 개발과 인재양성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든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산 시민이 된다.

- 아산서비스헌장에서는 시민행복 아산시형을 위한 공직자이 정신과 의지를 담은 것으로 시민의 시정참여와 책임행정을 강조함

[아산서비스헌장]

우리 아산시 공직자 모두는 30만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아산」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설과 환경은 고객이 가장 편리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행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투명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업무처리 착오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나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이러한 아산시민헌장과 아산서비스헌장은 아산시의 정체성과 시민행복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담은 것에서 의미를 지님

■ 민선6기 사업들에 대한 평가

- 아산시의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 15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약 2주간 2회에 걸쳐, 민선6기의 정책과 사업들을 기준으로 아산시 발전과의 관계 등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표 3-3>과 같음
- 표는 편의 상 분류된 8개 분야에 대해 가장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분야별 2개 정책·사업을 제시한 것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향후 아산시 정책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효과도 높다고 사료됨

- 특히, 아산의 대표 지역자산인 은행나무길, 온천과 연계한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영차고지와 마중버스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3] 민선6기 주요사업에 대한 공무원 자체평가

분야	주요내용	중요도(5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문화관광	은행나무길 가로공원(차없는 거리) 조성	4.053	0.9784
	온천산업 활성화 :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온천을 이용한 상품화 / 온천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3.921	1.0035
사회복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의료체계 확충 : 아산총무병원 개원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16.04월) / 탕정 동산보건진료소, 신창보건지소, 송악보건지소 준공	4.333	0.8584
	육아부담 경감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환경 개선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4.079	0.9100
산업경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역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 등	4.137	0.8512
	대기업·중소기업·전통시장 상생협력	3.848	0.9574
교육	도서관 설립 (중앙도서관, 탕정온샘 도서관 등)	4.288	0.7837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전체 초교로 확대	4.026	0.9131
환경	하수도시설 확충	4.092	0.8457
	상수도시설 확충	4.072	0.8307
농업농촌	아산 로컬 푸드(Local Food) 확대 및 활성화	3.974	0.9173
	아산농산물 공동브랜드 내실화 및 마케팅 강화	3.922	0.9071
지역도시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4.150	0.7928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선정 추진	4.007	0.9098
교통	공영차고지 조성 :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용지 조성 / 모종동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 / 복합(화물·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000	0.8192
	마중버스·마중택시 확대	3.908	0.9274

주 :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상위 2개) 상세내용 <부록> 참조

3.2. 비전설정을 위한 키워드 도출

■ 민선5-6기 비전 키워드 “행복”의 지속성 유지

- 전술한 바와 같이 민선5-6기 비전은 과거와 달리 개발보다는 시민 중심, 시민의 삶의 질을 강조한 점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며 성과라고 판단됨. 하지만 민선5-6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행복 관점에서 검토-추진되었다기보다는 아산시 성장이 시민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이 더 가까웠다고 판단됨
- 시정 방향을 시민행복으로 전환하려고 한 의지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행복정책을 시정에 접목하려는 점과 “행복기반”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라고 생각됨
- 이러한 의미와 시정 연속성 측면에서 민선7기 이후에도 “행복”키워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선5-6기가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한 “행복기반 강화”시기였다면, 민선7기 이후는 행복기반을 보다 강화하면서 “행복실감”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전환되길 기대함



[그림 3-2] 아산시 비전과 키워드 “행복”

- “행복” 키워드가 비전으로 유효한 이유는 시민행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성장하는 아산시지만 경제는 무한히 성장할 수 없고, 경제가 성장하여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경제성장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관점임. 즉, 아산시의 존재이유는 시민행복이 되어야 하며, 아산시 행정은 시민행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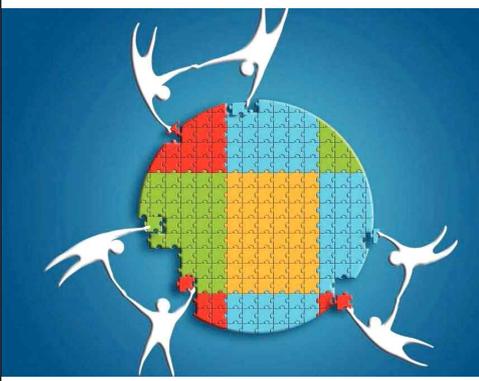
■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 반영한 “포용” 개념 도입

- 전술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기초하여, 향후 도시 아젠다는 전술한 행복 외에 “포용”과 “건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3]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포용”의 개념

- UN-HABITAT는 향후 30년간 도시 아젠다를 “포용도시”로 설정함. 문재인정부 역시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용도시의 핵심적 개념은 다양성과 모두를 위한 도시이므로 아산시의 특성과 잘 부합됨
 - 아산시는 성장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농산어촌도 있으며, 신시가지의 화려함과 원도심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고, 많은 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축소판임. 즉,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 개념이 가장 필요하며, 적절한 개념이라 판단됨

 <p>자료: OECD정책브리프(2013.12.16 제152호 참조)</p>	<p>[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장관회의 결과]</p> <p>OECD는 프랑스의 Malyise Lebranchu 장관 등 OECD 회원국중 27개국의 장관급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1년 기준으로 회원국의 공공투자 중 62%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한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투자: 행동원리”, “지속가능한 도시창조: 국가의 도시정책구조” 등을 주제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포용적 성장방안 등을 논의함</p>
---	---

[그림 3-4] OECD 지역개발 장관회의 : 도시분야 포용적 성장

■ 건강도시의 개념 확대, “건강” 한 지역사회

- 아산시는 이미 WHO 건강도시로 지정되었고, 건강 도시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로고를 확정하여 발표함
- 아산시 비전에서의 “건강”의 개념은 단순한 건강·보건 차원의 건강도시를 넘어,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의미함



3.3 비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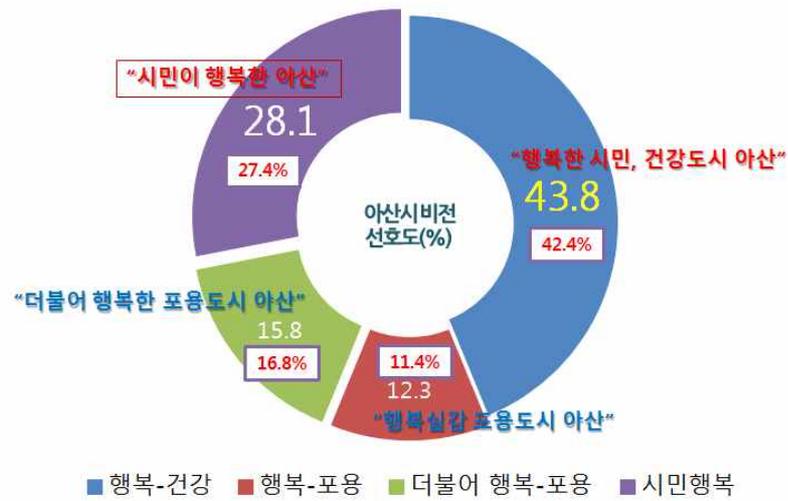
■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비전 도출

- 전술한 3가지 비전 키워드 “행복”, “포용”, “건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비전 대안을 제시함
- 1안은 현재의 아산시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3가지 키워드 중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행복”이며, 시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1안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비전

- 2안과 3안, 4안은 3가지 키워드인 “행복”, “포용”, “건강”과 수식어의 조합으로, 큰 의미적 차이는 없지만 강조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그림 3-7>은 비전에 대해 아산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행정 제일선에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친 후 연구진은 “포용”키워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행복실감 포용도시 아산”을 최적 대안으로 제안함
-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UN-HABITAT가 선정한 “포용도시”가 아산시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 중의 하나로 판단하였고, 민선5-6기가 행복기반강화에 노력한 시기였다면, 민선 7기 이후는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둔다는 의지의 표현임



[그림 3-6] 아산시 비전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

제4장

아산시 비전실천을 위한 전략

- 아산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 체계는 다음과 같이 편의 상 크게 2가지로 구분함. 우선 공간과 환경, 교통 등 물리적·환경적 도시기반 성격은 “행복기반”으로, 경제, 문화 등 비물적 성격이면서 보다 사람과 직결된 분야는 “행복실감”으로 구분함
- 행복기반강화 전략은 도시·지역분야, 환경분야, 안전분야 등이 주로 포함되며, 예시적 전략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기반 강화, 신속한 소통이 확보되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임
- 행복실감강화 전략은 경제, 문화·관광, 복지, 교육 등 영역이며,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산 시민도시만들기 전략 등임

행복기반	행복기반 + 행복실감	행복실감
↑	↑	↑
포용	행복	건강
↑	↑	↑
행복기반 강화 전략	행복실감 강화 전략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기반 강화 시민주도의 협력적 도시재생 신속한 소통이 확보되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안심도시 조성 다가가는 환경복지, 도시숲 조성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지원플랫폼 및 고용지원체계 구축 자립적 연대를 통한 지역단위 작은 경제 육성 안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산 시민도시만들기 미리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등	

[그림 4-1] 아산시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체계(예시)

- 이러한 실천전략 체계와 분야 구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는 실국별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천전략으로 재편하여 제시함
- 하지만 최근 많은 정책들은 분야를 초월해서 융복합적으로 발굴·추진되어야 하므로, 보다 입체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4.1 지역도시분야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

- [전략-시책 체계]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지역·도시 정책을 중점 발굴·추진함
 - 민선5-6기는 아산시 성장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 였다면, 향후에는 시민 행복실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시책 발굴·추진에 역점을 둠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비전(안)인 ‘행복실감 포용도시 아산’ 실행을 위한 전략과 시책 적용의 주요 대상지와 타겟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 지역도시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기반 강화		
[시책 1]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구조 만들기	
[시책 2]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시책 3]	지역도시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전략2 : 시민주도의 협력적 도시재생		
[시책 1]	역사문화가 있는 매력 있는 중심상권 만들기	
[시책 2]	주민주도의 근린재생과 주거지 정비	
[시책 3]	빈집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	
전략3 : 시민 수요응답형 주택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		
[시책 1]	창업·근로자 지원주택건설	국정과제와 연계
[시책 2]	대학협력형 주택건설	국정과제와 연계
[시책 3]	마을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	LH 사업과 연계
[시책 4]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및 활용	국가 시범사업 연계
[시책 5]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작은거점 ‘아이디어 스퀘어’ 조성	

전략 1.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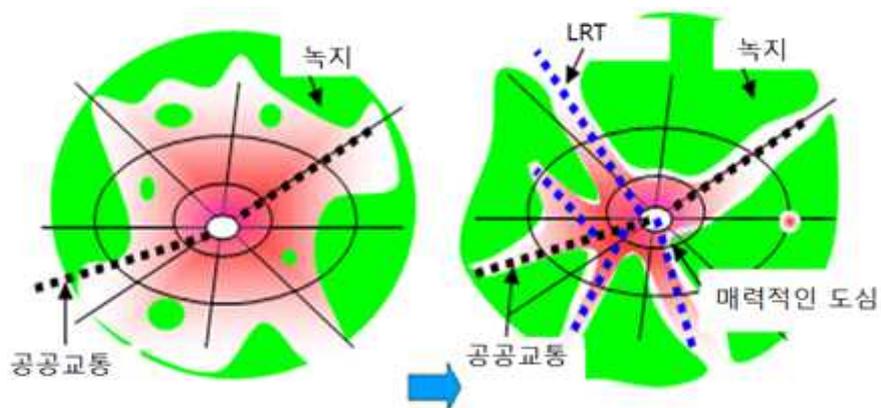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국내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를 넘어 도시가 축소하는 시대에 아산시는 성장하고 있지만,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에 대한 고민과 스마트한 도시성장관리를 준비하여야 함
- [목적] 아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상주인구·직업인구·유동인구 특성 등을 분석하여,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아산시 성장관리정책의 틀과 활용 가능한 자산의 통합적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함

■ 주요 내용

[시책 1]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구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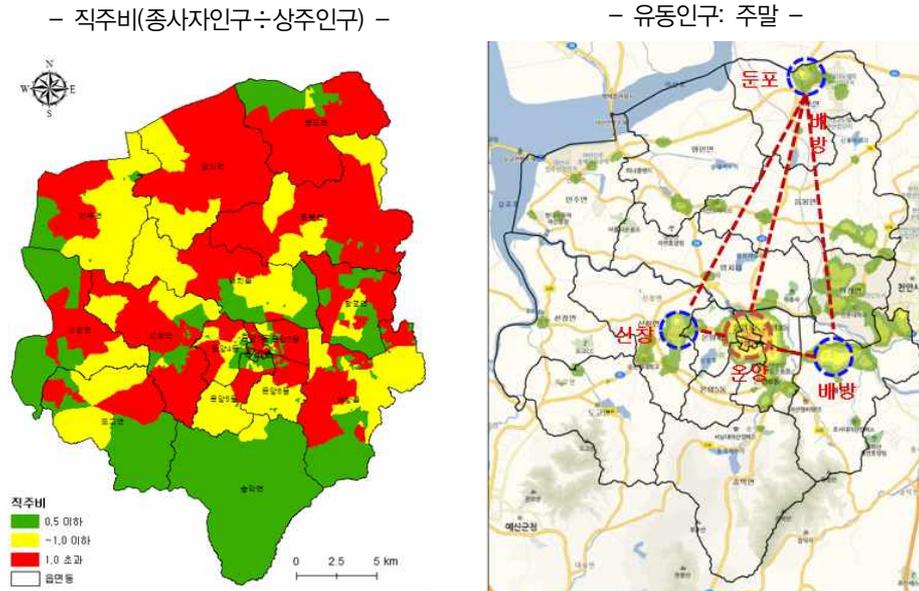
-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65만명의 시민이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아산 만들기”를 제시함
- 65만명의 대도시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단계에서부터 보다 명확한 실천적 도시공간구조 방향을 설정하고, 형성을 유도하여야 함
 - 도시공간구조는 온양을 1핵으로, 아산신도시, 둔포, 인주, 도고, 송악의 5거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황과 도시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하면서 현실적인 도심-부도심-직장중심지의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구조’를 유도·형성함



자료 : <http://penta5404.blog.jp/archives/26658262.html>

[그림 4-2] 지속가능한 콤팩트시티 이미지

- 지속가능한 건강한 아산시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1단계는 도심인 온양은 최근 이슈·강조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온양의 역사·문화와 상권을 강화함
 - 2단계는 배방지역과 둔포지역, 신창지역을 활동성이 강한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3단계는 일자리 중심지역으로
 - 3단계 일자리 중심지역은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직주접근의 양호한 주거지로 개선하여, 지역 정착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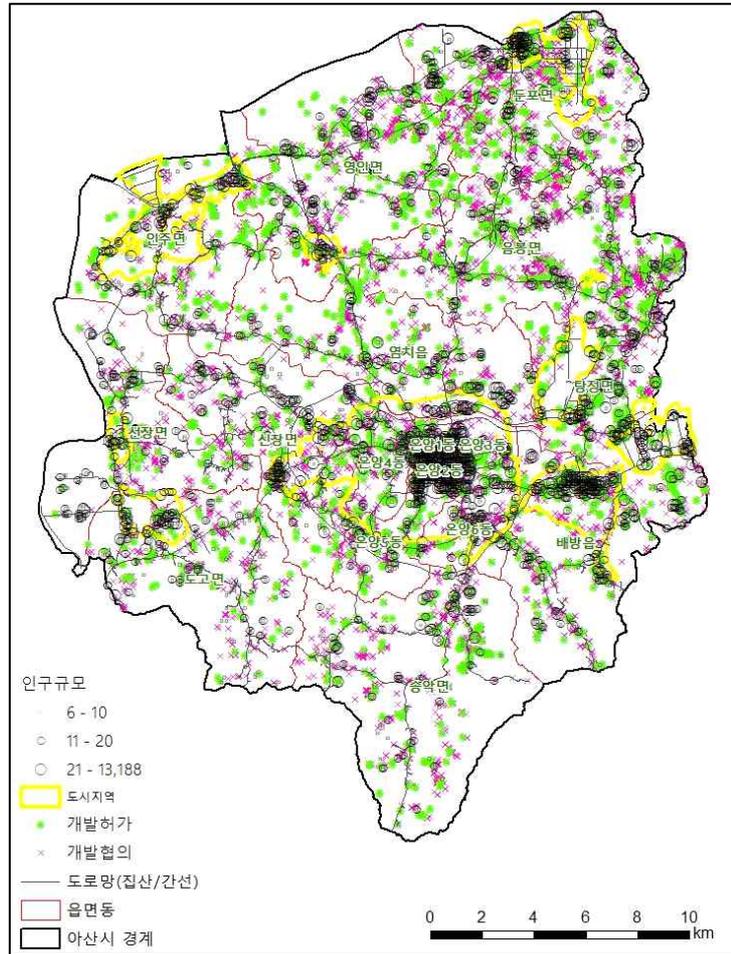


[그림 4-3] 아산시의 공간구조 현황(상주인구와 종사자인구 그리고 유동인구)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이들 지역에 집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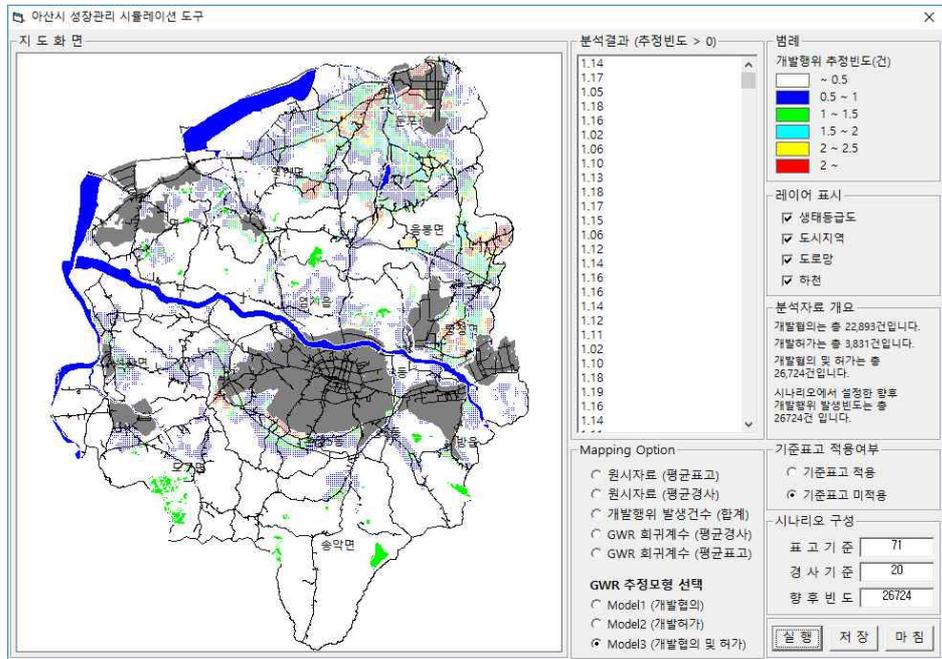
[시책 2]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 충남지역은 아산, 천안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아산시에서 뚜렷하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성장관리 기법 도입이 요구됨
- 도시성장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4-4>와 같이 현재 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난개발 방지 및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도출 등 계량적 분석방법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아산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자료등을 통해 개발행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압력 등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성장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림 4-4] 아산시 개별 개발행위 협의·허가의 공간적 분포

- <그림4-5>는 정책변수로 활용이 용이하고 자료구득이 가능한 두 가지 변수 즉, 표고(변수1)와 경사(변수2) 만을 고려하여 각 변수별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변수 기준을 바꿀 경우 개발행위 발생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임(상세 내용은 부록 참조)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노란색, 붉은색이 강한 지역)들이 북쪽과 동쪽이 비교적 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바탕으로 개발된 ‘아산시 성장관리 시뮬레이션 도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 분석을 통해 난개발 억제 및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 판단을 더하여 성장관리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범례에서 수치가 높을수록(노란색-붉은색)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

[그림 4-5] 아산시 성장관리 시물레이션 도구 개발 및 적용 예시

-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아산시 스마트 성장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구조’를 유도·형성을 위한 토지이용 기본방침도 제시함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존 주거지와 과도하게 이격된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아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역시, 입지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입지하여야 하는 개발과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여 개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개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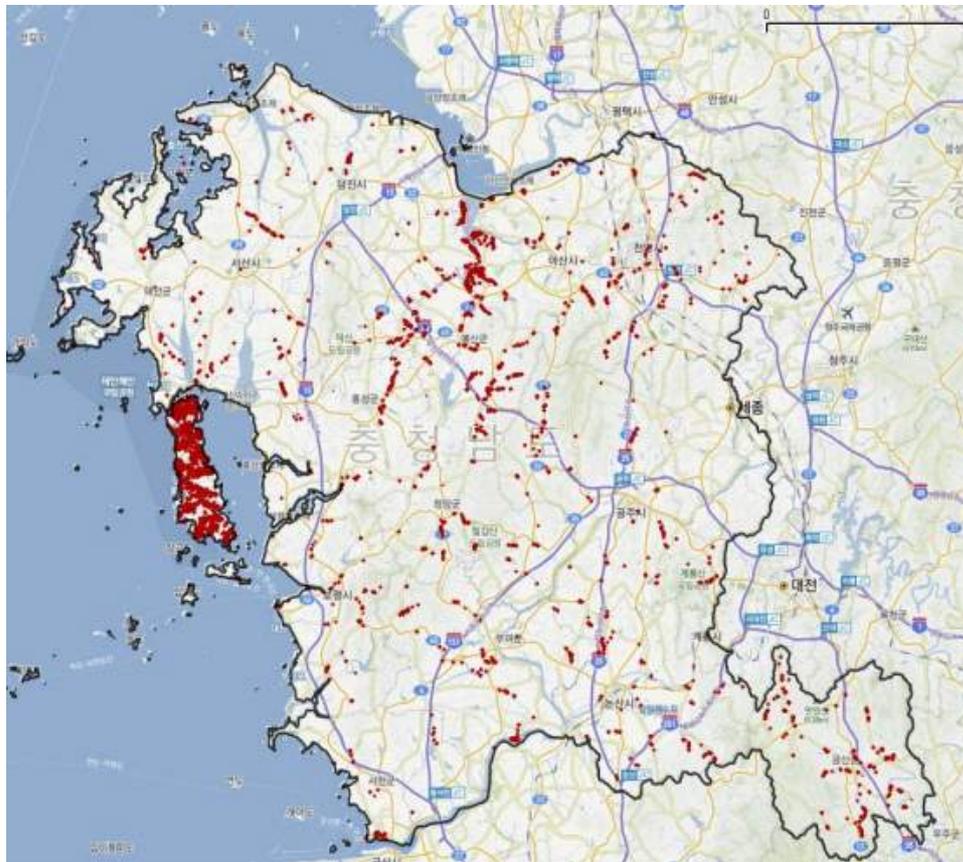
[아산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운영지침] *2018년 아산시 시책구상

- 가. 미개발 부지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 마련
 - 미개발지 및 저이용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성 확보 등 계획적인 수단을 통해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산시 차원의 합리적 대응방향 모색
- 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제도의 법정화(제도화) 방안 제시
 -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마련하여 특허 시비 등의 논란 차단
- 다.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제도 관련 시행지침 수립
 - 검토 및 계획수립 기준 등을 구체적 지침으로 마련하여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시책 3] 지역도시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아산시 자산과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 구축을 통한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아산시의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 즉, 국공유지, 마을자산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통합시스템에 구축하여, 국가-충남도-아산시 각종 마을만들기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541개 부락 재산)와 연계한 자산 활용
 - 아산시 지역경관자원 DB구축 및 경관지도 작성, 기존 도시정보 관련 DB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 활용 강화

[충청남도 소유 유휴필지]



자료 : 충청남도(2015.8), 일반재산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현황조사 연구

[그림 4-6] 유휴토지 조사 사례

전략 2. 시민주도의 협력적 도시재생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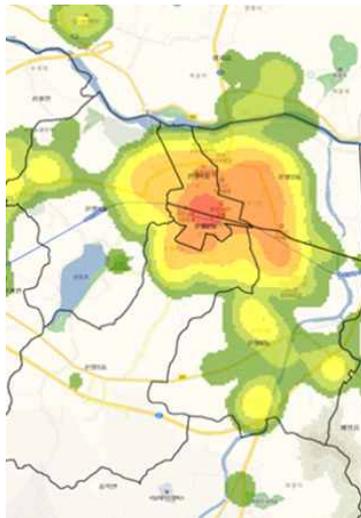
- [배경]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이지만 원도심(온양)과 읍면소재지 등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의 종합적이면서, 시민주도의 협력적 도시재생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목적]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비는 물론 아산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제고함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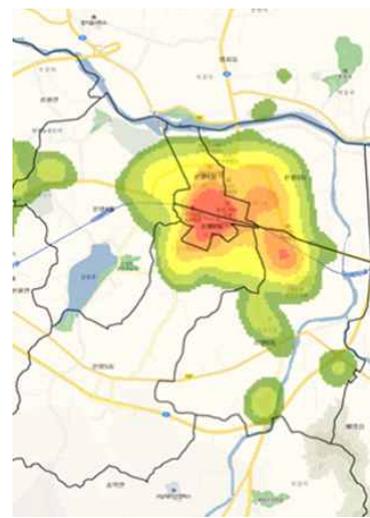
[시책 1] 역사문화가 있는 매력 있는 중심상권 만들기

- 정체·침체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에 대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면서, 중심상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원도심의 하드코어를 대상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온양지역 오전 유동인구]



[온양지역 저녁 유동인구]



[그림 4-7]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책 2] 주민주도의 근린재생과 주거지 정비

- 도시재생 뉴딜에 새롭게 도입된 '주거지정비형', '우리동네살리형'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 중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여건이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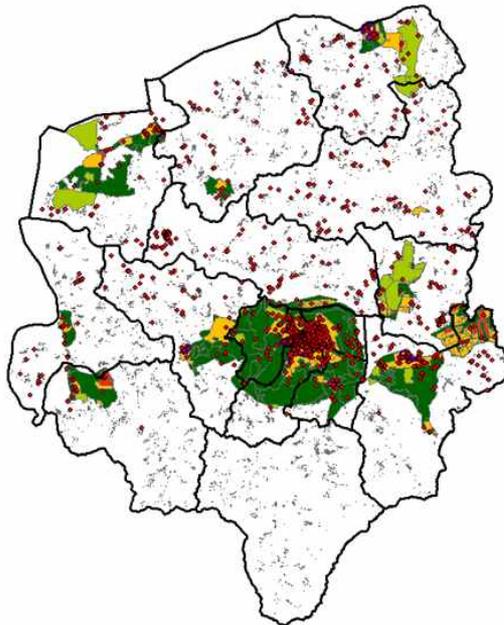
[시책 3] 빈집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

- 도시재생 뉴딜 지역 외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에 의한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함
 -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조사와 빈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소단위 주거지 정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점진적 정비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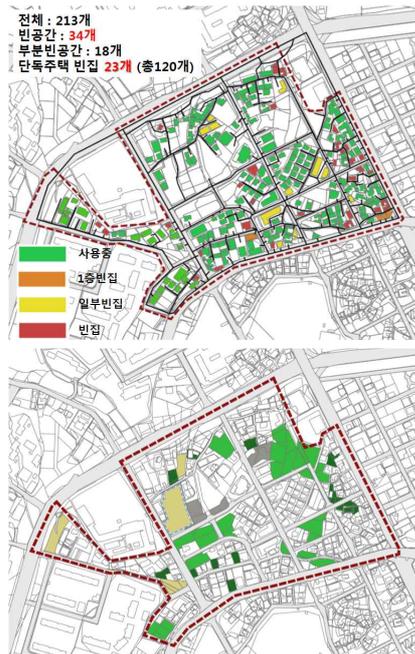


[그림 4-8] 빈집 특별법 등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요

[아산시 빈집 분포 : 상수도 단수자료]



[실목4구역(주택재개발 예정지역)]



[그림 4-9] 빈집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예시)

전략 3. 시민 수요응답형 주택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아산시 차원에서 주택문제 해결 특히, 아산시의 주요 특징인 대학생-근로자-창업지원 등을 위한 주택공급이 요구됨
- **[목적]** 아산시의 국가-LH-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마을과 연계한 양호한 주거지형성 등이 가능한 ‘시민 수요응답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정주환경을 정비함
- **[추진방향]** 새정부 국정과제, LH 등 기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 연계와 아산시의 특성을 살린 전략 발굴
 - 기존 정책과 새정부 정책 등과 연계한 주거지정비 및 주택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표 4-2] 국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방법들

위치	성격	사업유형	사업유형 세분화
도심부	기개발 기성 시가지	1. 도심내 유휴 자원 활용	1-1.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방안 1-2. 도심내 유휴 국공유지 활용방안 1-3.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 용지 1-4.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활용
		2. 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연계	2-1. 도시재생사업 연계 후보지 확보 2-2. 정비사업을 통한 후보지 확보 2-3.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후보지 확보 2-4.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을 활용
도심 인근	신규 개발지	3. 신규 조성 용지 활용	3-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2. 소규모 공공주택건설사업

자료 : 김옥연(2017)

■ 주요 내용

[시책 1] 창업·근로자 지원주택건설

- 원도심과 직장 중심지를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인접 직장에 통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 공급
 - 원도심에는 창업공간과 주거를 복합 또는 근거리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공간과 함께 안정적 사무공간 제공
 - 주택공급 방법은 임대주택건설, 코하우징주택건설 등 다양한 주택건설 방법을 활용하여, 주거와 정보교환, 커뮤니티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컨퍼런스 발표자료(2017.9)

[그림 4-10] 창업지원주택

[시책 2] 대학협력형 주택건설

- 아산시의 관내 대학과 주변마을-아산시가 연계·협력하여, 청년 및 대학생 주택을 공급함
 - 대학의 향후 기숙사 건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과 인접한 지역이 상생발전 하면서, 대학생 및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컨퍼런스 발표자료(2017.9)

[그림 4-11] 대학협력형 주택

[시책 3] 마을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

- 주민-아산시-사업시행자-국가 간 연대·협력하여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마을단위 재생사업 추진

합천00



대지면적	9,980㎡
건축면적	1,883㎡
연면적	9,440㎡
건폐율	18.86%
용적률	92.80%
세대수	170
주차대수	119
최고층수	8층

공공주택 건설

지자체가 지역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를 제안”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임대주택 대상지 주변 낙후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컨퍼런스 발표자료(2017.9)

[그림 4-12]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시책 4]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및 활용

- 아산시에 분포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활용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과 안전성 강화

[표 4-3]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한 정비 가능성 검토(예시)

세부주소	대지 면적	착공년도 (년, 월)	용도	용도세분	층수 (지상)
도고면 가곡리 176-1	28,658	1993년 11월	숙박 시설	콘도	18F
온천동 84-1외 7필지	2822.41	1990년 5월	업무 시설	업무/오피스텔/상가	20F
모종동 558-8외 1필지	631.1	2006년 4월	판매 시설	상가	8F
용화동 423-1번지	13,302	2006년 06월	공동 주택	아파트	12F

-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관련 국가 시범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함

〈국가 시범사업 개요〉

-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3
- (절차) 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장관 직접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 → 선도사업계획 수립(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송부 → 정비사업 시행
 - * 선정기준 :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이해관계인 현황, 사업 용이성 등 종합평가
- (역할분담)
 - 선도사업 선정 및 선도사업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지자체 협력)
 - 정비사업 수행 : 지자체, 정비지원기구
- (추진현황)
 - 1차(2015년) : 4곳 선정 / • 2차(2016년) : 4곳 선정

[시책 5]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작은거점 ‘아이디어 스퀘어’ 조성

- 도시공간에는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스스로 제안하고, 기획·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주민제안사업의 한 유형으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방식 도입
- 지역자산과 특성을 활용한 지역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스퀘어’ 조성 사업을 추진함

- 지역의 자산을 활용, 기존 거점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거점을 조성함

영국의 아이디어 스토어(화이트채플)

타워햄리츠구(카나리워프 인접) : 런던 32개 자치구 중 가장 가난한 지역
22만명 주민의 1/3 :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출신 이민자들

책과 음반, DVD 등 도서관, 전시공간, 카페, 다양한 강좌에 쓰는 스튜디오,
댄스 교습실에 딸린 샤워실, 컴퓨터사용공간,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이민자를 위한 교육 : 영어교실 등 어학 강좌, 요리, 무용, 뜨개질, 요가, 창업
교실, 구직자를 위한 기술훈련, 이력서 쓰기(매년 1만명 정도 등록)

건강관련 서비스(2009년 이후) : **건강과 고용 증진**(병원, 보건당국 등과 협력)



[그림 4-13] 아이디어 스토어 사례: 영국

- 아산 장미마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례임



[그림 4-14] 아이디어 스퀘어 개념의 적용: 아산 장미마을(예시)

4.2 교통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선진도시

- [전략-시책 체계] 기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통복지 강화, 지역간 소통 증진 및 접근성 강화, 교통안전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노동복합도시인 아산시의 교통복지 낙후지역(농촌) 교통복지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 동반성장 도시실현·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선진도시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둠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선진 도시’ 실행을 위한 시책 적용 주요 대상지와 수요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4] 교통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강화		
[시책 1]	마중택시(공공형택시) 확대 및 미중셔틀버스 도입	교통약자, 방문객·관광객
[시책 2]	교통약자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확대 운행	대중교통이용자, 교통약자
[시책 3]	교통복지(보행, 자전거 활용 환경 조성 등) 강화	시민 전체
전략2 : 신속한 소통이 확보되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시책 1]	상습 지정체 교차로 소통 증진을 위한 스마트시그널(Smart signal) 도입	자동차이용자, 보행자
[시책 2]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간 교통망 구축	시민 전체
[시책 3]	원도심 주택단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	해당지역주민 자동차이용자
전략3 :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안심도시 조성		
[시책 1]	농기계 아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아간 등화장치 보급 사업 시행	농업종사자, 자동차이용자
[시책 2]	민관산학연 소통 중심의 생활도로 교통안전점검 프로그램 시행	시민 전체
[시책 3]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교통안전 고도화 사업 추진	어린이
[시책 4]	사고 유발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의 공용주차공간 확보	물류업 종사자
[시책 5]	도시외곽 소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자동차이용자
[시책 6]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도로 칼라 유도선	자동차이용자

전략 1.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강화

■ 배경 및 목적

- [배경] 노인 및 저소득 계층,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불편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모색이 필요함.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의 밑바탕이 되는 교통활동 보장, 이용자 중심 교통복지 향상을 강화함
- [목적] 아산시 대중교통 공급 현황, 지역 낙후도 및 거주 주민 특성 등을 분석하여, 저비용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적극 보급함

■ 주요 내용

[시책 1] 마중택시(공공형택시) 확대 및 마중셔틀버스 도입

- 아산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를 시범 운영하여 국내 100원 택시 도입 및 발전의 모범을 보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도고, 선장, 송악, 음봉면 등 관내 65개 마을에서 마중택시를 운행 중이며 벽·오지 대중교통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원도심·신도심 중심 노선체계로 편중, 외곽지역의 교통편의가 열악한 상황으로 마중택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한 교통편의 열악 마을주민이 100원으로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임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마중택시 보급·확대를 추진, 주민의 삶의 질과 활력을 강화함



[그림 4-15] 아산시 마중택시

-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요청 신청을 받아 지속 확대하며 내부적으로 지역적 특성인 마을 고령화 수준, 주민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하여 운행 대상 마을로 확대

- 마중택시 확대를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행대상 마을 및 운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검토가 요구됨
 - 마중택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반, 택시거점을 중심으로 운행 가능 네트워크 설정
 - 운행 최단거리 개선, 시간대별 한정운행 방안 등으로 적시적소 서비스 공급, 운영 예산의 효율화를 통한 대상 마을 확대
- 마중택시를 확대·발전시켜 아산시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마중셔틀버스를 도입함
 - 아산시를 찾는 손님을 “마중” 나간다는 의미로, 마중셔틀버스를 도입하여, KTX 및 수도권 전철 이용 방문객을 흡수하여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와 연계
- 대구시 중구는 문화관광지 순환버스인 ‘골목투어 청라버스’를 운영 중임
 - 아산시를 찾는 손님을 “마중” 나간다는 의미로, 마중셔틀버스를 도입하여, KTX 및 수도권 전철 이용 방문객을 흡수하여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와 연계
 - 대구시 중구는 문화관광지 순환버스인 '골목투어 청라버스'를 운영 중임. 골목투어버스 「청라」는 티켓 한 장으로 원하는 승강장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리며 중구 도심의 유명관광지와 재래시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트롤리형 도심순환 투어버스임
 - 대구근대역사관 ~ 동성로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서문시장 코스를 도는 청라버스는 지난해 4월부터 1일 7회 운영 중임



*자료 : http://alleybus.jung.daegu.kr/sub1_1.php

[그림 4-16] 관광 목적의 셔틀버스 운영 사례(대구 중구 ‘골목투어 청라버스’)

[시책 2] 교통약자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확대 운행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저상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함
- 일반저상버스의 경우 버스길이 11m로 도심 및 농어촌도로 운행시 도로환경에 따른 운행이러움이 발생하고 있음. 편의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협소한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중형저상버스(길이 9m) 도입이 필요함
 - 아산시는 '17년 9월부터 중형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 시범운영 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선방안 검토하여 향후 확대도입 시 고려



*자료 : <http://kanghanbit1.blog.me/221098337518>

[그림 4-17]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 농어촌도로 등 도로여건이 좋지 못한 도로를 개선하여 저상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함
 - 저상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도로포장 및 장애시설 개선,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등 추진
- 정부의 미세먼지 30% 감축정책과 관련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및 한국전력공사와 충전요금 인하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인천시는 '17년 8월 전기 저상버스 20대 도입 계획(2018년 목표)을 수립하였으며 담양군은 관내 관광지를 순환하는 전기 저상버스 3대를 운행('17년 5월) 하는 등 향후 전기 저상버스는 지자체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김포시에서 운행하는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는 국내 최초의 플러그인 충전방식으로 배터리 교환방식과 비교할 때 별도의 교환 시설이 필요 없어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수함. 전기버스의 기술개발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준비 필요



*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avia_blog&logNo=221033856517

[그림 4-18]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시책 3] 교통복지(보행, 자전거 활용 환경 조성 등)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걷고 싶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강화함
- 보행로 미설치 구간의 보도 신설 및 보행교통사고 취약지점, 생활도로의 제한속도 조정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보행불편 해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서울 성북구 성북동길〉



자료 : 충청남도(2016. 12)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림 4-19]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

〈기존〉



〈개선〉



*자료 : 충남도 보도자료(<http://www.chungnam.net>) 2017.9.28.

[그림 4-20] 당진천변 보행환경 개선 사례

- 기구축 자전거도로는 레저기능도로로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공,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자전거도로망 정비 및 확대를 추진함
 - 노인 및 어린이 등에게는 야광조끼, 야광지팡이, 자전거안전모 등을 무상지급하며 교통안전 공단 안전용품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방치자전거는 수거 및 수리를 통해 저소득계층 무상 보급을 추진하며 교통약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
- 교통복지 사회사업으로 스마트교통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통비 지원 방안을 추진함

전략2. 신속한 소통이 확보되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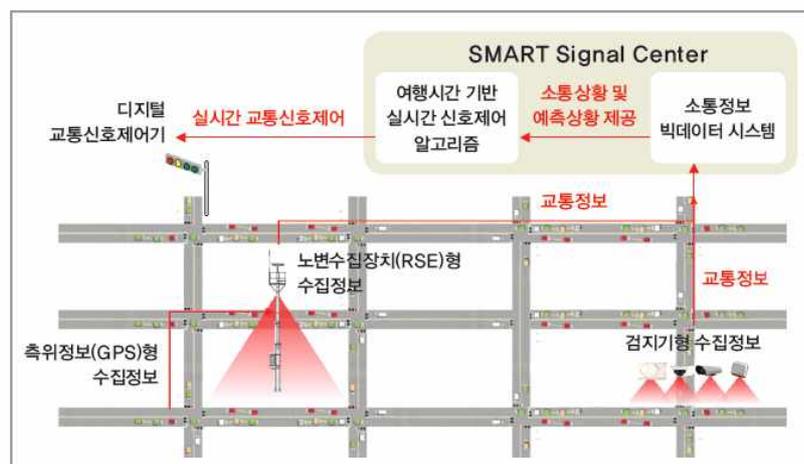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도시화에 따른 온천대로, 변영로 등 도심부의 상습적인 지정체 발생, 도심부의 교통문제 해결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교통관리 기술을 활용한 추진이 필요함
- [목적] 기구축된 아산시의 첨단교통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신기술 도입으로 아산시의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쾌적한 도시 구현

■ 주요 내용

[시책 1] 상습 지정체 교차로 소통 증진을 위한 스마트시그널(Smart signal) 도입

- 아산시는 버스정보센터, 공공자전거 운영 등 첨단교통 기초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ITS구축사업 지원 등 신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함
- 스마트신호운영의 기술 개발에 따른 테스트베드 입지를 확보하여 선도적인 첨단 도시 실현이 요구됨
 - 국가기술개발 R&D로 추진중인 스마트신호운영기술은 2019년 5년차 연구에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시범운영 도시를 선정한 후 스마트신호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한 후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기술규격 발간 예정
 - '17년 아산시지능형교통체계 용역사업에서 차세대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전략이 구현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조성 필요



*자료 : 도로교통공단(2016. 9). 교통과학연구브리핑 제10호

[그림 4-21]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구성

〈부산 주요 교차로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인천 송도 U-CITY 교통관제 구축〉



자료(좌) : <http://www.knn.co.kr/149926>

자료(우)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03846612809968

[그림 4-22]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사례

[시책 2]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간 교통망 구축

-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의 분산 수용을 위한 거점적 신도시를 조성하여 국토공간 균형개발,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 환황해 경제권 진출의 중심지로서 광역아산만권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세종시, 내포신도시 입지에 따른 지역 교통량의 증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간 교통망 구축이 요구됨
 - 2018년 추진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아산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 검토 필요
 - 유구~아산 구간 정비 및 확충, 장준교차로~송악 외암리 구간 확포장 등 도로망 확충
 - 지방도 623호 신창 읍내리 일원 우회도로 신설 등 정체현상과 주민생활 불편, 교통사고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추진
- 충남도와 아산시의 장기 숙원현안사업인 장항선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아산 구간사업」의 조기 설계 및 착공 추진으로 철도교통망 확충
 - 2008년 천안~아산간 복선전철사업 완공, 개통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로 조속한 착공 추진 필요
-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배방역 앞 교통체증 문제’ 등 아산시 내부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입체교차로, 외곽도로 연결 등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됨

[시책 3] 원도심 주택단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

- 주차장 부족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유희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및 재생기능 강화
- 온양중심상권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와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쌈지주차장, 공원 지하 주차장, 학교 지하 주차장 등 공영주차 시설 마련

- 썸지주차장은 원도심(공동체) 활성화, 도시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문화·건강도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의 예산지원(공모) 가능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학교 등 공용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하며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공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공급
- 주차장 조성 외 공유주차제도를 활성화, 주차면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차가 공영주차장 증설로 인한 부지 매입, 주차장건설비 등의 절감 등의 효과 창출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서울시 대림동)〉



〈신길동 마을공원지하주차장(서울시 신길동)〉



자료 : 울산광역시(2015. 9)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

[그림 4-23] 공원지하 주차장 조성 사례

- 또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백화점, 마트, 공공청사의 대형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도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무료 주차장 개방 사업(충북 청주역사)〉



〈공공청사 무료주차장 개방(울산시)〉



자료 : 연합뉴스, 주차난 해소에 사활건 지자체, 2016. 9. 9

[그림 4-24] 공유주차제 시행 사례

전략3.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안심도시 조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아산시 교통사고는 2011~2015 5년간 17.61% 증가율을 보이며 충청남도 시군중 교통사고증가 상위권에 위치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됨
- [목적] 노동복합도시 특성과 사고특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안전프로그램 시책 추진

■ 주요 내용

[시책 1] 농기계 야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야간 등화장치 보급 사업 시행

- 도심 외 농촌지역의 이륜차, 자전거, 농기계는 교통사고 취약요소로 농번기 등 집중 사고발생시기에 농기계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모색이 요구됨
-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장착 촉진은 충청남도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중점 관리 사업으로 지정, 농기계 등화장비 장착을 촉진함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운행빈도가 높은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증가, 반사판, 안전장치, 저속차량 표시 등 등화장치 설치

[충청북도 '16]



[횡성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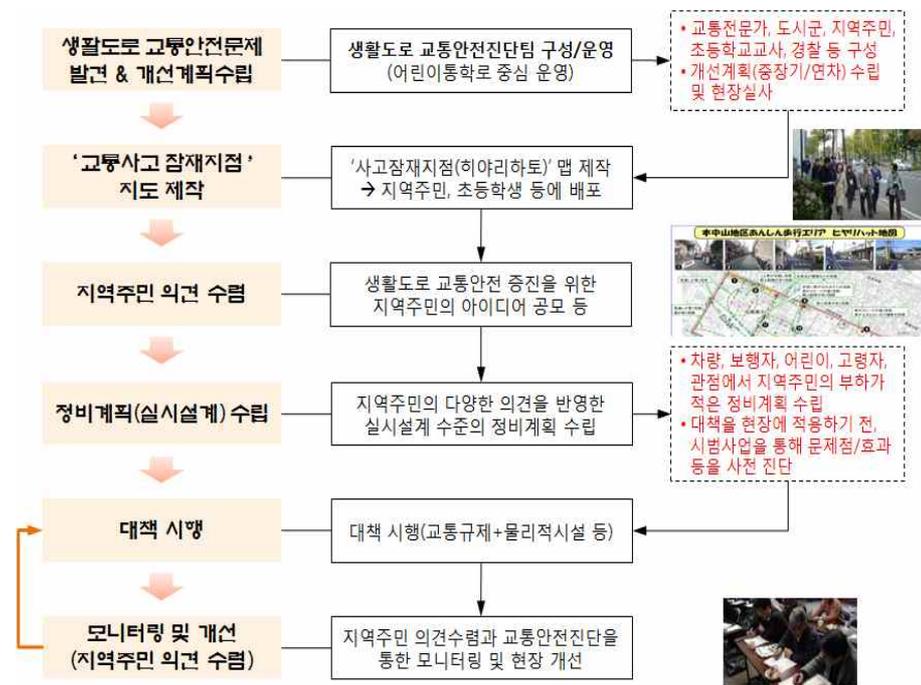


[그림 4-25]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장착 촉진 사례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을 원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신청을 통해 지역 내에서 간편하게 등화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도로주행형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은 후부반사판 부착 지원

[시책 2] 민간산학연 소통 중심의 생활도로 교통안전점검 프로그램 시행

-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생활도로 교통안전 관심 부족 등으로 차로폭 9m 미만(생활도로) 도로 교통사고는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고 교통안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능동적 안전대책 수립방안 강구 필요
- 생활도로 교통안전점검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현장점검,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안전한 생활도로를 조성함



자료 : 김원철(2016), 충남 생활도로 교통안전 증진방안

[그림 4-26] 합동 교통안전 증진대책 수립

-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규제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유럽의 교통안전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 생활도로 속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조정 필요
 - 서울시 북촌지구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 하향 시범 실시('17), '선단위, 구역단위' 속도 관리에서 '면단위' 속도관리 도입으로 제한속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과속 예방의 효과 상승 예상
 - 아산시 생활도로는 30km/h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며 통행속도가 높은 구간은 물리적 속도 감속 유도

[시책 3]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교통안전 고도화 사업 추진

-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등 교차로 교통안전 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음
- 아산시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및 횡단보도 안전문구,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 고도화 사업을 추진, 교차로의 어린이 사고 예방 종합 시설을 구축함
- 초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 보행이 활발한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고도화 시설 설치를 강화함



[그림 4-27] 생활도로 교차로 교통안전 고도화 방안(시설설치 사례)

- 횡단보도 대기장치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대기중인 어린이가 횡단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경우, 어린이의 행동을 감지하여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여 안전행동을 유도하고 횡단보도 안전문구를 병행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향상
- 옐로카펫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교차로 사각지대의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설치
- 청주시의 경우 스쿨존 47곳 교차로의 신호등 몸체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교체한 '특수색 신호등' 을 설치, 특수색 신호등이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시행을 유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특수색 신호등 도입 사례(충북 청주시)]



자료 :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

[그림 4-28] 스쿨존 인식 개선 사례

[시책 4] 사고 유발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의 공용주차공간 확보

- 대형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로변,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불법주정차하는 위험사례를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여건 조성이 요구됨
 -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박차를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 도시 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대형차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와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공용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공용차고지는 IC입구 등에 마련하여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 계획등과 연계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공용차고지는 이용편의를 위해 사무실, 휴게실, 식당, 샤워실 등 편의시설 제공

[정읍시 화물차 공용차고지]



[거창군 화물차 공용차고지]



[울주군 화물차 공용차고지]



[광주시 화물차 공용차고지]



[그림 4-29] 대형차 공용주차공간 확보 사례

[시책 5] 도시외곽 소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 도시외곽 등 교통량이 한산한 소도로는 회전교차로를 운영함으로써 신호에 의한 불필요한 대기 및 연료소모,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줄임
- 아산시 도시외곽 지역은 2차선 규모의 소도로가 분포, 회전교차로 운영으로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함

○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는 외곽지인 신창, 선창 등 교통량이 한산하고 소도로가 집중된 지역을 검토함

- 회전교차로는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도입으로 58.5% 사고감소 효과
- 교통정온화 사업(Traffic calming) 구간 내의 교차로, 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산업단지 등의 교차로(집산도로, 국지도로), 지방 소도시 마을 내의 교차로(지방도, 군도, 농로 등) 등이 적당

[당진시 신평면 회전교차로]



[서울 중암동 회전교차로]



[울주군 운양읍 회전교차로]



[전주시 삼천동 회전교차로]



[그림 4-30] 소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례

[시책 6]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도로 칼라 유도선 설치

- 아산시 관내 통과 간선도로 입체교차로 구간에 칼라 유도선을 설치하여 나들목 구간에서 운전자가 진행방향 혼란 없이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에 진행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아산시민과 아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
 -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방향 유도선을 설치·운영
 - 운전자들이 느끼는 편의성, 사고 감소 효과가 높음(나들목 구간에서 약 40%의 사고감소 효과를 보임)
 - 서울시의 경우 복잡한 교차로구간에도 칼라 유도선 설치
 - 유도선 설치는 이해충돌이나 불편요소가 없는 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도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

[대전시 계룡로]



[서울역 교차로]



[진주시 상평교]



[청주시 강서 사거리]



[그림 4-31] 칼라 유도선 설치 사례

4.3 환경분야 : 건강 생태회랑 친환경도시

- [전략-시책 체계] 산림, 논습지, 도시녹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유도하여 아산시 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건강 생태회랑 친환경도시’ 실천을 위한 시책 적용 주요 대상지와 수요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5] 환경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아산의 골격, 산림체계 완성		
[시책 1]	지역산림생태축 설정	중요산림
[시책 2]	아산시 대표 야생 동·식물 선정	중요생물
전략2 : 생명의 보고, 논습지 보전		
[시책 1]	중요 논습지 선정·관리	중요논습지
[시책 2]	농촌 생태자원(소하천/둑방 등) 조사·관리	농촌자원
전략3 : 다가가는 환경복지, 도시숲 조성		
[시책 1]	시가지 녹지체계 구축	공원/녹지
[시책 2]	잔존림 보전·관리 방안 마련	잔존림
전략4 : 깨끗한 바람,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시책 1]	태양광발전시설의 친환경 허가지침 마련	
[시책 2]	대기 정화방안 마련(수소에너지 활용, 바람길 보전·관리)	

전략 1. 아산의 골격, 산림체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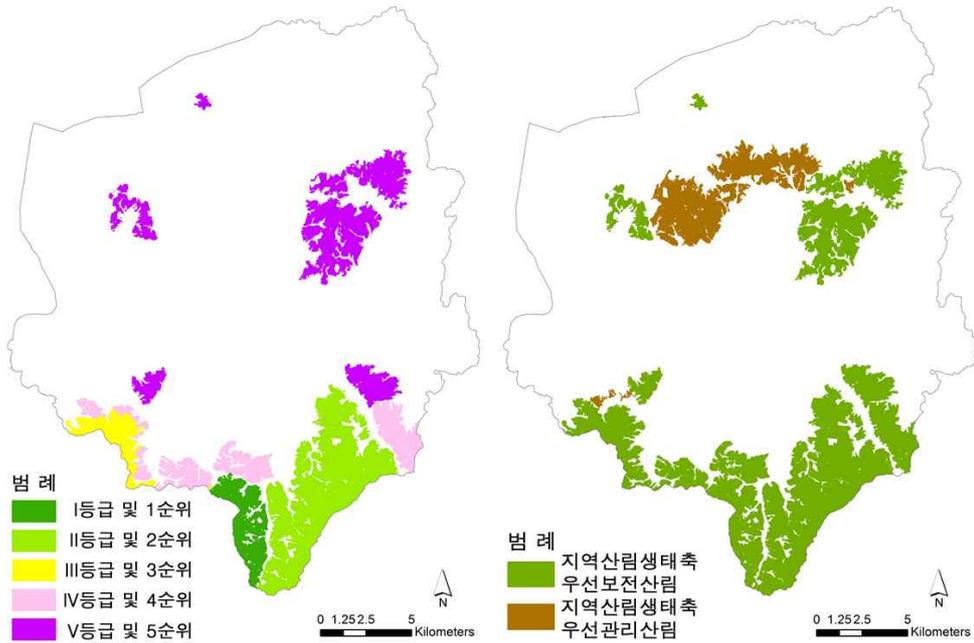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산림생태축이 2009년 설정되었으나 아산시를 비롯한 15시·군의 중요 산림이 세세하게 반영되지 않아 개별 시·군의 환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음
- [목적]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생태관련계획에서 아산 주체적 환경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현실적 방침이 필요하므로 아산시 공간 틀의 가장 근간이 되며, 바람의 원천인 산림지역에 대한 체계를 완성함

■ 주요 내용

[시책 1] 지역산림생태축 설정

- 가장 우선적으로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충청남도, 2009)과 아산시 비오톱 가치등급(아산시, 2014)을 기반으로 아산시가 보전·관리할 중요산림의 우선순위가 설정된 바 있으므로(충남연구원, 2016) 이에 대한 검토 및 순차적 실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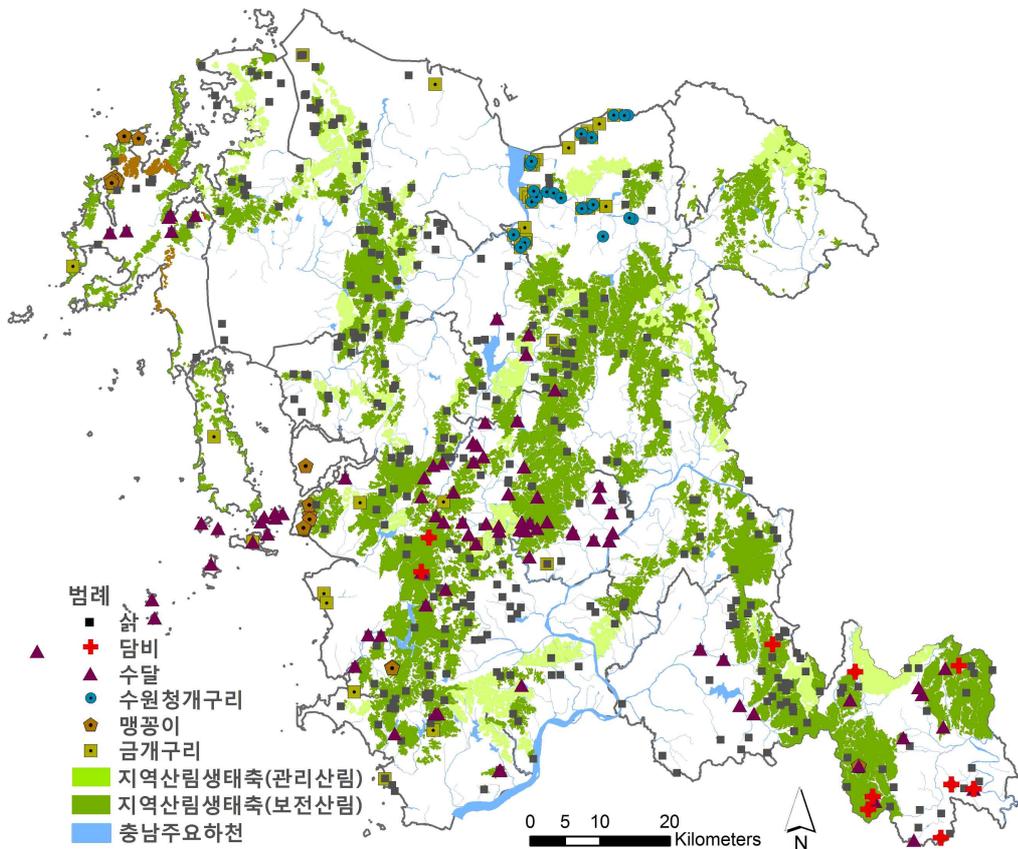
출처 : 사공정희 외(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전략, 충남연구원

[그림 4-32] 아산시 중요산림 보전·관리 우선순위(상) 및 지역산림생태축(안)

- 또한, 남쪽 경계를 따라 대규모로 연결된 중요 산림과 북쪽에 고립 분포하는 대규모 산림들에 대해, 상호연결보다는 개별 연결하는 방식으로 아산지역산림생태축이 설정된 바 있으므로(충남연구원, 2016) 이에 대한 검토와 구체화가 필요함
- 한편, 보전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범위가 넓어 현재 북쪽 대규모 산림은 심각한 난개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산시는 지역산림생태축을 근거로 한 개발방향 제시가 시급함

[시책 2] 아산시 대표 야생 동·식물 선정

- 2014년 아산시 비오톱 지도 구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야생동물 I 급인 수원청개구리(22개 지점, 총 123개체)와 II급인 금개구리(25개 지점, 총 412개체)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이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 수원청개구리는 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후 수원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다가 2014년 아산시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매우 진귀한 경우임



[그림 4-33] 충남 중요야생동물 분포도

- 특히,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아산에 집중 출현하는 점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야생생물에 대해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아산시를 대표하는 동·식물을 선정하여 홍보에 활용함
- 이와 더불어 아산시에서 최근 발견된 반딧불이, 토종벌, 금개구리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및 대체서식지 모색도 필요하며, 토종식물 정착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전략 2. 생명의 보고, 논습지 보전

■ 배경 및 목적

- [배경]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중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주목할 만한 토지사용 제도와 경관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제10차 람사 총회에서는 논이 '놀랄만한 아시아의 습지'로 주목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논습지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실정임
- [목적] 아산시의 특성이 반영된 중요 논습지를 우선 선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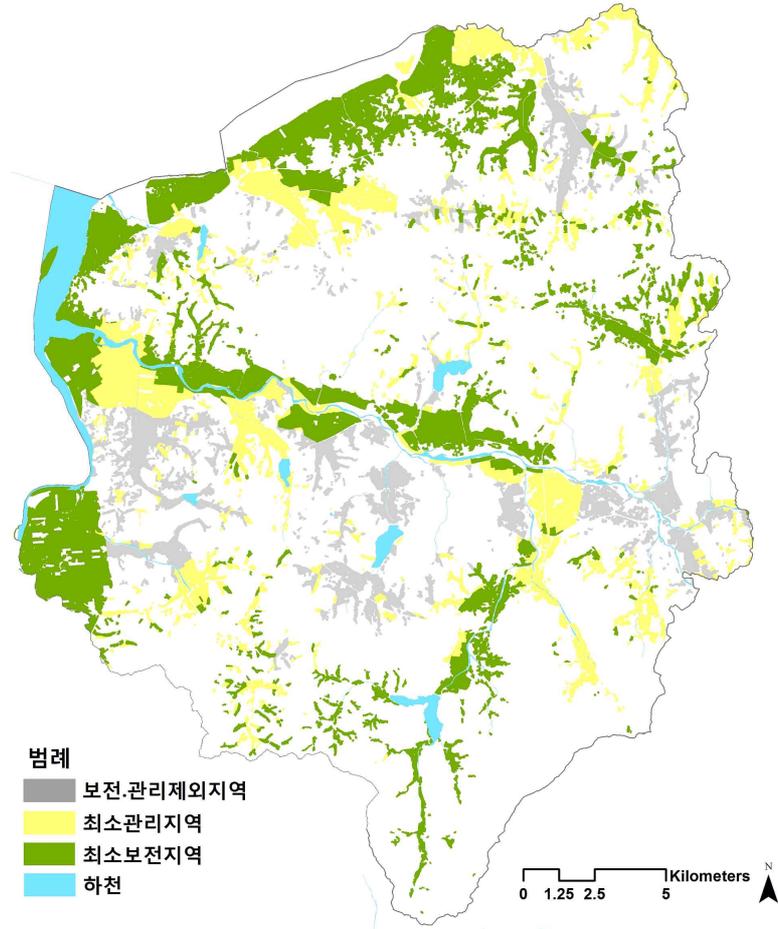
[시책 1] 중요 논습지 선정·관리

- 아산은 산림-논-하천의 토지이용형태 분포가 매우 잘 나타나 있어 이러한 도시 공간구조를 지역의 특성으로 부각시킬 가치가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난개발로 논습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충남 논감소율 2014년 전국 최고) 아산시는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중요 논습지를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산시 최소보전논습지 면적 및 위치를 설정함
- 아산시의 중요 논습지 분포를 살펴보면, 삽교천, 아산호, 곡교천 등 아산의 주요 하천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멸종위기야생동물 I, II급인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의 분포 역시 주요 하천변 논습지임을 고려해 볼 때, 아산시 대표 하천 및 중요 논습지, 그곳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통합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 및 생태교육 등에 활용함
- 한편, 현재 아산에서는 자연적 회복력을 보이는 논습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함

[시책 2] 농촌 생태자원(자연형 소하천/둑방 등) 조사·관리

- 논습지는 대체로 수원공급처인 하천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하천의 길이가 수 km에 달하는 경우도 많음
- 지역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천들이 구조적으로 자연형 곡선을 길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경관생태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임
- 따라서 자연형 곡선형태의 하천들 중 양안이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개조되지 않은 곳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함

- 또한, 자연형 소하천 이외 논습지 곳곳에 분포하는 둌병, 노거수 등 농촌의 생태 자원 조사를 실시함
- 농촌 생태자원의 보전노력은 농촌공간의 생물종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며, 보다 건강한 생산물을 기대할 수 있음



출처 : 사공정희 외(2014)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충남연구원

[그림 4-34] 아산시 중요 논습지 분포도(사례)

전략 3. 다가가는 환경복지, 도시숲 조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외곽의 대규모 산림축과 함께 거주지 주변의 소규모 녹지의 활용이 필요함
- [목적] 휴양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도시녹지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내 집 앞 자연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시책 1] 시가지 녹지체계 구축

- 시가지 녹지체계는 사실상 생태적 측면보다는 시민 휴양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곽산림 야생생물을 시가지까지 끌어들이는 기능보다는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함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2&dirid=12031121&docid=243738128&qb>, 다음영상

[그림 4-35] 대규모 중앙분리대 사례(대구시 수성구, 길이1.2km이상/폭20m이상)

- 따라서 기존 공원 및 녹지를 상호 연결할 때 시민 이동이 많은 길을 최대한 포함하여 시가지 녹지체계(Green-way system)를 구축함
 - 도시민 성인의 경우 출발지에서 반경 1km내, 특히 인근에 은행, 식료품가게, 식당, 소매점이 있을 경우 보행선택 가능성 향상(Lee and Moudon, 2004)
 - 국내 적용 시 은행, 식료품가게, 식당, 소매점과 유사한 목적지 선별 및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을 목적지에 포함 필요(충남연구원, 2012)
 - 이러한 녹지계획은 현대 도시민의 보행활동 부족 및 비만 발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내·외 동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계획이라 판단

-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차도폭을 줄여 대규모 중앙분리대를 조성하거나 보행로에 두 줄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향후 야생생물 이동과 서식 및 바람통로로서의 기능도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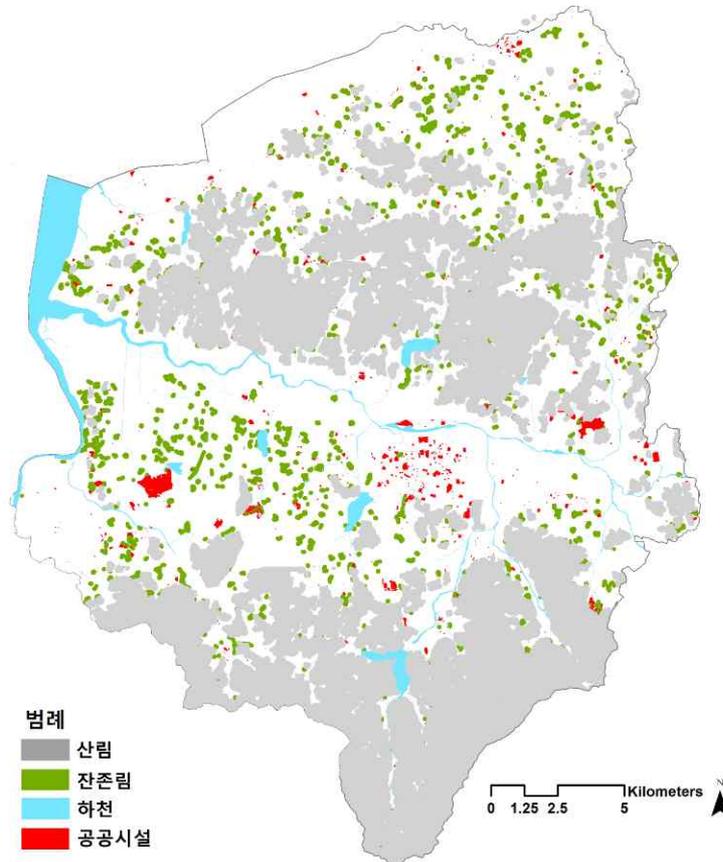
[시책 2] 잔존림 보전·관리 방안 마련

- 1ha 미만의 잔존림이 아산시 전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시가지지역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가지 이외 지역의 잔존림도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녹지체계 구축 시 기존 공원 함께 잔존림을 중요 기점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향후 시가지가 확장되었을 경우에도 곳곳에 녹지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녹지 조성의 부담을 줄여 녹지체계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잔존림은 대체로 주변 개발로 인해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구릉성 자연 녹지가 많아 높이가 낮고 접근성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휴양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음



[그림 4-36] 시가지 내 잔존림 사례

- 잔존림이 부족한 시가지의 경우 추가녹지 조성이 필요하므로 관공서, 학교, 은행 등 기존의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또한, 지역식생이 잘 유지되고 있는 잔존림의 경우 식생을 비롯하여 그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자료 구축도 의미가 있겠음



[그림 4-37] 아산시 잔존림과 공공시설 분포도

전략4. 깨끗한 바람,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 배경 및 목적

- [배경]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국내·외 동향에 맞추어 아산시 역시 태양광 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함
- [목적]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진정 친환경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활용 및 설치 지침 등을 마련함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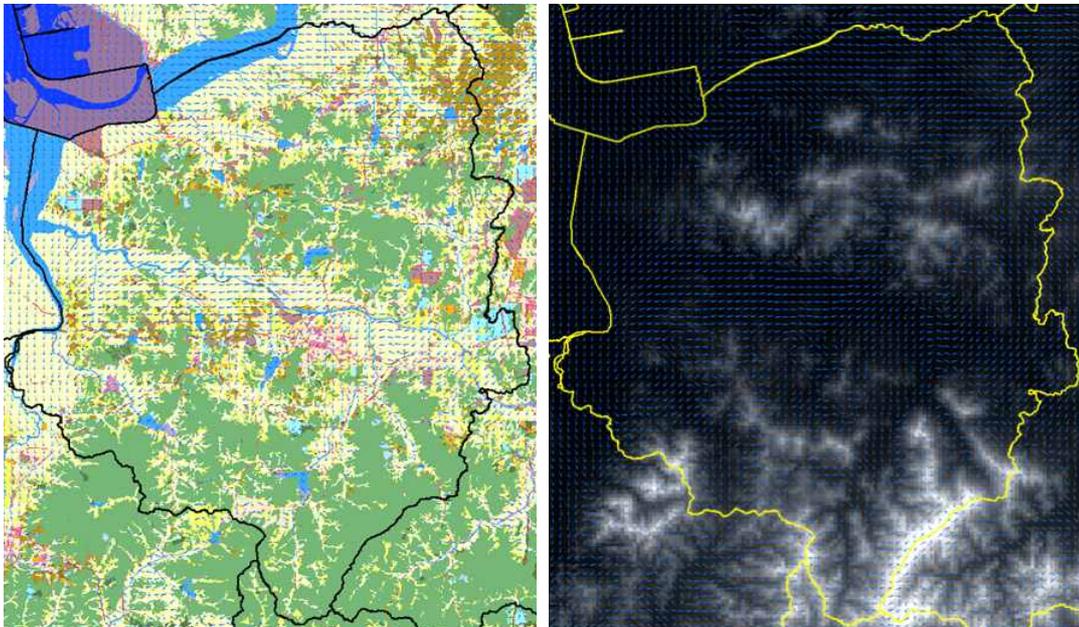
[시책 1] 태양광발전시설의 친환경 허가지침 마련

-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에 걸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나 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방안은 미비하여 슬한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임

- 따라서 아산시의 자연생태 측면, 자연환경 측면 등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 심의 기준 및 허가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의 허가지침에 반영함
 - 단순히 시설물 설치지역의 소유주에 대한 지가보상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계 서비스 손실에 대한 보상 필요

[시책 2] 대기 정화방안 마련(수소에너지 활용, 바람길 보전·관리)

- 바람길은 도시열섬과 대기오염 완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산시의 바람길을 파악하여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음. 즉, 바람을 통해 도시열섬을 막아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대기오염물질 적체지와 오염물질 발산지의 오염물질을 바람으로 이동시켜 오염농도를 낮출 수 있음
- 이와 함께 대기오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에너지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올바른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도시 중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흐름이 좋으며, 신정호 주변 및 아산도농공단지 주변에 바람이 다소 정체함

[그림 4-38] 아산시 바람길 분석 사례

4.4 안전·안심분야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안심 도시

- [전략-시책 체계] 아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안심하며 일상생활 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책을 제시함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안심 도시’ 실행을 위한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6] 안전·안심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책 1]	재난안전관리의 민·관 협업체계 강화	
[시책 2]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정비	
[시책 3]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산업단지
전략2 : 시민을 위한 안심사회 구축		
[시책 1]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안전지수 개선	
[시책 2]	재난유형별 방재핸드북 제작 및 보급	
[시책 3]	재난에 대비한 필수 비상용품 구비 운동 전개	
전략3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의식 고취		
[시책 1]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교육 강화	안전취약계층
[시책 2]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 확대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시민 안전취약계층

전략 1.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배경] 재난과 각종 사고 관리에서 민간과 공공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난관련 정보의 공유는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목적] 재난안전관리의 민·관 협업체계 강화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정비, 산업단지내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통한 재난안전 예방 체계를 구축함

■ 주요 내용

[시책 1] 재난안전관리의 민·관 협업체계 강화

- 재난 발생시 공공부문만의 힘으로는 재난대처에 한계가 있고, 실제 많은 국내외 재난대처 사례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적극적 활용이 매우 시급함
- 기존의 안전에 대한 지역협의체가 관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의 고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 시·민간사업자간 재난자원 유·무상 지원협정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거버넌스 구축 필요
- 민·관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제적·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등 지역내 민간단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협업방안 모색 필요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복잡·다양화·대형화로 각종 재난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행정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련 민간단체 및 학계와 행정이 연계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간의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등을 도모

[시책 2]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정비

- 현행 매뉴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충남도, 아산시의 역할 및 기능 중심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를 개선하고 행동수칙을 마련해야 함
 -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안전 유형별 관리방안에 맞춰져 있어 현장에서의 활용성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지자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요구됨
-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위해 시민 개개인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단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안전체험, 가상현실(VR)과 같은 체험형 콘텐츠의 적극 보급 및 활용 필요



[그림 4-39] 위기대응체계(서울안전누리)



[그림 4-40] VR을 활용한 가상훈련 시스템(한구소방안전협회)

[시책 3]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년)를 비롯하여 충남 내 산업단지에서도 화학물질누출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피해 우려
 - 화학물질 특성상 쉽게 인지하는 것이 어렵고 사고 발생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그 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임
- 산업단지별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내 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도모
 - 산업단지별 지역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재난발생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DB구축 및 관련 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특정관리대상시설, 취약지역 및 시설 등 현황 DB와 관리 실태 등의 공유
-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각종 위험·위해정보는 예방효과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공개되는 위험·위해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위험·위해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위험·위해정보가 수록된 정보지 발간 및 공공장소 보관, 안전픽토그램 제작 및 부착, 홈페이지 공개 등



[그림 4-41] 안전사고 STOP운동(경기도시공사)



[그림 4-42] 선제적 산업가스 안전체계 구축(가스안전공사)

전략 2. 시민을 위한 안심사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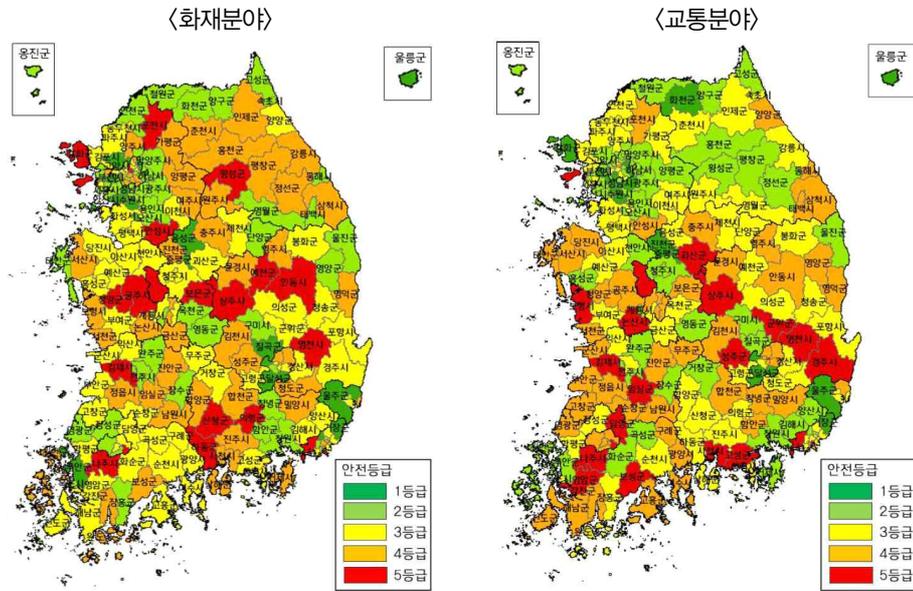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시민들에게 안전하면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재해·재난 발생시 레질리언스(복원력/회복력)가 강한 사회가 요구됨
- [목적]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안전지수를 개선하고, 재난유형별 방재핸드북 제작 및 보급, 필수 비상용품 구비 운동 전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 주요 내용

[시책 1]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안전지수 개선

-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지역의 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가 충남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대응해 나가야 함
 - '15년과 비교해 불 때 하락한 분야(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현상유지 분야에 대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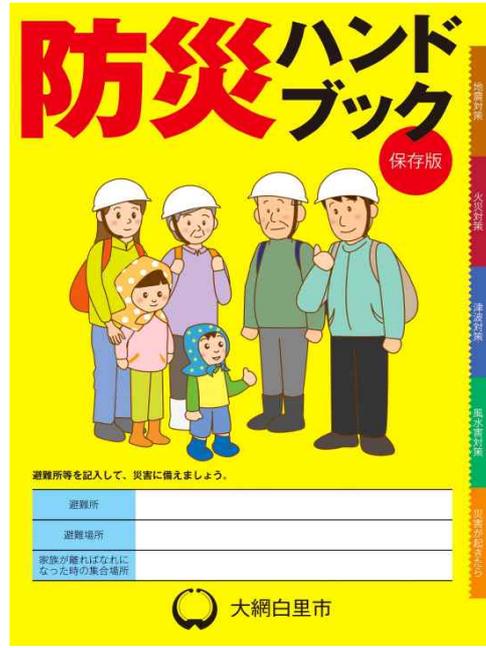
※자료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6.12.8)

[그림 4-43] 아산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16)

-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아산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추진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사고 현황 파악, 위험요인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해 근본적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 제시

[시책 2] 재난유형별 방재핸드북 제작 및 보급

- 재난·재해는 종류와 피해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위지역 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재해에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위이를 위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 대응방법, 대응절차 등을 보기 쉽게 작성하여 배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상시 소지하기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핸드북 형식의 방재핸드북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위다양한 이미지나 삽화 등 도식화를 통해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 아산시 주요 시설 및 관광지에 대해 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위대중교통 접근성, 안내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행로 여건, 각종 편의시설, 화장실 등 다양한 정보 수록



[그림 4-44] 일본의 방재핸드북(예시)

[시책 3] 재난에 대비한 필수 비상용품 구비 운동 전개

- 대규모 재난 및 사고 등 위급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최저한의 필수물품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함
 -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구조활동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동안 필요한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필수물품들을 하나의 가방 혹은 상자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비상용품을 들고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함
- 필요한 물품을 튼튼하고 휴대가 편리한 가방(비상용 백)을 활용하여 상시 준비
 - 가능하면 평소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준비
 - 비상식량, 음료수, 손전등, 건전지, 라이터, 휴대용 라디오, 구급용품, 화장지, 수건 등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용품 중심으로 준비

- 비상식량과 구급약품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보관에 매우 취약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



[그림 4-45] 일본의 다양한 재난용품(예시)



[그림 4-46] 재난 대비용 가방 구성품

전략 3.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의식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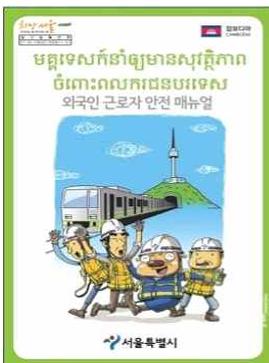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발적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난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배려한 안전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 [목적]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고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안전 문화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소외지역에 대한 재난안전서비스를 확대함

■ 주요 내용

[시책 1]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교육 강화

- 안전문화 운동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간중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와 관심 유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수단이 요구됨
 - 민간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안전문화 경진대회, 안전문화 정착 및 실천을 위한 안전리더 육성 등
- 안전사고 예방과 범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영유아, 고령층 등 안전에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정착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 지원 확대
 - 외국인 이주노동센터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교육 지원이 요구됨
-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 교육청과 연계하여 어린이 체험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47] 외국인근로자 안전매뉴얼



[그림 4-48] 어린이 교통안전놀이터

[시책 2]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 확대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 고령자,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관리 소외지역(안전사각지대)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됨
 -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력 확보가 어려우며, 대형재난으로의 발생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도로, 주택 등에서의 물리적 장벽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안전 정보전달 장벽,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해소가 요구되고 있음
 - 도로의 단차 제거, 보행공간내 각종 지장물·적치물 제거 등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정비 요구
- 안전용품의 지급, 안전장치의 설치 및 사용법 교육, 안전점검 서비스의 제공 등 전반적인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력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여야 함
- 시민 안전의식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며, 아산시 및 충남도내 안전문화 교육기관 및 강사 풀(Pool)을 구성하여 이들과 연계한 교육 추진



[그림 4-49]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



[그림 4-50] 어린이 사각지대 교통안전 캠페인

4.5 산업경제분야 : 지역 선순환 경제도시

- [전략-시책 체계] 제조업 기반의 산업생산중심에서 연구개발 및 다양성이 확보된 지역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산업경제정책을 중점 발굴·추진
 - 아산시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R&D-생산-Post R&D의 선순환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적 경제 등 지역단위 작은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과 시책 발굴·추진에 역점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산업경제정책은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요층은 각 경제주체별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

[표 4-7] 산업경제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R&D와 생산이 연계된 Triagle Cluster 구축		
[시책 1]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국정과제(지역공약)와 연계
[시책 2]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국정과제와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책 3]	산업단지 복합화 및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국정과제와 연계
전략2 : 기업지원플랫폼 및 고용지원체계 구축		
[시책 1]	아산시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시책 2]	중소기업 성장 환경 구축	국정과제와 연계
[시책 3]	연구소 기업 유치 및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국정과제와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책 4]	고용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전략3 : 자립적 연대를 통한 지역단위 작은 경제 육성		
[시책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선순환 환경 조성	
[시책 2]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협동화 단지 및 공동사업장 조성	

전략 1. R&D와 생산이 연계된 Triagle Cluster 구축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아산시는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제조·수출기반의 장치산업 중심으로 지역이 성장한 지역으로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산업변화의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기반의 생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아산은 산업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적 기능이 추가 되는 도시로 기존 주력 산업이외 새로운 생산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기반 조성으로 행복성장의 동력 강화

- [목적] 현재의 산업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교류기능에 대한 확대를 통해 새로운 R&D와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내 산업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산업체계를 구축함

■ 주요 내용

[시책 1]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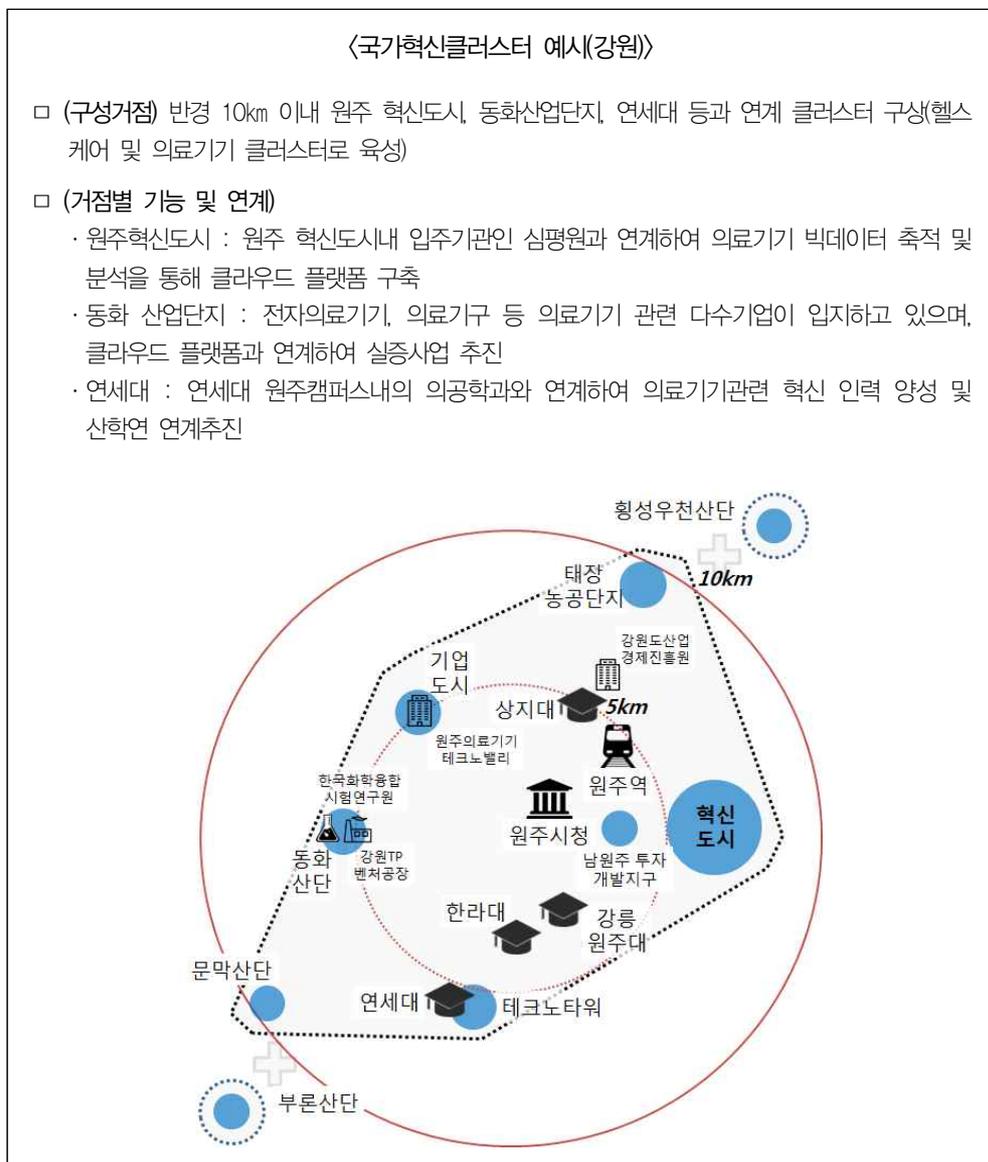
- 산업생산 중심의 지역제조업에서 연구 및 제조지원 R&D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기업 네트워크 지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함
 - 새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의 R&D집적지구 조성 과수도권 대기업 본사의 KTX역세권 주변 지역 유치
- 단순 시설 조성 과 기업 유치 등의 단편적 접근 보다는 지역산업의 융복합화 및 과학기술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도입가능한 기능 및 지원시설에 대한 검토와 지역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방안 모색
 - 중앙정부의 소규모 연구개발특구 사업과 연계한 KTX역세권 R&D집적지구에 대한 다각적 대응
- 단기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국제컨벤션센터, R&D지원센터, 국책연구기관 분원 등의 지원시설 유치와 함께 중기적으로 아산지역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특구의 조성방안 모색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
 - 아산/인주(생산-기계, 자동차) - 탕정/천안(R&D, 연구지원) - 테크노밸리(생산-기계, 전자) 지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Triangle Cluster 조성

(2) [시책 2]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기업 및 장비지원기관, 대학 등과 연계 아산시 실정에 맞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제조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함
 - 첨단기술 및 특허 사업화, 공급 및 수요기반 파트너, 자금조달 옵션, 정부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지원 플랫폼 구축
 - 아산시 기업지원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중추 제조분야를 중심으로 제조혁신시스템 지원과 장기적으로 제조융합서비스 분야 창출
- 4차 산업혁명 등의 여건에 적극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 브랜드화 지원 및 제조 융합서비스분야 창출기반을 조성함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리딩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부족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 모색
 - 지역산업과 특화된 지원기능을 구축하여 지역내 대학교수, 기업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를 적극활용하고 ICT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시책 3] 산업단지의 복합화 및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신규 산단 조성, 산업단지 재생등의 사업 추진시 중복의 비효율성 제거 및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간 기능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단지화를 지원함
 -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종합적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의 복합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아산, 천안지역을 연계한 거점 산업단지를 클러스터화하여 새로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을 검토함
 - 국정과제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산을 포함한 충남은 혁신도시가 부재하여 별도 계획 필요



[그림 4-51] 국가혁신클러스터 예시: 강원 원주시

전략 2. 기업지원 플랫폼 및 고용지원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배경] FTA·DDA 등의 세계경제환경의 지역화가 확대되면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기업지원 수요에 대해 능동적 대응과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환경 조성 필요성이 확대됨
- [목적] 기업 수요에 대응한 밀착지원이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 및 기업지원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함

[시책 1] 아산시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 다양한 기업의 지원수요에 대응한 단일창구 기능 수행 및 중개를 통해 기업들의 지원 정보구득에 대한 탐색비용 절감과 통합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기업 지원 수요 전반에 걸친 지원상담창구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플랫폼을 구축함
 - 기업지원상담을 위한 단일창구(single window)기능 : 자금, 특허·인증, 기술개발, 인력, 정보화·컨설팅, 마케팅·판로 등 다양한 지원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지원수요(needs)를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상담수행
 - 중개(brokering)기능 : 면밀한 기업애로상담을 토대로 해당기업과 지원기관·대학·연구소를 상호 연계시키는 중개서비스 제공
 - 특정 지원기관이 일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지원상담 → 탐색·알선 →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원정보구득에 대한 탐색비용 경감

〈시화 종합비즈니스센터〉

- (개요) 시화단지내 지원기능 집적 및 근로자 복지시설 제공 (267억원)
- (주요 기능)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설 및 사업
 - 창업, R&D, 컨벤션, 교육연수, 컨설팅, 국제회의장, 전시장, 스포츠센터, 금융기관, 숙박시설 등
 - QWL밸리계획 :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터 형성,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전환, 산업단지 고용창출 역량 강화 추진
- (사업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연계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시설(기업지원센터 4개소, 공동물류지원센터 2개소, 근로자 복지시설 6개소)을 운영함으로써 경영지원 활동의 다각화 및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체계를 구축



자료 : 산업단지공단

-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관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기업연계 인력양성지원, 중소기업 경영애로 자문,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학관 HUG-Day 운영 등

[시책 2]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

-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에서 기업의 다양성과 혁신이 창출되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함
 - 중소기업을 아산시 미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환경 조성 필요
- 아산지역의 유망·강소기업,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R&D 및 해외마케팅 등의 포괄적 지원을 통한 히든챔피언, pre-히든챔피언 자체선정 및 육성
 - 후보기업 선정 및 기업별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및 경영혁신 전략 수립 등의 기업별 글로벌 성장전략 마련
 - 성장전략서(제안서) 컨설팅, 현장평가 컨설팅, 사후관리 등 기업별 전담요원 확충을 통한 원스톱 지원
 - * 국정과제(중소기업)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R&D지원 및 지역내 주요기업의 해외마케팅시 관내 협력업체의 해외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중앙정부 정책과제와 연계 KITA, KOTRA 등과 연계한 박람회, 전시회 등 참여를 확대함
 - 중국 및 동아시아 진출 핵심산업 분야의 선정과 기업 타깃팅 지원

[시책 3] 연구소 기업 유치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아산의 제조업관련 경제구조는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관련 산업중심의 대기업과 이와 연관된 1차, 2차 벤더 중심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음
 - 대기업의 자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수직적 구조로 이뤄져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내 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지원키 위한 정책이 필요
 - 대기업과 연계된 원하청 중심의 중소기업에서 자체 기술 보유,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을 지원

〈기업 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 지원 제도 개요〉

- (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게 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촉진·유도 및 민간조직의 효율적 육성·지원
-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비롯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같은 인력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등의 혜택 제공(2015년 기준안화)

지원제도	항목	부설 연구소	전담 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연구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	×

- 단기적으로는 지원정책의 가시적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과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확대를 통해 기업과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함

- 중앙정부의 제도 활용, 중소기업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연간 지원기업 선정 및 충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진흥학회 등과 연계한 전담 컨설턴트 배정 및 사업지원을 강화함

[시책 4] 고용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지역내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의 마련과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함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기능 및 조직 확충을 통한 고용지원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함
 - 취업상담인력 총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고용지원체계 구축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적 이행방안 수립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주민발의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함
 - 서비스 및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주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성 확대
 -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된 계획서 심의 선정후 자금지원(프로젝트당 매칭 및 신규일자리창출 비율 산정 등 기준) → 지원 대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략 3. 자립적 연대를 통한 지역단위 작은 경제 육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제조업 및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와 함께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적인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 육성이 필요함
- [목적]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공동체 경제에 대한 발굴과 지원 등의 선순환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 육성 및 고도화 추진

[시책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순환 환경 조성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지역내 사회적경제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속성을 유지할 사회 인프라는 부족함
 - 사회적경제는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분야처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미흡

- 사회적 경제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지원 및 자립 가능한 경영 활동의 기반을 강화함
 - 자체적인 재정지원이나 금융권의 대출이용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나 인내자본(저금리 중장기 대출지원) 조성
-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 정보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 아산지역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의 실태 및 상호 연계 지원
 -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컨설팅 추진

[시책 2]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협동화단지 및 공동사업장 조성

- 현재 농업중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6차산업화로 육성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공간 조성
 - 지역사회중심의 lab 운영 및 공동화장비 조성·활용
- 아산 주요 중심지간의 접근성 용이한 지역에 협동화단지(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를 조성하고 관련 컨설팅 및 경영지원이 상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충남 및 전국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 지원

4.6 농업농촌분야 : 친환경 농업 기반 다기능 농업도시

- [전략-시책 체계] 아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업·농촌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함
 -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최근의 정책동향과 선진외국의 경향을 고려해 핵심전략사업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먹거리의 주요 정책대상은 아산시민을, 농촌일자리와 다기능농업의 주요 정책대상은 농촌주민으로 설정함

[표 4-8] 농업농촌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안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시책 1]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및 작부다양화	
[시책 2]	아산 로컬푸드 확대 및 활성화	
[시책 3]	아산시민 먹거리교육 및 시민단체 활성화	
[시책 4]	친환경 도시농업 및 영농지도	
전략2 : 다양한 농촌일자리 창출		
[시책 1]	특화작물 추농프로그램 운영	외부인시민
[시책 2]	귀농인 농촌일자리 상담 및 자원봉사 연계	농촌 주민
[시책 3]	조미료 가공산업의 전략적 육성	농촌 주민
전략3 : 다기능적 농업의 활성화		
[시책 1]	사회적 농장(치유, 교육농장)의 활성화	농장 경영주
[시책 2]	직판/직매장의 활성화	농촌 주민
[시책 3]	농가식당 지정 및 활성화	식당 운영자

전략 1 : 안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재 친환경 농업정책은 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기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적] 아산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친화적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주요 내용

[시책 1]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및 작부다양화

- 아산지역의 농업은 쌀을 중심으로 한 특정작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못함
 -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채소, 과수, 잡곡류에 대한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임
-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대
 - 기존 친환경 농업의 개념을 수정하여 저투입, 무농약 농법을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환경친화적 농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채소, 과수, 기타 잡곡류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감
- 기존 작물을 고려한 작부체계의 구성
 - 아산농민이 재배하는 작물을 고려하여 토지의 규모,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작부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도록 함
 - 특히 작부체계는 학교급식 등과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작물다양화에 따른 농산물의 판로 애로를 해소하도록 함

[시책 2] 아산 로컬푸드 확대 및 활성화

- 아산은 현재 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2개소의 로컬푸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됨
- 아산 로컬푸드는 향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그 규모와 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아산 로컬푸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음

- 꾸러미(CSA), 농민장터 등 로컬푸드의 다양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하여 꾸러미 및 농민장터 등으로 로컬푸드 유통 경로를 보다 다양화하도록 함
 - 꾸러미는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농민장터는 주말에 아산시내에서 참여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유도하도록 함
- 아산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당에 대한 경영진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당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설정이 요구됨
 - 아울러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로컬푸드 정책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아산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수요파악 및 희망농가 교육 확대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830여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이유와 품종,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향후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시책 3] 아산시민 먹거리교육 및 시민단체 활성화

- 아산시의 친환경 농업은 생산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고, 친환경 먹거리는 소비 측면에 국한되어 상호간이 소통공간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아산시는 효과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방식을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음
-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 내 주체를 발굴하여 서로간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먹거리교육 및 수요조사가 요구됨
- 아산시 친환경 소통마당의 구축
 -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농업기술센터, 다양한 주민교육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마당을 구축하도록 함. 소통마당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위원회 형태로, 온라인 상에서는 소셜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하도록 함
- 상아산시 친환경 소통마당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가 교육자인 동시에 학습자인 형태로 상호교환적 학습회를 운영하도록 함
- 소통마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활성화
 - 친환경 소통마당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시민단체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함.

[시책 4] 친환경 도시농업 및 영농지도

- 많은 도시에서 도시텃밭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도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도시텃밭은 관행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자가소비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 도시저소득층 및 은퇴자 등을 위한 도시농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을 친환경농업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친환경 도시농장의 조성 및 농장직매장 조성
 - 도시저소득층과 은퇴자 등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시텃밭 등과 연계하여 도시농장을 조성·운영하도록 함
 -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장직매장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
- 친환경 도시텃밭의 정착 및 토종씨앗 재배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텃밭의 일부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텃밭을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경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함
 - 친환경 도시텃밭에서는 토종씨앗 등을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텃밭을 운영하도록 함
- 친환경 도시농장과 도시텃밭의 영농기술 지도지도 운영
 - 도시농장과 도시텃밭이 친환경농업으로 경작되고, 다양한 토종씨앗이 재배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인과 도시텃밭을 1:1로 기술지도 하도록 함
 - 도시농장과 도시텃밭에서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인의 자발적인 기술교육이 되도록 함

전략 2. 다양한 농촌일자리 창출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아산을 비롯한 모든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과소화·고령화되고 있는데, 이의 가장 기본적 이유는 농촌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임
- [목적] 아산의 농촌지역에 다양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가 정주 및 유입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시책 1] 특화작물 취농프로그램 운영

- 향후 중앙정부는 인구 중심의 귀농·귀촌정책에서 탈피해 영농인력 확보라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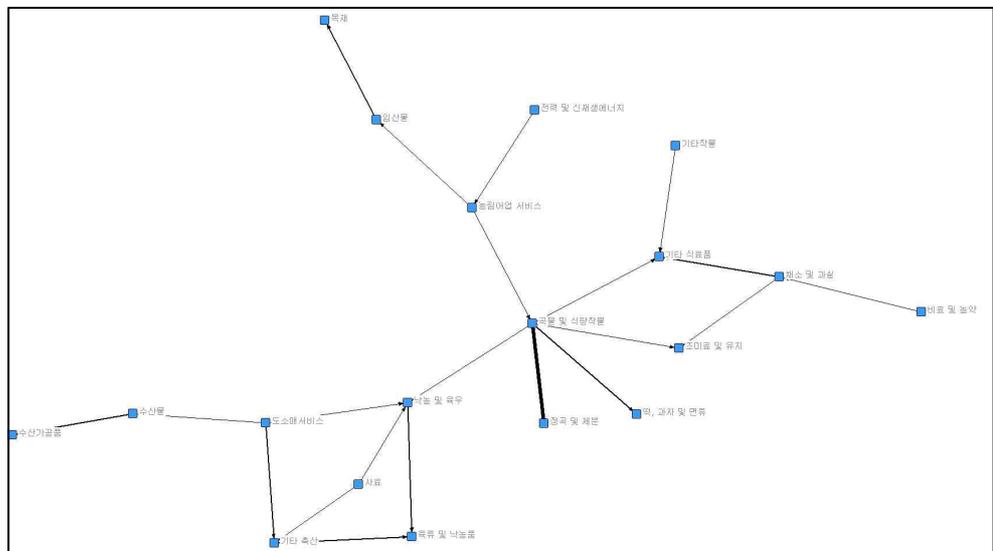
- 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즉 관련 정책이 창업농 및 취농으로 변화하고 있음
- 아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취농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화작물 취농프로그램 구성
 - 아산시가 특화도가 높은 작물 중에서 귀농·귀촌인의 선호도가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취농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 특화작물 프로그램 홍보
 - 귀농·귀촌인이 취농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 특화작물 취농프로그램 평가
 - 취농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함
 - 특화작물 취농프로그램 강사진 양성 및 교재 개발
 - 취농교육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실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작목반장 등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작목반이 함께 교육법 및 강의내용을 개발하도록 함

[시책 2] 귀농인 농촌일자리 상담 및 자원봉사 연계

- 귀농인이 영농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함
- 아산시로 귀촌하기 전의 개인역량을 아산시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즉 귀농·귀촌인의 인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내 농업농촌일자리 창구 마련
 - 귀농·귀촌인에 대해 정보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기업과 연계
 - 아산시의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지역 내 농식품 관련 기관 모임 마련
 - 지역 내 농식품 관련한 기업 및 6차산업, 영농조합, 농장, 귀농·귀촌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수시로 인력 및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감

[시책 3] 조미료 가공산업의 전략적 육성

- 아산시는 곡물, 과수, 채소 등이 골고루 재배되고 있음. 그리고 이들 작물은 각종 조미료의 제작하는 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친환경 조미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다른 지역과 6차산업화를 차별화함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조미료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조미료 가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관련기관을 우선 발굴하고, 민간중심으로 사업의 추진타당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존의 천연 조미료 시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그림 4-52] 산업연관표상 농업분야에서 조미료 및 유지산업의 위치

전략3. 다기능적 농업의 활성화

■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재 아산시의 농업정책은 주로 생산과 유통에 치중되어 있어 선진 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목적] 최근 선진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기능적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함

■ 주요 내용

[시책 1] 사회적 농장(치유, 교육농장)의 활성화

- 선진외국에서는 농업 생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다기능농업임
 - 아산시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향후 다기능적 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친환경농업 및 농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기능적 농업을 소재로 한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휴양농장의 조성 및 운영
 - 휴양농장에는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가족적인 여가문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정신질환 및 우울증, 그리고 장애우 등의 심리치유를 위한 치유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교육농장의 조성 및 운영
 - 친환경농업, 양봉, 토종채소, 전통음식 등을 테마로 한 교육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시책 2] 직판/직매장의 활성화

- 기존 재래시장 및 5일장의 농민 직판 활성화하고, 농가직판의 조직화를 지원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직판 농산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품목 소량생산농가 발굴과 고령농의 텃밭경작 활성화 등이 요구됨
- 농가가공 활성화를 통한 직판 활성화 지원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농가 가내가공의 활성화와 농민위탁가공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책 3] 농가식당 지정 및 활성화

- 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식당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임
- 그러나 현재까지 아산시에서는 별도로 농가식당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실적이 없음
- 농가식당은 도시민들이 손쉽게 찾는 방문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향후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가식당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7 문화관광분야: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 [전략-시책 체계]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특히, 민선5-6기의 시책이 ‘감동이 넘쳐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문화와 여유가 있는 도시’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시책개발에 역점을 둠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전략에 따른 시책별 비전인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실행을 위한 시책 적용 주요 대상지와 수요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9] 문화예술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산 시민/도시만들기		
[시책 1]	생활문화 활동 인프라 구축	
[시책 2]	생활문화동아리/동호회, 축제지원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시책 3]	문화취약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문화소외 지역
전략2 : 아산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과 장소마케팅		
[시책 1]	아산 문화예술 브랜드 만들기	아산시민 방문객
[시책 2]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온천역 외 3곳
전략3 :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시민력 배양 및 일자리 창출		
[시책 1]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을 연계한 문화시민력 배양	
[시책 2]	문화예술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아산(청년)예술인
전략4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과 스포츠산업 육성		
[시책 1]	전국체전 시설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산업활성화	풍기동 복합스포츠센터
[시책 2]	유소년/생활스포츠 아카데미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책 3]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전략5 : 온천체험 융복합형(치유+문화) 관광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시책 1]	온천·문화체험 상품개발과 전문병원 클러스터 조성	
[시책 2]	온천체험과 문화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책 3]	아산의 생활자산을 활용한 장소만들기 및 관광마케팅	
[시책 4]	아산체험 관광생태계 구축 : 수요, 공급을 매개하는 관광거버넌스 및 생태계 구축	아산 관광사업 종사자 아산시청

전략 1.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산 시민·도시만들기

■ 배경 및 목적

- [배경] 시민의 문화활동이 단순한 문화예술 관람에서 스스로 직접 참여하여, 창작과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하며 삶에 행복을 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정부에서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목적]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아산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골고루 행복한 도시 구현

■ 주요 내용

[시책 1]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아산시의 문화기반시설은 대부분 온양동 지역(행정동기준), 신도시인 탕정, 배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경우 문화시설 및 공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함께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



[그림 4-53]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례(세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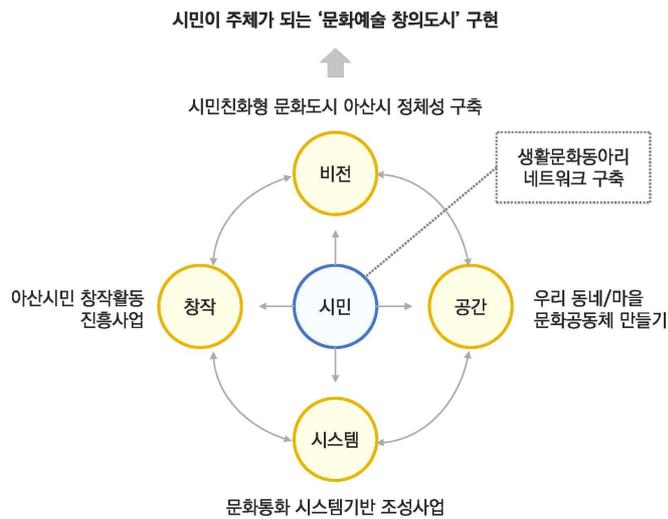
-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유휴공간을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
- 1읍1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활동 기반구축(배방생활문화센터 조성)
-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농촌형 실버영화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

[시책 2] 시민 생활문화 진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활문화동호회 창작활동 및 지역 내·지역 간 동호회 교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문화재단을 통해 동아리 활동 활성화 시책을 추진

[표 4-10] 생활문화 활동 유형

장르/유형	지원문화활동	
생활예술 /예술향유	예술창작·향유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사진, 국악, 영화
	행사참여·향수	페스티벌, 전시회, 공연, 음악회 등
생활기술 /자기개발	기술자격·교육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캘리그래피/POP, 요리(한식, 일식, 중식, 양식), 디자인, 제과제빵
	개인취미·오락	생활공예(금속/가죽/도자기 등), 요가, 바느질, 미디어(방송/UCC 제작), 원예, 마술 등
생활교류	사회문화활동	마을행사(프리마켓, 잔치 등),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상가마을(주민)공동체, 마을관련 책/신문만들기, 마을 방송
	전통교육·보존	역사/문화유산 교육



[그림 4-54]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창의도시' 구현방안

- 아산시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 확산과 건강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유도
 - 시책 기본방향은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되, 소극적/수동적에서 적극적/능동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생활권별, 지역별로 특성과 연령, 젠더(성) 등을 고려하여 섬세한 지원 추진
 - 생활문화기획가, 지원자(퍼실리테이터) 등 생활문화동호회 형성을 위한 지원 추진

[시책 3] 문화취약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아산시 내의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체험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를 통해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할 예정에 있음
- 아산 원도시 재생, 농촌 취약계층 문화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임대아파트단지, 다문화인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강화와 함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강화를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추진

전략 2. 아산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과 장소마케팅

■ 배경 및 목적

- [배경] 국내외 많은 도시들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을 통해 예술 진흥과 함께 문화산업 및 장소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음
 - 런던(London) : 뮤지컬, 빈(Wien) : 오케스트라, 로마(Rome) : 오페라, 부산 : 영화, 대구 : 오페라, 전주 : 소리(판소리) 등
 - 시민들에게도 아산시 만의 자랑거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음
- [목적] 아산시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여 문화도시로서 아산의 도시 이미지 구축 및 도시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시책 1] 아산 문화예술 브랜드 만들기

- 아산의 역사문화, 전통, 예술 자산을 소재로 하여 예술 장르와 결합된 문화예술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
 - 이순신과 마을이야기, 외암마을과 고택 이야기, 근대문화유산과 사건 등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아산 만의 고유한 문화예술 브랜드 만들기 추진
- 아산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접근방향
 - 아산시 문화예술 브랜드 위원회 설치
 - 아산시 문화예술 브랜드 선정 : 대상장르, 테마 등
 - 아산시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추진

[시책 2]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를 통한 장소 마케팅

- 기존 4개의 대표 축제를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대표 문화예술형 축제를 개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 아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
 - 기존 축제 : 테마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 볼거리 제공
 - 신규 축제 : 프린지 페스티벌(fringe festival) 등 문화예술형 축제 도입 연구 추진

[표 4-11] 아산시 대표축제(2017년 기준)

축제명	기간/장소	프로그램 내용
성웅 이순신 축제	4.28(금)~30(일) 온양온천역 주변	· 첫날 : 총무훈, 퍼레이드, 마상무예 · 둘째날 : 이순신 추모(시 낭송, 무용), 퍼레이드 · 셋째날 : 사물놀이, 퍼레이드, 음악여행
신정호 별빛 축제	7.26(금)~8.12(일) 신정호 야외음악당	· 첫날~둘째날 : 영화감상/평론 · 셋째날~넷째날 :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기획공연
코미디 핫페스트	9.23(토)~24(일) 도고 내 잔디광장	· 옷찾사토크 콘서트 · 개그 공연
은행 나무길 축제	10.12(목)~28(토) 염치읍 은행나무길	· 은행나무 길에서 공연, 전시, 체험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자료 : 아산시 홈페이지 참조



자료 : <https://www.edfringe.com/experience/what-is-the-fringe-festival>

[그림 4-55] 영국 에딘버러성을 배경으로 한 프린지 페스티벌

[시책 3] 아산 문화유산 보존과 창조적 활용

- 아산의 역사인물, 사건, 장소 등에 대한 유·무형 유산을 보존하고 창의적 활용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제고 및 볼거리 제공
 -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중앙마당 복원 및 정비
 - 고불 맹사성 기념관 건립
 - 이순신 백의종군로(白衣從軍路) 조성 추진
 - 외암 민속마을 저잣거리 조성

전략 3.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력(力) 배경 및 일자리 창출

■ 배경 및 목적

- [배경] 문화예술의 체험과 향유는 지역에 문화자본,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고, 이러한 자본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창조적 발전에 기반이 됨
- [목적] 평생교육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아산지역에 건강한 문화자본을 형성하고, 예술의 상품화와 산업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내용

[시책 1]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을 연계한 문화시민력 배양

- 100세 시대의 도래, 유아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살기좋은 문화도시 아산만들기 추진
 - 생활권단위 문화예술교육플랫폼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 유아, 청소년과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 생활 속에서 인문가치의 확산을 통해 아산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
 -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가, 아산 천주교 등 아산의 인문자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이순신 백의종군로 거리 문화제 개최
- 아산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대상별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추진

[시책 2] 문화예술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 아산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 또는 유휴공간이 밀집된 장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아산시 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활동지원
 - 우수한 문화예술인의 보유는 수준 높은 문화향유자를 만들고, 문화진흥에 기반이 됨. 아산시에서 배출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아산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활동을 지원
- 문화예술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 지속 경영가능한 문화예술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아산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

전략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과 스포츠산업 육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강한 신체, 활력 있는 생활에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육성이 필요함
- [목적] 아산시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건강한 아산 구현

■ 주요 내용

[시책 1] 전국체전 시설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산업활성화

- 전국체전 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 스포츠클럽 발굴 및 육성, 아산 체육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스포츠기업인증제 및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산 스포츠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아산 특화산업과 스포츠가 접목된 신시장 발굴 추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시책 2] 유소년/생활스포츠 아카데미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스포츠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스포츠과학센터 개소,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시책 3]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생애주기별 복지와 연계된 생활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 배방체육관 건립
 - 선장축구장 조성

전략 5. 온천체험 융복합형(치유+문화) 관광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 배경 및 목적

- [배경] 온양 온천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자원으로서 시설의 개선,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목적] 차별화된 온천체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과 브랜드화를 통해 온천관광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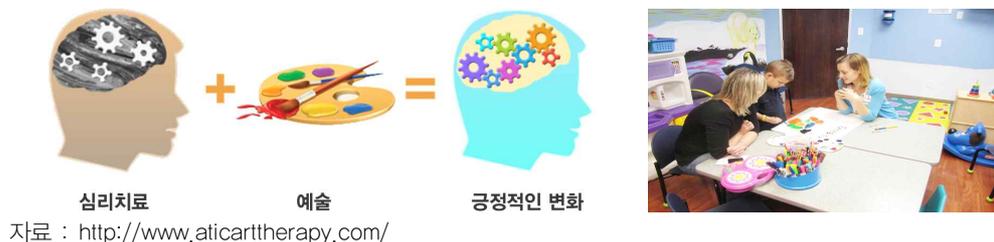
■ 주요 내용

[시책 1] 온천의료관광 융복합 산업기반구축

- 온천+의료 융복합 효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효능에 대한 체험 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온천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추진
 - 특히, 온천수의 효능을 활용한 미용제품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상품화가 부족하며, 대외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의 지원이 필요함
 - 온천수 체험센터 건립 및 관광정보제공 : 온천DB관리, 온천정보제공, 온천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제공 등
 - 온천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헬스케어 에듀센터 : 운동처방사 등 온천의료 전문인력 양성
 - 통증의학, 재활의학, 테라피센터 등 의료·미용 관련시설 유치
 - 온궁탕 개발·보급 및 음식문화거리 조성 : 아산시 대표음식 '온궁탕' 개발, 온주동 온주 맛고을 거리 조성
 - 온궁한의원 및 온궁 미용제품 마케팅강화
 - 헬스케어 제품 및 화장품 등 의료관광상품 개발

[시책 2] 온천·문화체험 상품개발과 전문병원 클러스터 조성

- 온천의 효능과 문화예술 표현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상품화
 - 문화예술 치유 센터 조성 및 힐링(온천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그림 4-56] 예술 치유 개념과 사례

- 종합병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으로 전문병원 클러스터(의료타운)를 조성하여, 온천, 문화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함
 - 예를 들어 온천과 연계한 (한방)재활전문병원+피부전문병원+뇌혈관전문병원 등 융복합



자료 : 관련 홈페이지 참조

[그림 4-57] 전문병원 클러스터로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 역할 수행(예시)

[시책 3] 아산시민 생활자산을 활용한 장소만들기 및 관광마케팅

-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찾는 공간이 관광자원화되고 있음
-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활동하는 생활공간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장소만들기를 하고 마케팅을 통해 관광명소로 육성
 - 아산 골목길/학교길 관광명소화 사업, 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명소(동네/마을맛집, 오래된 상점, 멋집/멋카페 등) 찾기와 장소만들기,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명소화
 - 아산 근대생활문화거리 조성
 - 아산 생활명소 지도 작성 및 스마트 마케팅 추진



자료 : 아산 "창구대장간" 방문기

[그림 4-58] 아산의 대장간

[시책 4] 아산체험 관광생태계 구축 : 수요, 공급을 매개하는 관광거버넌스 및 생태계 구축

- 아산시 내 관광기관, 종사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관광수요 대응형 정책협력 및 사업을 추진
 - 협의체 형식인 가칭 '아산시 관광거버넌스' 구축하여 운영 : 현안문제 토의 및 검토, 협력 방안 모색 등

4.8 사회복지분야 :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 [전략-시책 체계] 저출산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사회복지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수요자 니드(NEED)에 맞는 도시기반 조성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시책별 대상지는 아산시 전역이고 주요 수요층은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계층, 임산부,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임

[표 4-12] 사회복지정책 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시책 1]	경로당 데이 케어 프로그램 개발	노인, 국정과제와 연계
[시책 2]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1인가구, 노인가구, 빈곤층
[시책 3]	장애인 교통친화도시 조성	장애인노인 임산부
전략2 : 행복체감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시책 1]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민건강 서비스 강화	주민 고령자
[시책 2]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방문보건서비스 일원화	주민 노인1인가구
[시책 3]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지역중심 건강증진시스템 구축	아산시민
[시책 4]	엄마와 아기 가정방문건강관리 도입	산모, 아기
전략3 : 다문화 및 다세대 통합		
[시책 1]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시책 2]	다세대통합형 복지허브화 구축(장기)	노인, 청년세대,이주노동자

전략 1.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산시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가 2014년 기준 분야별 복지대상자에서 21,612명으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저소득 계층역시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절실
-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삶의 장애물 최소화

■ 주요 내용

[시책 1] 경로당 데이 프로그램 개발

- 경로당이 노인들이 주요 활동처가 됨에 따라 낮 동안 상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는 기관 중 가장 수가 많고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나
- 주간보호센터 기능과 유사한 경로당 기능의 진화로 노인의 욕구와 사회변화 지역성을 배려한 경로당의 신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자 함
- 경로당 데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취사 및 심부름 역할을 하는 도우미의 확보임
- 경로당 도우미 확보와 더불어 경로당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시책 2]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지금은 예비 노년층이라 분류되는 베이비부머(1955년부터 1963년 까지 출생자)의 무연고 사망까지 늘고 있음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공공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음. 우체국 배달부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전국에서 시도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를 (유급)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담당가구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구축(상담, 필요한 자원파악 및 연계, 서비스 직접 제공)하고 1가구 1사회복지사 매칭 제도화(조례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통·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리더를 양성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공식적 돌봄체계와 더불어 비공식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함

[시책 3] 장애인 교통친화도시 조성

- 장애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이동권 문제를 들 수 있음.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있으나 장애인 교통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 도시 전체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이동에 최적화된 도시로 만들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존하는 도시로 진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저상버스를 확충함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적 노력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아산시를 대상으로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이동 문제 해결과 시민인식 개선 운동 등의 캠페인이 필요함

전략 2. 행복체감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방문간호사의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문서비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산모, 아기, 노인 등 가정방문서비스의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목적]**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방문서비스와 건강증진 시스템을 구축함

[시책 1]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민건강 서비스 강화

- 주민자체센터, 읍면사무소 등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공시설에 건강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융복합하여 주민건강 거점으로 조성함
- 무주 안성면사무소에는 유명 건축가 정기용이 설계한 목욕탕이 있음. 정기용 건축가가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면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고 질문에 대해 “면사무소는 지어 뭘 하느냐”며, “차라리 목욕탕이나 지어 달라”는 부탁을 실천한 주민 행복체감형 사업임
 - 중요한 행정처리가 아니면 찾아갈 일 없던 면사무소는 목욕탕이 생긴 이후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 됨

- 진안군 상전면 작은 목욕탕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은 물론 서로 소통하고 이웃 간 정도 쌓아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 역할을 수행함
 - 사업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면사무소 옆 지상1층 135㎡(약41평) 규모로 신축한 것으로, 목욕탕에는 온탕, 황토찜질방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이용료는 일반인은 3천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은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1천원으로 저렴



* 자료 : <http://www.sejung.com/press-486/>



* 자료 : <http://www.newsmaker.or.kr>

[그림 4-59] 공공시설과 연계한 목욕탕 설치(사례)

[시책 2]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방문보건서비스 일원화

-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을 재편하여, 마을주민과 고령자의 상시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재편함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개편하여,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개인의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능강화와 더불어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함
- 노인인구와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방문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임.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복지허브사업의 방문건강관리는 매우 제한적임
-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할지역이 매우 넓어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찾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찾동사업(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업의 주요 전문인력인 간호사를 1인으로 확보할 것이며, 이를 각각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면 서비스의 수준이나 질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이나 사람에 따른 각각 다른 서비스의 수준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전문적이며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역사회중심의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함. 방문간호센터에서는 보건소와 찾동사업의 모든 간호사를 관리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함. 지역사회의 방문간호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함

[시책 3]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지역중심 건강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보건소 중심의 지역주민 건강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루 걸음 횡수, 투약 여부 확인, 병원 진료 안내 등을 원격으로 활용
-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소외계층의 의료혜택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쪽 영역까지 개입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의원 급 등의 지역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를 연계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지역의료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문제를 개인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통합건강증진시스템을 구축(U-Health care, 정밀의료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체제로 전환

[시책 4] 엄마와 아기 가정방문건강관리 도입

- 산전-조기 아동기는 건강 및 사회적 불평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불평등의 시작점임
- 영국 정부의 건강불평등 완화 국가전략보고서에서 건강 불평등 완화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제시
- 아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는 보편적인 간호사의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방문 대상자가 되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서비스를 받게 함
- 아동발달지체, 아동학대문제 등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에 의뢰하며, 지속방문대상 가족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전문가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함
- 영유아방문간호사는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투입되며, 보건소의 담당자, 사회복지사, 사업담당 주무관 등도 일정의 교육이수
- 영유아방문간호사는 양육 정보제공 및 교육, 양육역량에 대한 지지, 영유아 발달 및 건강사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전략 3. 다문화 및 다세대 통합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아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여성이 충청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점차 여러 가지 유형(1인가구, 이주노동자, 노인가구 등)의 세대 등이 공존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목적]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세대가 아산시의 자산이 되어 아산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임

■ 주요 내용

[시책 1]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 아산시는 이주여성이 비율이 높은 도시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천안사와 더불어 높음. 충청도 거점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아산시 소재임
- 일자리가 결혼이주여성의 최대 관심사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상담 인력은 부재함
- 미래를 위한 아산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결혼이주여성 공공기관 외국인 채용 쿼터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전담기관 신설하고 전문상담 인력을 상주시켜 체계적으로 이주여성 취·창업을 지원해야 함

[시책 2] 다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구축

- 개별화, 도시화, 고령화 등에 따라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가구(주민) 증가
- 다양한 세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성장과 참여 및 세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조성
- 다세대통합 교류센터 운영 : 기존 사회복지관 활용하여 신규센터 설치, 다세대 교류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다세대통합형 주거(주택) 및 시설 지원 : 노인과 청년세대,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공유 지원, 세대통합형 주택(주거비부담 완화), 아동노인 통합시설 조성, 노인 돌봄과 사회참여 및 영유아보육이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9 교육분야 : 학습이 일상화된 평생학습도시

- [전략-시책 체계]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기반 및 교육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분야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공교육에 대한 아산시의 주도성 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감
- [시책별 대상지와 주요 수요층] 아산시의 교육정책은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함

[표 4-13] 교육정책 실현전략-시책 체계

전략 및 시책 구분		정책 근거 및 주요 타겟 등
전략1 :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교육환경 조성		
[시책 1]	학교와 지역사회시설의 복합화	학생 시민
[시책 2]	아산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 및 협의체 설립	학생 학부모 교사
[시책 3]	학교간 협력 교육과정 도입 운영 지원	학생 교사
[시책 4]	아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제정	학생 교사
전략2 : 아산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시책 1]	아산 평생학습전달체계 구축	시민
[시책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기반 마련	학생 시민
[시책 3]	마을단위 평생학습 리더 양성	시민
[시책 4]	아산형 마을중심 돌봄 학교 운영	시민
전략3 :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시책 1]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학생 기업
[시책 2]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제정 및 센터운영	시민
[시책 3]	아산 인문도시 프로젝트 '아산르네상스'	시민
[시책 3]	아산미래장학회를 통한 아산형 인재육성지원	학생 청년

전략 1.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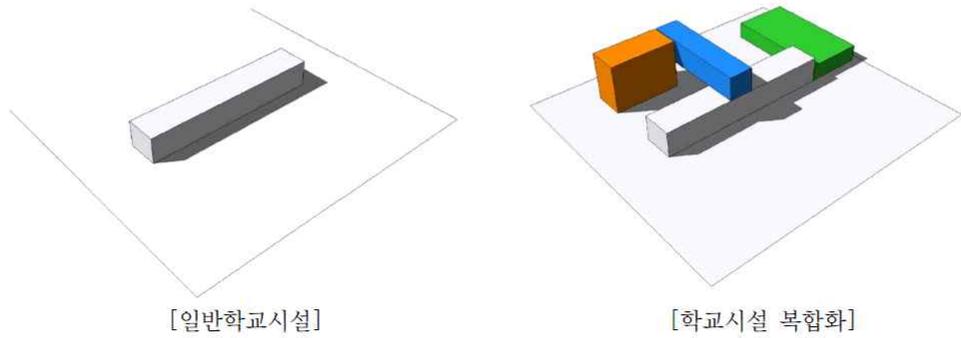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학교 밖 교실인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과 정보를 필요로 함. 지역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나누어 또 하나의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목적]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학교가 상호연결과 융복합을 통해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주요 내용

[시책 1] 학교와 지역사회시설의 복합화

- OECD(2011)의 미래학교 전망으로 지역사회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 재구조화가 포함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미래학교시설의 모습으로 복합화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은 학교의 순수교육기능인 학생들의 학습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시설로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습,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분산시설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최소화로 주민편의 극대화, 공공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효과 기대
- 아산시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 공동사용이 필요한 시설건립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아산시교육지원청과 학교설립 행정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아산시의 학교시설 복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복합화시설 관리 및 운영원칙 마련, 아산시와 교육지원청간 합리적 사업비 부담원칙 수립, 사업방식의 다변화(BTL, 위탁개발방식 등) 등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복합화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그림 4-60]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지역	도입방향	기능 및 주요시설	
도시지역 (기성시가지)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시청각실, 전시실, 박물관, 음악실 등
도농지역 (신개발지)	커뮤니티 중심시설	체육시설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체육장 등
		평생교육시설	• 도서실, 컴퓨터실, 정보검색실, Lab실, 문화강좌교실 등
농촌지역	의료 및 복지시설	편의시설	• 주차장,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보육시설	• 어린이집, Baba Care, Edu Care Center
		복지시설	•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보건시설 등
		기타시설	•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기소, 파출소, 생태공원 등

[그림 4-61] 도시유형별 도입기능 검토

-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학교부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학교부지 또는 학교건물에 설치하는 물리적 차원의 복합화를 포함함

[시책 2] 아산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 및 협의체 설립

- 아산행복교육지구란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과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충남도교육감과 아산 시장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의미함
- 2017년 3월 22일 충남교육청과 행복교육지구 MOU를 체결하고 온 마을이 학교 '행복교육도시 아산'이라는 비전 하에 공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18년 아산시시책구상)
 - 공교육혁신지원사업은 관내교사 바로알기 연수, 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운영 및 교원연수,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학교안 체험교실 운영 등 8개사업 170백만원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조성지원사업은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학교 9개소, 자생마을학교 허브센터 1개소, 학교와 마을의 공동축제 10개소지원 등 6개사업 200백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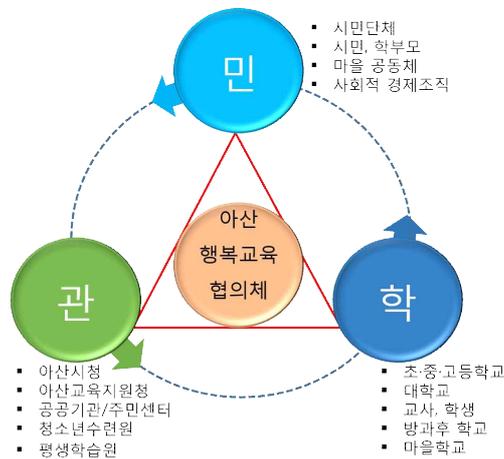
- 아산행복교육지구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향후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아산시의 독립된 공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융·복합적 추진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와 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함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시청의 협력을 통해 공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융복합 추진을 위한 가칭 ‘아산행복교육지원센터’ 를 설립·운영



* 자료 : 시흥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ppyedu.siheung.go.kr/www/index.do>)

[그림 4-6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 지역의 교육자원들을 연결하고 지역의 교육주체들을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생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적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한 가칭 ‘아산행복교육협의체’ 구축



[그림 4-63] 아산 행복교육협의체 구축방안

- 센터와 협의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독점하고 있던 교육이 역할이 지역사회에 확장됨으로써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행복교육지구가 정착될 것임

[시책 3] 학교 공동교육과정 도입운영 지원

-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산시에 입지하고 있는 10개의 고등학교는 단위학교별 독립적이고 배타적 형태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학교와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초중등교육이 창의적으로 변해야 하고, 칸막이식 사고의 틀을 벗어나, 이웃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등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과과정 운영이 필요함
- 아산시의 학교교육도 인근학교간 교사 및 학생교류 통한 협력적 교육력 제고, 학생 스스로의 학습흥미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개인 성취목표를 세우고, 학습내용설정, 적합한 학습방법 선택 등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
- 따라서, 서울시 학교간 협력교육과정이나 세종시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아산시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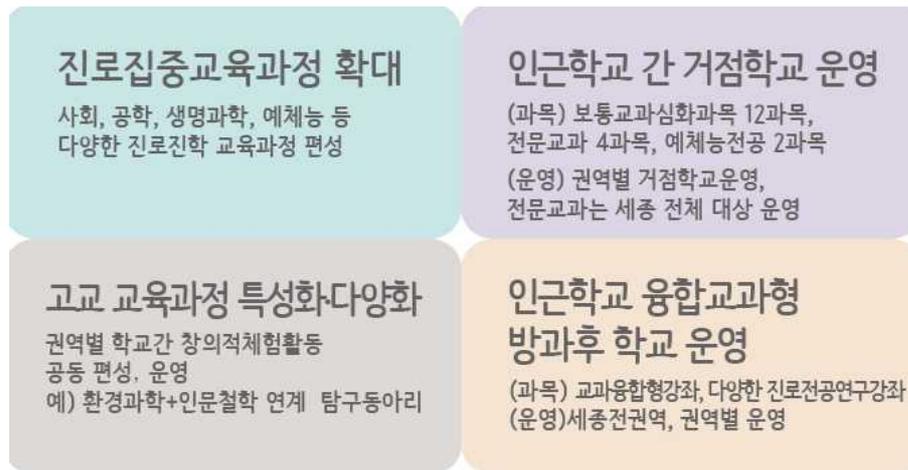
[표 4-14] 서울시 학교간 협력교육과정 운영유형

구분	내 용
학교간 협력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학교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형태 • 소수학생이 선택한 과목, 전공교사가 없어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함
협력교육과정거점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인근학교에서 학생개별 참가를 통해 공유하는 형태(거점학교 1개, 참가학교 다수) •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건(소인수 선택, 교원수급, 교실 등)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본교 및 인근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함
연합형교육과정 운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이나 특성화된 중점 과정을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 • 인접한 2-4개 학교들이 특정 교과목을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주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환하여 공동운영하는 형태

지역	학교명	교과목
북부1	대진고	3D모델링
	대진여고	(과학)과제연구, 생명과학실험, 화학실험, 국제경제
	상명고	문장론, 영상제작의 이해
북부2	불암고	사회과학방법론, 과학사 및 과학철학, 지구과학실험, 비평적 읽기와 쓰기
	서라벌고	국제관계와국제기구, 로봇기초, 생명과학실험, 미술전공실기
	재현고	심화영어회화1, 시창작입문
남부	구토고	스페인어회화1
	구일고	기초드로잉, 악기연주
	신도림고	현대문학감상, (사회)과제연구
강서양천	마포고	로봇기초
	경복여고	프로그래밍 실무
	동양고	지구과학실험, (과학)과제연구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간협력교육과정온라인지원시스템

[그림 4-64] 연합형교육과정 운영학교



[그림 4-65]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 가칭 ‘아산시 협력교육과정’과 함께 아산시 평생학습관을 아산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함

[시책 4] 아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제정

-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아산시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협력 관련 행정조직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아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인재육성, 우수교사, 외국어교육, 저소득층 기숙사 경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발전연구, 교육복지증진, 민·관·학 협력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도 제시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 아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 (목적)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 아산시 교육발전 도모
- (시장의 책무) 교육발전지원정책 수립/시행 노력, 정보제공, 교육예산제공 등
- (아산시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지원정책 연구제안,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 교육경비 보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 기타 교육발전 사항
- (교육경비보조) 보조기준액, 보조사업 범위 등

전략 2. 아산형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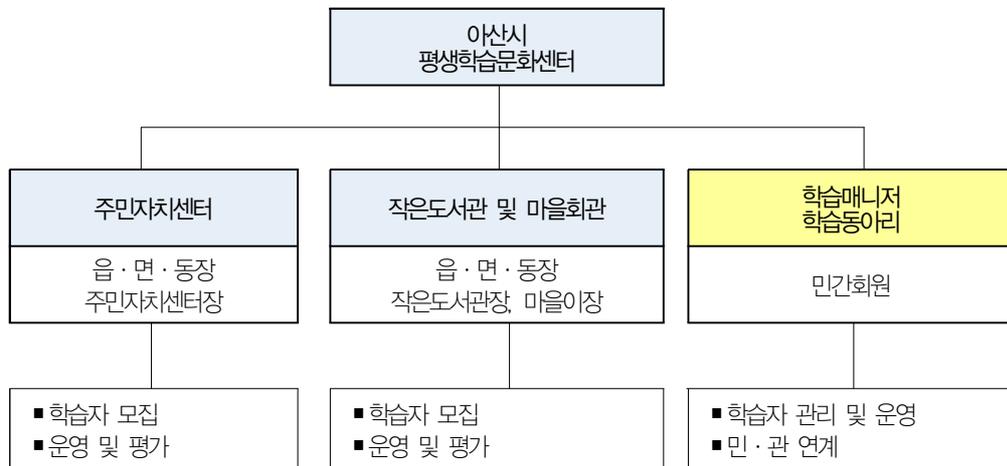
- [배경]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관 설치 등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평생학습의 이념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목적] 아산시가 실질적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주민활동, 학교와 마을의 협력, 마을단위 리더육성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주요 내용

[시책 1] 아산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모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도시정책으로 학습공간 구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특히 아산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도심에 위치한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각종 평생교육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음
- 이에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학습공간을 지역 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로 지정하는 하여 주민들의 학습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함
- 이때 평생학습문화센터는 각 센터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하되, 지역별 학습센터는 학습매니저 및 학습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과 다변화를 위해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해당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구축된 아산시 평생학습전달 체계의 주민 홍보와 브랜드화를 위해 전달체계 이름을 정하여 추진함
 - (예) 남양주시 1-2-3평생학습시스템



[그림 4-66] 남양주시 사례: 평생학습시스템

[시책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기반 마련

-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마을주민, 마을의 결사체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 교육적 내용,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임
-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 아산시 마을단위 교육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학교중심 교육사업의 극복과 지역주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운영의 실질적 동력 확보
 - 주요내용 : 시장 및 주민의 책무규정,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규정 등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약체결
 -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간 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를 위한 협약 체결
 - 아산시 초·중·고등학교, 평생학습원, 도서관 등의 공동참여
 -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수립
 - 마을교육공동체의 여건분석, 비전설정, 과제 및 전략,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방안, 시민/학생인식조사, 마을교육활동을 위한 자원조사, 마을교육 및 시민학습방안 등
- 학교와 마을간 파트너십 구축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모임 구성
 - 학교공간을 학생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사업 지역 발굴 및 운영
 - 희망 지역 및 학교를 발굴하여 시범 운영
-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와의 협력
 - 공동체지원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포함
 - 사회적경제와 마을교육공동체, 평생교육의 연계사업 발굴

[시책 3] 마을단위 평생학습 리더 양성

- 평생학습도시는 아산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자아실현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아산시 아파트단지, 도시 및 농촌마을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학습코디네이터와

마을평생교육사, 마을강사 등 마을단위 평생학습리더를 양성함

- 이를 통해 주민강사와 학습코디네이터에게는 일자리, 마을주민에게는 다양한 학습, 마을에는 성장과 소통의 장을 제공함
- 또한 마을단위 평생학습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공식적 활동 경력 인정 및 보상 체계 마련 등의 구상이 필요함

[시책 4] 아산형 마을중심 돌봄 학교 운영

- 돌봄 사업은 2004년 도입된 이후, 2016년 기준 충남 지역 430개 초등학교에서 1만 4천54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95.7%가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지역 주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육정책임
- 현재 학교 현장은 돌봄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및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초등돌봄의 정책 대상자인 초등학교 학부모는 생애주기 상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에 기여하기에 이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주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를 야기해 지역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전한 방과후학교는 지역 내 협업으로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 돌봄 교실은 상대적으로 마을협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앙부처 별로 분산되어있는 돌봄 및 방과후학교 정책을 아산시가 지역차원에서 통합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산시와 지역사회, 교육청 간의 협치와 참여가 절실함
 -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의 통합개념인 마을학교 조례를 재정함
- 아산시 마을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 수립
 -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통해 마을중심 방과후학교를 양성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
 - 이 모델은 마을기업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기업이 학교에 진입하거나 혹은 마을내 유휴공간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음
 - 또한 위의 [시책 3]에서 양성된 마을평생교육사 및 마을교사가 투입되어 지역 내 인적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실행할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별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체계가 필요.
 -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 의지와 참여도 유발을 위한 사전 연계 및 동기부여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혁신지구사업과 같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을 제안

-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돌봄 이용 수요 조사 실시
 - 방과후학교는 세금납부 기준 지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역경제 특성과 개별 학부모의 근로 및 가정 환경에 따라 돌봄교실 이용 필요에 대해 조사 하고 이에 맞는 이용서비스 및 이용대상 기준 재정립 필요
 -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개별 자원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전략 3.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역의 인재육성 정책은 국가 또는 세계수준의 우수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에는 관심이 부족함.
- [목적]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소양과 바른 인성을 소유 하고 아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산형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함.

■ 주요 내용

[시책 1]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임
- 아산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안
 -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 학교와 체험처를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통합운영
 - 진로체험활동의 운영매뉴얼 및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
 - 진로체험 인턴쉽프로그램 확대
 - 문화예술관련 기관의 적극적 참여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체험처 우선개방
 - 아산시 및 교육기관의 지역사회 일터 발굴 및 체험 지원 강화

〈금산교육지원청 진로체험 지원단 구축·운영〉

- 지원단 구축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
 - 지자체의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역 기업인협의회장, 각종 기업대표, 협회장, 학부모, 교육위원,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농업기술센터 등)
- 특징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 대부분의 지역사회 단체, 기업, 지역인사가 적극적 참여

〈부처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

- (국토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철도체험 장 등
- (문체부) 문화예술 관련 각종 체험
- (법무부) 법체험관(솔로몬파크)을 통한 법교육 체험
- (환경부) 국립공원 활용체험 프로그램
- (해수부) 해양문화 및 활동체험
- (여가부) 청소년시설 연계 각종 체험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및 활동체험

- 공공부문 체험프로그램(사업)간 연계체제 구축
- 민간부문의 교육지원에 대한 동반자 문화조성
- 경제단체의 협력강화로 기업의 참여 독려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활용한 교육기부자 지원·참여 강화
- 체험처에 대한 내재적 지원제공(감사표시, 인증패 등)

- 특히 자유학년제의 도입 예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수요 등을 파악 및 16-17년 참여 학생·학부모·교사·체험처 등의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개선·발전 방안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함

[시책 2]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

-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①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②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③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④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아산시는 성인 평생교육차원의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 아산시민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민주주의, 평등, 공동체, 지방자치, 다문화, 통일, 사회봉사, 역사, 정치, 환경, 성인지, 인권 등 교육주체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13), 경기도(15), 전북(16), 성남시(15), 안양시(17)가 시민 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16), 충북(16), 전북(16), 전남(16)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음
- 서울시는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조사·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민주시민교육은 실제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임. 이에 이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센터화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부적 사업과제로는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역량있는 강사 양성, 아산시 차원의 다양한 교재제작 및 활용, 학교 및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민주시민교육의 의무화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45호 2014.1.9., 제정]

제1조(목적) :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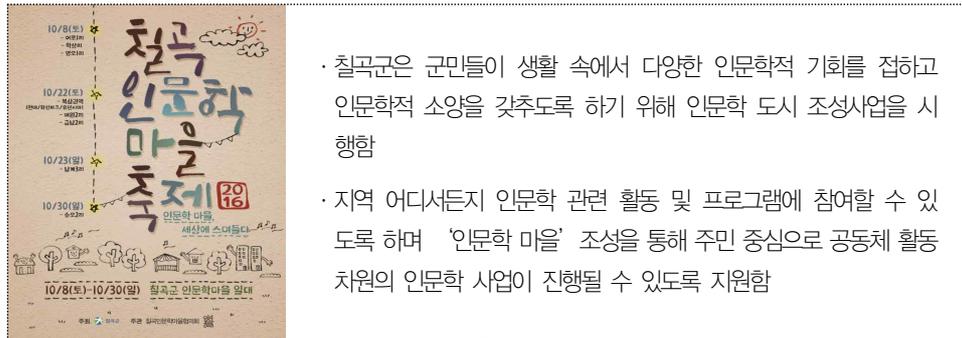
제3조(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제4조(기본원칙) :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시책 3] 아산 인문도시 프로젝트 ‘아산 르네상스’

-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개별화된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개인에게 희망을 고취시키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북돋울 수 있는 학문 분야라 할 수 있음
- 아산에는 인문학의 주제가 되는 다양한 지역 문화·역사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대학의 우수한 인문학 인프라 역시 인문학 도시로서 아산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음
- 이에 2018년을 아산 인문도시 프로젝트 ‘아산 르네상스’로 선포하고 인문학을 테마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특히, 아산 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테마별 인문학 마을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천주교 유적과 역사로 유명한 공세리 지역의 경우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현재’,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온천동은 ‘동양의 의학사상과 현대 의학’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인문학 테마를 선정해 볼 수 있음
-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다양한 농촌마을 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인문학 캠프,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마을 축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칠곡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인문학 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함
- 지역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인문학 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 차원의 인문학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4-67] 칠곡군 인문학 마을사업

[시 책 4] 아산미래장학회를 통한 아산형 인재육성

-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은 장학활동이며 사회적 자원분배의 매개, 인재양성, 사회정책의 개발과 수정, 공익성 유지, 사회통합 등 다양한 사회적기능을 가지고 있음
- 아산미래장학회는 그동안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로 지급해 왔음
- 그러나 아산미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아산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등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함
- 따라서, 아산미래장학회가 지역인재육성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육성 및 지원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장학금은 지역청년육성과 연계하여 지급함
 - 장학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 장학회의 사무국 기능강화, 장학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재단홍보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장학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개정 :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 및 청년육성 등 사업변경
 - 안정적 장학기금 확보 : 자치단체장학금 출연확충, 시민의 자발적 기부참여 활성화, 장학금 기부자 예우관리(조례, 인센티브)
 - 아산형 인재상 및 덕목 정립(예, 충남은 공생순환형 인재)
 - 기존장학금 제도 개선(예, 아산발전유공장학금) 및 새로운 장학금 신설(예, 아산시 연구동아리지원)
 - 미래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 : 아산시 미래인재 정상회의, 글로벌 미래인재 포럼, 청소년해외 교류프로그램
 - 장학생 커뮤니티 구축 지원 : 미래인재 리더십 캠프, 장학생 커뮤니티 개설 등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비전 방향성과 실천가능성 강화

- 비전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비전과 세부 정책의 정합성일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아산시 민선5-6기 핵심 키워드인 “행복”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래성 측면에서 UN-HABITAT는 향후 30년간 도시아젠다로 설정한 “포용도시”를 반영하고, “건강도시”의 개념을 발전시킴
- 이에 따라 아산시 비전을 그림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은 크게 “행복기반강화”전략과 “행복실감강화”전략으로 구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 전략으로 재편하여 제시함



행복기반 강화 (예시)	행복실감 강화 (예시)
건강한 도시구조 형성	지역문제 해결형 행복실감 작은 거점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행복실감을 위한 '아산형 커뮤니티 임대주택' 공급
환경적 지속성과 시민행복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행복 일차지
원도심 상권강화와 도시재생	자립적 연대를 통한 지역단위 작은 경제활성화
주민 행복체감형 정주환경 개선	행복실감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안심 사회 구축	평생학습과 행복연습
교통 복지와 체계개선	생활문화예술로 즐기는 행복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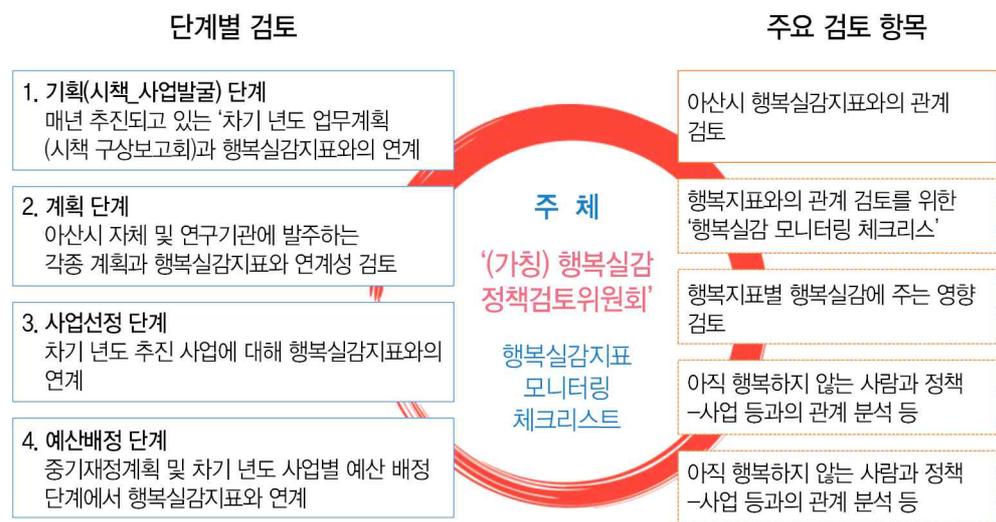
[그림 5-1] 아산시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체계

■ “비전(예, 행복) 실천” 을 지원하는 시정 시스템 구축

- 실천전략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전에 대한 공무원, 시민, 전문가의 공감각이 중요함
-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난 5-6기의 의식·무의식의 학습을 통해 아산시 비전 키워드 “행복”을 인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행복과 관계가 있고, 시민행복에 기여하였다고도 생각함
- 아산시가 시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복” 관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책 추진이 요구됨
- 시책과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 사업선정 단계, 예산배정 단계 전 과정에서 행복 관점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칭)행복실감 정책검토위원회’ 운영과 행복지표 개발 및 체계적-지속적 조사도 요구되며, 이러한 지표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개발을 통한 시정 전반에 적용-참조-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구됨



[그림 5-2] 정책과 업무와 시민행복 관계



[그림 5-3] 아산시 미래비전(예, 키워드 “행복”) 실현을 위한 체계구축(예시)

참고 문헌

- 아산시 통계연보(2015)
- 기상청, 2012, 「서울·인천·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 기상청, 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서울」
- 통계청, 2014, 장래인구추계
-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 서울시,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 도시변화진단」
-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아산시 가구소비를 중심으로(2013), 충남연구원
- OECD;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ISSUE PAPER》 통권 제213호
-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05호 현대경제연구원
- “노동유연성 83위... 개혁 지금 안하면 4차산업 ‘낙오’” (헤럴드경제, 2016.1.20.)
- 박세훈·정윤희·박근현, 2013, “도시인구 감소 실태와 도시계획 대응방안”, 《국토정책브리프》국토연구원
- 경기도, 2015,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연구」
-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 경기도, 2015,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연구」
-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2017
- OECD, 2016, “Poverty rates and poverty gaps”, OECD Factbook 2015-16
- 임준홍 외, 2016, 「충청남도의 빈집 실태와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 충남연구원,
- 충남연구원, 2017.11.13, 충남 외국인 주민현황,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스 35호.
- 김용창,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편의 공유 도시”,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 문은숙·서명희, 2015,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문은숙·서명희, 2015,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OECD정책브리프(2013.12.16 제152호 참조
- 오용준 외(201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충남연구원

충청남도(2015.8), 일반재산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현황조사 연구

충청남도(2016. 12)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도로교통공단(2016. 9), 교통과학연구브리핑 제10호

울산광역시(2015. 9)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

김원철(2016), 충남 생활도로 교통안전 증진방안

사공정희 외(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전략,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외(2014)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충남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2016), “올림픽·패럴림픽을 대비한 배리어프리화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2015.12)

경기도, 2015,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연구」.

기상청, 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서울」.

기상청, 2012, 「서울·인천·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김동근·김상조 외, 2017,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유연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출간 예정).

문은숙·서명희, 2015,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박세훈·정윤희·박근현, 2013, “도시인구 감소 실태와 도시계획 대응방안”, 《국토정책브리프》, 422호, 국토연구원.

서울시,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 도시변화진단」.

서울연구원, 2016,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한울.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 도전받는 공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UN 해비타트III 배경 및 주요결과”.

임준홍 외, 2016, 「충청남도의 빈집 실태와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 충남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ISSUE PAPER》 통권 제213호.

통계청, 2014,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3~2040」.

國土交通省,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に基づく立地適正化計画”.

國土交通省,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2015.6.1. 발표자료)

OECD, 2016, “Poverty rates and poverty gaps”, OECD Factbook 2015-16.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05호, 2016.8.12., 현대경제연구원.

“충남 외국인 주민현황”,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스》 35호, 2017.11.13., 충남연구원.

서울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4426>)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sharecityseoul/>)

사회적기업 어반하이브리드 홈페이지(<http://urbanhybrid.co.kr>)

강동구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서울시 건강·식품위생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

서울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http://penta5404.blog.jp/archives/26658262.html>

<http://kanghanbit1.blog.me/22109833751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avia_blog&logNo=221033856517

<http://www.knn.co.kr/149926>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03846612809968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2&dirId=12031121&docId=243738128&qb,](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2&dirId=12031121&docId=243738128&qb)

<https://www.edfringe.com/experience/what-is-the-fringe-festival>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ppyedu.siheung.go.kr/www/index.do>)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간협력교육과정온라인지원시스템

“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5.7.22.)

“서울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시설 골고루 확충” (서울시 보도자료, 2012.3.23.)

“외국인주민 40만 시대「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서울시 보도자료, 2014.5.9.)

國土交通省,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2015.6.1. 발표자료)

國土交通省,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に基づく立地適正化計畫

강동구, 2017, “건강도시 리플렛”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컨퍼런스 발표자료(2017.9)

충남도 보도자료(<http://www.chungnam.net>) 2017.9.28.

연합뉴스, 주차난 해소에 사활건 지자체, 2016.9.9.

“강동구 22곳·강서구 42곳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본격 확대운영” (서울시 보도자료, 2017.4.26.)

강동구, 2017, “건강도시 리플렛“.

“노동유연성 83위... 개혁 지금 안하면 4차산업 낙오” (헤럴드경제, 2016.1.20.)

“따릉이 ‘타보니 좋더라!’,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내 손안에 서울, 2017.7.31.)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대 시대 연다” (내 손안에 서울, 2017.3.20.)

“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출선수범 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5.7.22.)

“서울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시설 골고루 확충” (서울시 보도자료, 2012.3.23.)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서울시 보도자료, 2014.5.9.)

(부록 1) 아산시 정책(사업)에 대한 공무원 의식조사

문화관광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배방생활문화센터 조성(리모델링) 공사	진행(2017~)	3.408	.8178
2] 천안아산 복합 문화 정보 센터 건립	진행(2016~)	3.662	.9084
3]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양적·질적 확대: 15년 28회 ⇨ 16년 43회	진행(2015~)	3.722	.9392
4]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2018~)	3.589	.8428
5]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중앙미당 복원 및 정비 공사 시행	완료(2015)	2.742	.9554
6] 고불 맹사성 기념관 건립	완료(2017)	3.152	.9916
7] 이순신 백의 종군로 조성사업	진행(2016~)	3.107	1.0010
8] 아산 대표음식 '온궁탕' 개발	완료(2016)	2.974	1.0939
9] 외암 민속 마을 자갓거리 조성	완료(2014)	3.451	.8881
10] 아산 코미디홀 운영	-	3.191	1.0081
11] 충남최초 장난감도서관 개관	완료(2012)	3.329	1.1085
12] 선장축구장 조성	완료(2014)	3.229	.9563
13] 모종 시민체육공원(야구장) 조성	완료(2014)	3.342	.9498
14] 사격훈련장 건립	완료(2015)	2.819	.9868
15] 국민체육센터 건립	완료(2015)	3.705	1.0430
16] 배미수영장 신축	완료(2016)	3.843	.9536
17]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완료(2016)	3.804	.9109
18] 아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완료(2016)	3.821	.9244
19] 이순신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수·보강	완료(2016)	3.601	.9343
20]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개소	진행(2017)	3.373	.9451
21] 장애인 전용 체육관	진행(2016~)	3.647	.8920
22] 배방체육관 건립	진행(2017~)	3.421	.9868
23] 선장축구장(추가1면) 조성	진행(2016~)	3.074	1.0207
24] 프로스포츠 구단 연고지 유치 : 아산무궁화축구구단 창단 결정(16.07월) / 아산 우리은행 위비 여자농구단 홈 개막(16.11월)	완료(2016)	3.073	1.2101
25] 온천산업 활성화 :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온천을 이용한 상품화 / 온천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진행(~2017)	3.921	1.0035
26] 영인산 편익시설(캠핑장, 공중화장실 2동 등) 확충	-	3.737	1.0082
27] 미군기지 이전 관련 서북부권 복합레저타운 조성 : 쌀조개섬 복합관광지 조성(문화관광) / 외국인 주거단지 개발(지역도시) 등	진행(~2026)	3.483	1.0621
28] 은행나무길 가로공원(차없는 거리) 조성 [8]	완료(2016)	4.053	.9784
29] 아름다운 쌀조개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	진행(2015~)	3.531	1.0423
30] 장항선 폐철도 활용 관광 활성화 : 장항선 폐철도 활용 관광활성화 추진(폐역사(구 도고온천역) 리모델링 ⇨ 레일바이크 운영(구 도고온천역~선장간이역, 왕복 5.2km)	-	3.596	1.0275
31] 아산천안 시티투어 계절별 상품 공동개발 및 운영	-	3.647	.9965

사회복지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감염병 전문가 양성 및 연중 감염병 예방행동수칙 홍보	-	3,732	.9052
2]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DMAT (재난응급의료팀) 운영	진행(2016~)	3,769	.9221
3]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의료체계 확충 : 아산충무병원 개원(15.03월, 275병상)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16.04월) / 당정 동산보건진료소(15.11월), 신창보건지소(16.06월), 송악보건지소(16.12월) 준공	완료(2016)	4,333	.8584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진행(~2017)	3,380	.9876
5] 육아부담 경감 [6]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환경 개선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진행(2014~)	4,079	.9100
6]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진행(2014~)	3,850	.9985
7]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공급 일원화	-	3,797	.9622
8]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진행(2013~)	3,816	.9165
9] 독거노인 직원 간 1:1 결연 추진	진행(2014~)	3,086	1,1012
10] 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	3,382	1,1095
11] 자원봉사단 연계 방문보건 장애인·독거노인 대상 목욕 지원	-	3,725	.9816
12]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점진적 추가 설치	완료(2016)	3,526	.9487
13] 행복키움 지역보호체계 구축 : 읍면동 인적안정망 운영 / 읍면동 복지허브화(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추진 /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지역 온양3동 선정	진행(2014~)	3,431	.9649
14]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완료(2016)	3,298	.8929
15] 당정 한마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	완료(2016)	3,146	.9194
16] 금연환경 조성(금연거리 및 아파트 지정) : 신정호수공원,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용화-PARKO파트	-	3,699	.9739
17] 자살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매뉴얼 개발 추진	완료(2016)	3,480	1,0789
18]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조성	진행(~2021)	3,243	.9833
19]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진행(~2019)	3,513	.8839
20]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진행(2011~)	3,380	.9024
21]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확대	-	3,362	.9667
22]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설립	완료(2017)	3,490	1,0331

산업경제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충남 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융합지구 조성	계획(2018~)	3,580	.8992
2] 친환경 수소차 산업 육성 국가 산단 조성	계획(2017~)	3,703	.9583
3]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역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 등	완료(2016)	4,137	.8512
4] 대기업·중소기업·전통시장 상생협력	진행(~2017)	3,848	.9574
5] 착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외국인 노동 : 외국인고용실태통계작성 /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유치 확정(출입국관리 및 고용노동부무지원) / 외국인 여성노동자 쉼터 운영(2015~) 등	진행(2015~)	3,507	.9135
6] 착한 일자리 창출 : 기반 구축 :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확정 /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충남최초 생활임금 시행 /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 제정 및 시상 / 찾아가는 '노동상담실 운영(2012~, 충남최초)	진행(2016~)	3,770	.8572
7] 착한 일자리 창출 : 복지 지원 : 직장폐쇄로 인한 생계곤란 노동자 긴급 복지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개소 예정	완료(2017)	3,641	.9432
8] 착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청소년 노동 :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제정 / 아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2016)	3,830	.9233
9] 착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여성 노동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온양온천역 역세권 내 이전 개소	완료(2016)	3,758	.8887
10] 착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고령자 노동 :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관내 7개 아파트)	진행(2016~)	3,739	.9015
11] 착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기타그룹 노동 : Hi-School 아산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모든 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사, 월 3만원) / 산업단지 공동통근 전세버스 운행 지원(2개소)	진행(2014~)	3,570	.9056
12]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진행(2015~)	3,791	.8402
13]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행(2015~)	3,778	.8827
14] 아산 DC1일반산업단지	완료(2015)	3,833	.8546
15]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완료(2015)	3,821	.8492
16] 인주일반산업단지	진행(2016~)	3,752	.8832
17] 탕정일반산업단지	진행(2016~)	3,837	.8619
18] 음봉복합일반산업단지	진행(2017~)	3,780	.8737
19]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 전담조직 신설 / 관내 소재 대학과의 연계 국제포럼 개최 / 아산 공동체경제 민간네트워크 창립 → CB센터 민간위탁 추진 / 성매매 우려지역 속칭 '장미미울' 기능전환 추진 →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조성)	진행(2014~)	3,712	.9296
20]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아산시 주민참여마을만들기 지원에 관련 조례 제정 /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아산시 사회적경제 5개년(2011~2015) 1·2차 계획 수립	진행(~2016)	3,654	.9271
2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추진 : 중관내대학(순천향대) 사회적경제교육(교양과목2학점)시행 / 고등학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재 제작 및 교육시행	진행(2015~)	3,549	.9930
22]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 사회적경제 시설비 지원 사업 시행 / 사회적경제 경영비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전산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방송홍보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지원사업 : 노동관계 상담, 법률컨설팅 등 지원	진행(2012~)	3,634	.8641

교육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도서관 설립 (중앙도서관, 탕정온샘 도서관 등)	완료(2016)	4,288	.7837
2] 대학교 개교 (경찰대학, U10아산캠퍼스 개교 등)	완료(2016)	3,895	1.0206
3]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설립	진행(2017~)	3,961	.8950
4] 평생학습문화 확산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활성화(공립 3개소·사립 25개소)	진행(2015~)	3,935	.8786
5] 초·중·고등학교 개교·이동·전환	진행(~2017)	3,875	.8324
6]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	-	3,771	.9140
7]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전체 초교로 확대 [9]	진행(2010~)	4,026	.9131
8] 아산스마트스쿨 운영	-	3,622	.9647
9] 관내 모든 초·중·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진행(2004~)	3,730	1.0733
10] 내고장 학교다지기 운동	-	3,471	1.0825
11]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1회)	완료(2016)	3,614	1.0268
12] 온 마을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아산 시민참여학교 운영(9개소 운영)	-	3,477	1.0329

환경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주민과 함께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 : 신규5개소 / 사후관리 36개소	진행(2016~)	3,712	.8711
2] 주민과 함께하는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 : 신규2개소 / 사후관리 3개소	진행(2016~)	3,627	.8802
3] 하천 환경정비 및 생태습지 실개천 복원 추진	진행(~2021)	3,804	.8355
4] 상수도시설 확충 [7]	진행(~2019)	4,072	.8307
5] 하수도시설 확충 [5]	진행(~2018)	4,092	.8457
6]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마을세탁기업 / 유리온실 / 곤충바이오시설 / 친환경정보센터 / 생태공원 조성 등	진행(~2018)	3,804	.9463
7]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2단계)	진행(~2018)	3,563	.9972
8]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진행(~2018)	3,673	.9923
9] 녹색건축물 기반 구축	진행(2015~)	3,673	.9585
10] 친환경 공공건축 선도(패시브하우스 건축공법 보급·확대)	진행(~2018)	3,804	.9109
11] 온실가스 감축사업 UN등록	완료(2016)	3,569	.9717

농업농촌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친환경 가공 및 체험시설 준공	완료(2016)	3.444	.9658
2]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세부실천계획 수립	진행(~2021)	3.480	.9348
3] 친환경 쌀 지원	-	3.503	.9742
4] 아산 로컬 푸드(Local Food) 확대 및 활성화	진행(~2025)	3.974	.9173
5] 아산농산물 공동브랜드 내실화 및 마케팅 강화	진행(~2025)	3.922	.9071
6] 향토자원기반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진행(~2025)	3.692	.9364
7] 로컬푸드시스템 확대	진행(~2019)	3.869	.9368
8] 농업단지조성	완료(2016)	3.425	.9082
9]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준공	완료(2015)	3.431	.9717
10] 재배단지 조성	완료(2016)	3.318	.9119
11] 지역 협치 농정 기반조성 : 농업 회의소 설립지원 사업 공모(농림축산식품부)선정 / 농어업 발전 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 / 아산형 3농혁신 위원회 창립 및 운영 활성화 / 충청남도 지역주민과 농협이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선정 / 아산 맑은쌀 유통 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사1촌, 1부서1촌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 영세농업인 지원 확대 등	진행(~2017)	3.497	.9009
12] 농가소득 향상 기반조성 : 농산물 유통확대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 가공용 벼 계약재배 확대 및 가공시설 지원 / 아산 쌀 재배능가, 70% 이상 판매처 확보 /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진행(~2017)	3.664	.8836
13]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	3.667	.9597
1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진행(2016~)	3.640	.9143
15] 농기계 대여은행제 확대 운영,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완료(2017)	3.664	.9058
16]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3.539	.8603

지역도시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아산의 신 성장 동력 신도시 개발 : 도시개발	진행(~2020)	3,993	.8545
2] 수도권 전철1호선 당정역 신설	진행(~2019)	3,941	.9713
3]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선정 추진	진행(~2020)	4,007	.9098
4]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진행(2015~)	3,719	.8845
5] 아산발전의 중심축 원도심 개발 : 도시재생 : 배방원도심(440,000㎡) 도시재생(아산시, 2016~2020)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진행(~2020)	3,915	.9455
6] 아산발전의 중심축 원도심 개발 : 온천동 일원 주민참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아산시, 2016~2018) : 공모선정	진행(~2018)	3,954	.9129
7] 성매매 밀집·우려지역 속칭 '장미마을' 특화거리 조성 추진	진행(~2020)	3,863	1,0004
8] 아산발전의 중심축 원도심 개발 : 도시개발	진행(~2020)	3,900	.8651
9] 아산발전의 중심축 원도심 개발 : 공동주택	진행(2016~)	3,682	.9617
10] 공원 및 산책로에 칼로리 안내판 설치	-	3,255	.9426
1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개 사업)	-	3,456	.8966
12]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 사업)	-	3,483	.8305
13]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9개 사업)	-	3,384	.9041
14] 신규마을 조성사업 (1개 사업)	-	3,267	.8733
15] 재해 및 사고 예방사업	진행(~2019)	3,836	.9381
16] 국제안전도시 공인 (2017)	진행(~2017)	3,579	.9801
17] 방범CCTV 및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확대	진행(2016~)	3,961	.8950
18]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진행(2014~)	4,150	.7928
19] 시민 참여 활성화 건강 도시 조성 [3]	-	3,855	.8720
20] 아산시 건강걷기 지도 제작·배포	완료(2016)	3,490	.9809

교통 분야

정책(사업)명	기간	정책·사업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마중버스·마중택시 확대	완료(2017)	3,908	.9274
2] 구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및 태양광시설 설치	진행(~2017)	3,680	.9223
3] 공영차고지 조성 :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용지(4,060㎡) 조성 / 모종동 공영 노외 주차장(1,928㎡) 조성 / 복합(화물·버스) 공영차고지(36,396㎡) 조성(2016~2019)	진행(~2019)	4,000	.8192

(부록 2) 아산시 개발행위허가자료에 기초한 난개발 우려지역 공간시뮬레이션

1. 연구의 개요

-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개발행위는 이로 인한 영향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으로 인하여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특히 과거 준농림지제도 도입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의 개별입지 난립과 같은 무계획적 토지이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환경파괴, 지역주민과의 갈등, 우량농지 훼손, 기반시설 공급단가 상승 등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뼈아픈 경험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정 등을 통하여 사전적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질서 있는 개발행위 유도 및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증가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규제완화로부터 발생하는 난개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적절히 예측해봄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관리 방안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표고 및 경사와 같은 물리적 여건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혹은 규제강화와 같은 정책변수로 활용성이 있음
- 가령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표고의 최소기준을 높일 경우 기존에 최소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발 가능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물론, 동일한 논리를 경사 기준에도 적용 가능함
- 지자체 입장에서는 표고 및 경사 기준의 강화/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관내 어디를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사전에 추정해봄으로써 향후 개발수요에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에서는 충남 아산시 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 건수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개발행위 허가기준 즉, 표고와 경사가 개발행위 발생빈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허가기준을 바꿀 경우 발생빈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여 표고 및 경사 기준의 강화/완화 정도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실증적 분석정보를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함

2. 분석방법론

- 개별 개발행위 발생패턴은 아산시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개발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구득 가능성이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증 분석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수로 활용이 용이하고 자료구득이 가능한 두 가지 변수 즉, 표고(변수1)와 경사(변수2) 만을 고려하여 각 변수별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변수 기준을 바꿀 경우 개발행위 발생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³⁰⁾

(1) GWR(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개별 개발행위의 발생과 관련된 정책변수들의 영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 이후 OLS)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표고와 경사를 독립변수로 놓고 개별 개발행위 허가/협의 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OLS로부터 추정된 회귀계수는 분석대상지 전체를 아울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단일 추정치’에 해당함
- OLS로부터 추정된 회귀계수는 대상지 내에서도 표고나 평균의 증감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 즉, 개발행위 허가/협의 건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무시한 분석결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가 명확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가중회귀분석(이후 GWR)을 활용할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의 지역별 편차를 살펴볼 수 있음
- GWR은 서로 인접한 공간단위일수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성이 유사할 것이라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을 전제로 이러한 관계성 혹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공간단위 각각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임
-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집계는 읍면동이나 집계구 등 다양한 공간단위를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를 100m 크기의 격자로 분할한 뒤 각 격자를 공간단위로 적용하여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구축함. OLS에서는 공간단위를 일반적으로 관측단위로 지칭함

30) 이러한 정책변수들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전제로 함

- 이는 OLS 분석결과 도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종의 자료 전처리 과정이지만, GWR의 경우 각 격자별로 회귀계수가 도출되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지역별 편차를 단계구분도(choropleth map)로 시각화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GWR의 명확한 장점으로 볼 수 있음
- 각 격자별로 회귀계수가 도출된다는 것은 관측단위의 개수만큼 회귀계수를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래 (식1)은 GWR을 통하여 관측단위인 100m 격자별 회귀계수 추정식을 정의함

$$y(j) = \beta(j)_0 + \beta(j)_1 X_1 + \dots + \beta(j)_i X_i + \dots + \beta(j)_m X_m + \epsilon \quad (\text{식1})$$

- 위 식에서 $\beta(j)_i$ 는 단위지역 j 에서 i 번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y(j)$ 에 미치는 영향력 즉, GWR 회귀계수를 나타냄
- 단위지역 간 공간적 근접성에 따라 GWR 회귀계수가 유사한 값으로 추정되도록 공간적 자기상관성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격자들 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줄어들도록 공간가중치(spatial weight)를 정의함으로써 이를 수행함
- 다양한 함수식으로 공간가중치를 정의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통 가우시안 함수(Gaussian function)를 적용함. 아래 (식2)는 가우시안 함수를 기반으로 정의한 공간가중치를 나타냄

$$w_{ij} = \frac{1}{\sqrt{2\pi}\sigma} e^{-\frac{d_{ij}^2}{2\sigma^2}} \quad (\text{식2})$$

- d_{ij} 는 격자 i 와 격자 j 간 지리적 직선거리를 의미하고 σ 는 가우시안 함수의 대역폭(bandwidth)을 나타냄³¹⁾
- 대역폭이 작을수록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격자들에 큰 공간가중치 값이 부여되고, 클수록 먼 거리에 공간가중치가 큰 값이 할당됨
- 해석적 측면에서 작은 대역폭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가 가까이 인접한 격자들일수록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 이와는 반대로 큰 대역폭은 가까이 인접한 격자들 간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지리적으로 먼 지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두 변수들 간 관계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나타냄
- OLS에서는 아래의 (식3)과 같은 행렬식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함

$$\hat{\beta} = (X^T X)^{-1} X^T Y \quad (\text{식3})$$

31) 격자 i 와 격자 j 간 거리는 엄밀히 표현하면 각 격자의 중심점들 간 직선거리임

- 위 식에서 X 는 총 r 개의 독립변수별로 n 개의 실측값으로 구성되는 $n \times (r+1)$ 차원의 행렬을 나타냄. Y 는 n 개의 실측값으로 구성되는 $n \times 1$ 차원의 행렬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hat{\beta}$ 은 r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 및 한 개의 상수항으로 구성되는 $(r+1) \times 1$ 차원의 행렬로 귀결됨. 즉, 독립변수의 개수만큼의 회귀계수 및 상수항이 추정치로 산출되는 것임
- GWR의 경우에는 관측단위(혹은 공간단위 즉, 100m 격자)별로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관측단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항(term)이 추가되어 아래의 (식4)와 같은 행렬 형식으로 나타냄

$$\hat{\beta}(i) = (X^T W(i) X)^{-1} X^T W(i) Y \quad (\text{식4})$$

- (식4)에서 $W(i)$ 는 아래의 (식5)와 같은 행렬을 나타냄

$$W(i) = \begin{pmatrix} w_{i1} & \cdots & 0 \\ \vdots & \ddots & \vdots \\ 0 & \cdots & w_{in} \end{pmatrix} \quad (\text{식5})$$

- (식4)의 공간가중치 행렬 $W(i)$ 를 항등행렬(I)로 치환하면 GWR 회귀계수 추정결과인 (식4)는 OLS 회귀계수 추정결과인 (식3)으로 귀결됨
- 엄밀히 정의하면 (식4)는 아래와 같은 (식5)의 각 행을 나타냄
- 즉, (식5)에서 첫 번째 행은 공간단위 1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 개의 상수항 및 r 개의 독립변수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동일한 방식으로 공간단위 n 에 대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에 제시된 (식6)의 마지막 행으로 요약할 수 있음

$$\beta = \begin{pmatrix} \beta_0(1) & \cdots & \beta_r(1) \\ \vdots & \ddots & \vdots \\ \beta_0(n) & \cdots & \beta_r(n) \end{pmatrix} \quad (\text{식6})$$

- 상기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내 모든 관측단위 즉, 공간단위인 100m 격자별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해낼 수 있음
- OLS에서는 회귀계수 값이 한 개로 추정되지만, GWR에서는 공간단위마다 추정되기 때문에 각 공간단위에서의 회귀계수 값을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함으로써 대상지 내에서 표고 값과 개발행위 허가/협의 건수 간 상관관계의 편차가 어떠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는지 명료하게 확인해볼 수 있음. 이는 GWR 활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임

(2) 향후 개발행위 발생빈도 예측치 추정

- GWR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격자단위로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대상지 내 표고와 경사 값에 따른 개발행위 발생빈도를 추정해볼 수 있음
- 그런데 GWR 회귀모형을 이용한 발생빈도는 독립변수인 표고 및 경사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바뀔 경우 추정되는 발생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표고 기준을 완화하여 가령 기준에는 표고 50미터까지는 개발행위가 허용되었으나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30미터까지만 개발행위 허용이 가능한 기준으로 바뀌는 경우, 기준에는 40미터 지점에서 개발행위 허용이 가능했으나 바뀐 조례 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점에서 개발행위 허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GWR 회귀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표고 및 경사 독립변수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각 격자별로 발생빈도 추정치를 계산하고 전체 추정빈도에서 각 격자별 추정빈도의 비율을 계산함
- 격자별 비율 값이 클 경우 그에 비례해서 향후 개발행위 발생 시 해당 격자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여지 즉,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전제함. 개발 잠재력(DP: Development Potential)은 아래의 (식7)과 같이 정의함

$$DP = \frac{\hat{y}_i}{\hat{Y}} = \frac{\hat{y}_i}{\sum_{i=1}^n \hat{y}_i} \times TEC \quad (\text{식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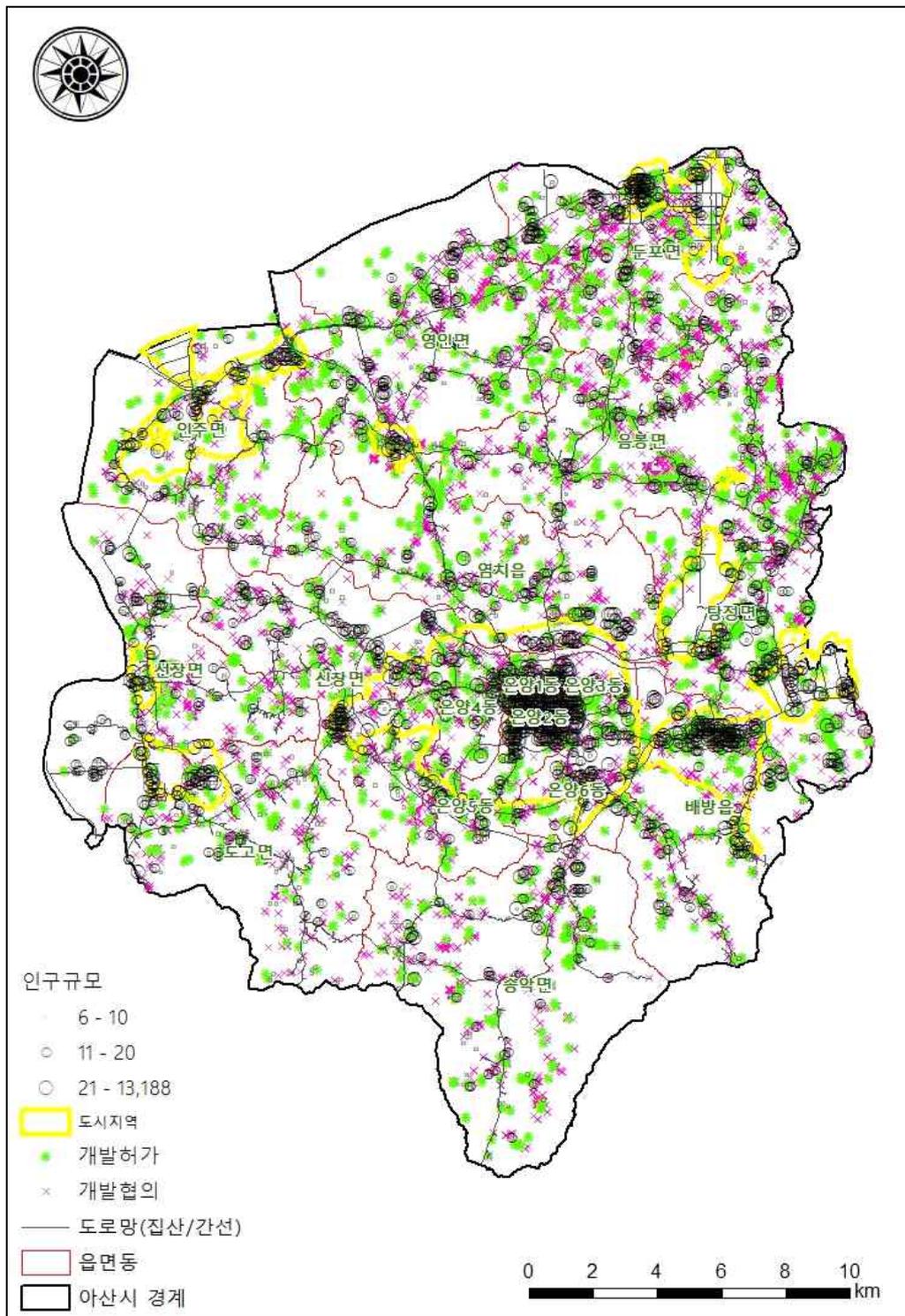
- (식7)에서 \hat{y}_i 는 공간단위 i 에서 GWR 회귀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개발행위 발생빈도 예측치를 나타내고, TEC 는 개발행위의 총 예측 발생빈도(Total Expected Count)를 나타내는데 이는 시나리오 형태로 설정되는 값임
- 예를 들어, TEC 값을 10,000으로 설정했다면 시나리오 상에서 가령 향후 10년간 대상지 내에서 10,000건의 개발행위가 발생함을 가정한 것임. TEC 값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령 아산시 개별 개발행위 실증자료가 과거 10년 동안 10,000건의 개발행위 허가/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상황이 향후 10년 동안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TEC 값을 10,000건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식7)을 바탕으로 표고 및 경사 기준의 변경 및 향후 발생빈도 등을 파라미터로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만일 TEC 가 주어진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용 기준을 50미터에서 30미터로 조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경우, 30미터 이상의 격자에서는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0으로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hat{y}_i 값이 0이 되는 공간단위들이 증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hat{Y} 값은 크게 감소할 것이 자명함

- 따라서 *TEC*가 시나리오 상에서 상수로 설정된 상황에서 개발행위 허용이 원천 차단된 고도 30미터 초과 공간단위의 경우 예상되는 발생빈도가 0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단위들이 증가할수록 30미터 이하 공간단위에 대해서만 *TEC*를 배분한 값이 증가하게 됨
-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5,000건의 개발행위가 향후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함
-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로 경사는 동일한 상태에서 50미터 표고기준을 적용할 경우 GWR 회귀모형으로부터 추정된 \hat{Y} 값이 10,000이고 공간단위 *i*에서의 개발행위 예상빈도가 4건인 경우, *DP* 값은 2건($= 4 \div 10000 \times 5000$)으로 추정됨
- 만일 50미터 표고기준을 30미터로 낮추어 개발행위 규제를 강화한다면 50미터 기준에서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공간단위가 30미터 기준에서는 0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총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감소하여 \hat{Y} 값이 10,000에서 5,000으로 줄어든 경우 *DP* 값은 4($= 4 \div 5000 \times 5000$)로 증가하게 됨
- 이는 예상되는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표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남은 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시하는 것임
- 따라서 표고기준을 낮추어 개발행위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발행위 예상빈도 즉, 개발 잠재력은 표고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단위로 집중되고 전체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지리적 공간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표고기준과 함께 경사기준을 함께 조정할 경우 다양한 조합의 시나리오를 파생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현재까지의 개발행위 발생빈도와 관련한 추이 역시 *TEC* 값에 반영할 경우 시나리오 조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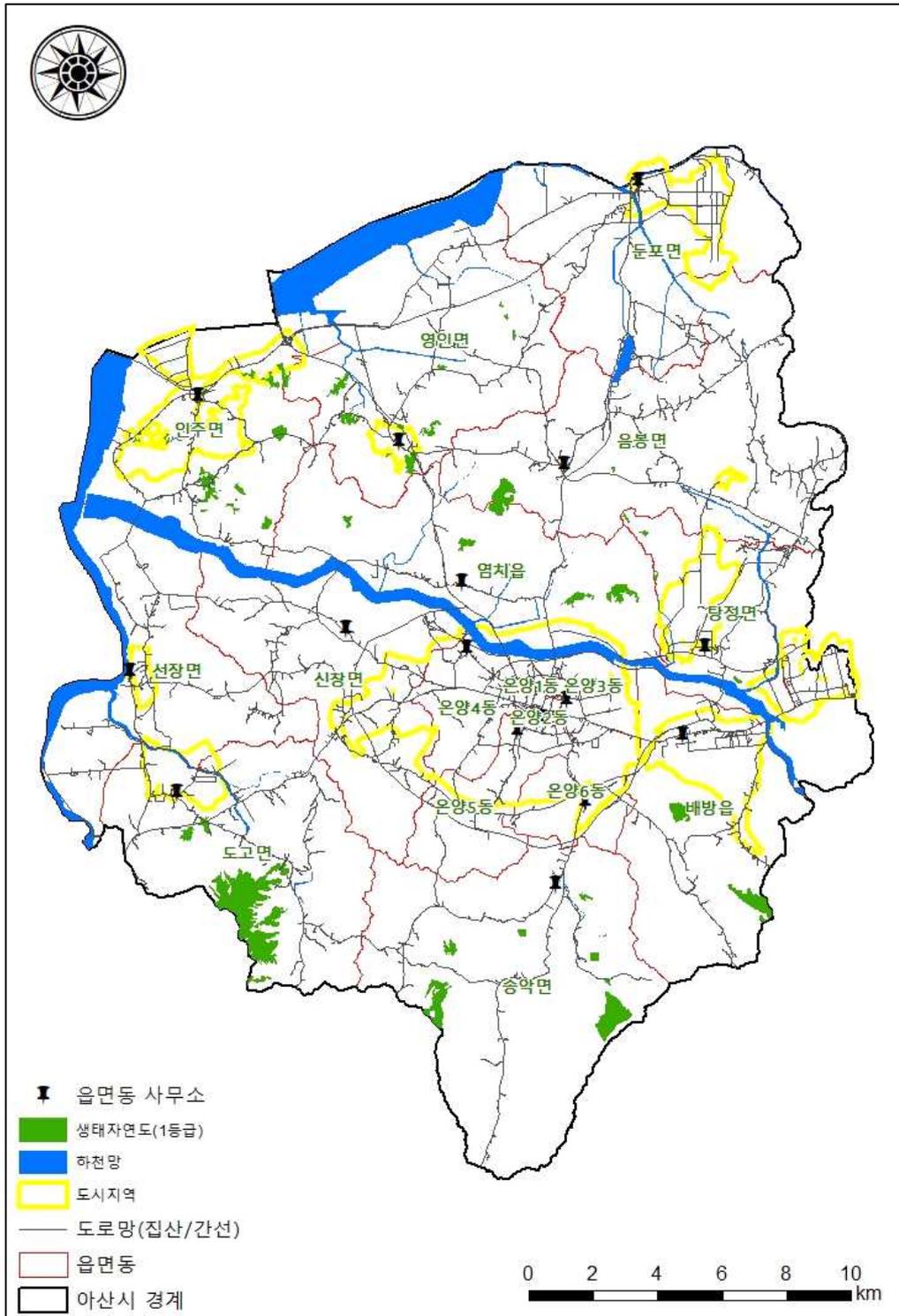
3. 실증분석

- 앞서 설명한 방법론을 충남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함
- 대상지인 아산시를 100미터 격자로 분할한 뒤 각 격자별로 개발행위 협의/허가 빈도 및 평균표고, 평균경사 값을 구축하였음
- 아래 <그림 1>은 아산시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가 이루어진 지점들과 인구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그림 2>의 지도는 물리적 현황 특성을 나타냄

〈그림 12〉 아산시 개별 개발행위 협의/허가 대상 지점 및 인구분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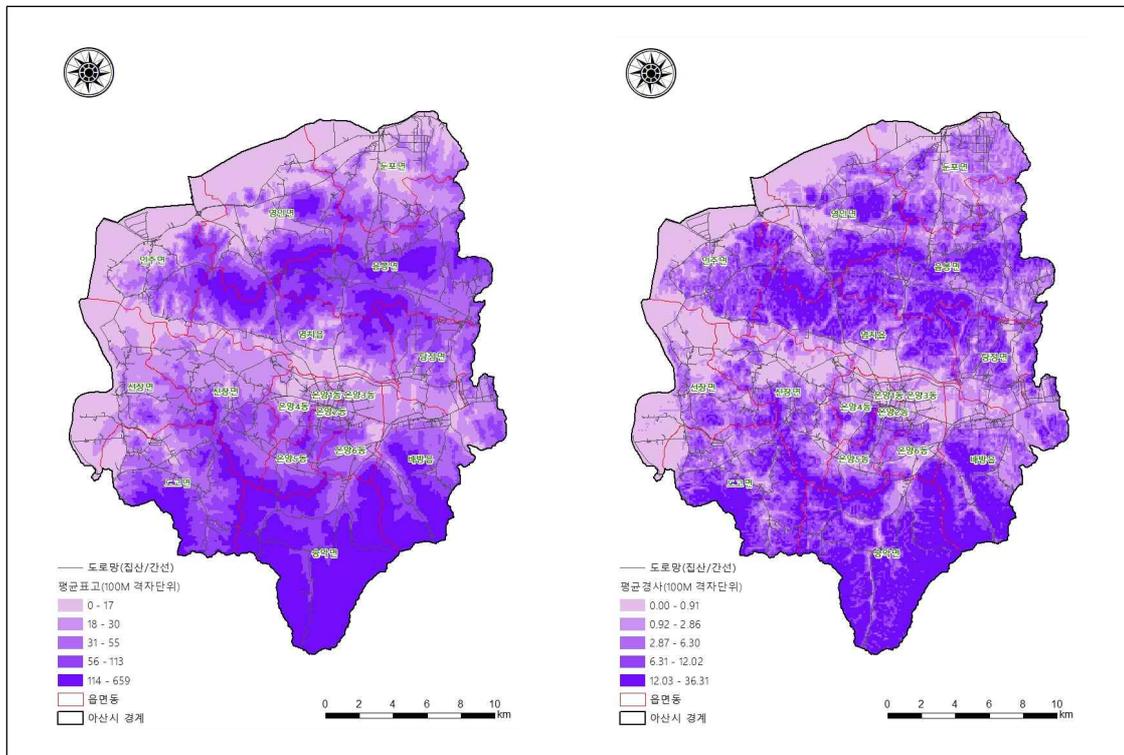


〈그림 13〉 아산시 물리적 현황 특성도



- <그림 3>은 아산시 평균표고 및 평균경사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냄. 평균표고는 30미터 해상도를 가지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우선 아산시 전체를 100미터 정방형 격자로 분할한 뒤 각 격자 내에 중심점이 들어오는 30미터 크기의 정방형 DEM 자료 값들을 평균한 결과임
- 평균경사 역시 DEM 자료를 이용하여 역시 30미터 크기의 DEM 정방형 격자별로 산출한 뒤 이를 100미터 크기의 정방형 격자로 취합하여 평균한 값을 나타냄

<그림 3> 아산시 평균표고(좌) 및 평균경사(우) 분포도



-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이루어진 개발허가 3,831건 및 역시 같은 기간 내 이루어진 개발협의 22,893건, 그리고 이 둘을 합산한 값을 종속변수인 개발행위 발생건수로 놓고 각각에 대하여 GWR 회귀계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음. 아래 <표 10>은 이러한 세 가지 GWR 모형 구성방식을 요약한 것임

<표 10> GWR 모형 구성방식

	종속변수	독립변수1	독립변수2
GWR 모형1	개발행위 허가 건수	평균표고	평균경사
GWR 모형2	개발행위 협의 건수		
GWR 모형3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건수		

- 물론 GWR 모형을 구성하여 공간단위별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이전에 대상지 전체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과 모형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기 위한 탐색적 절차로 OLS 분석결과를 먼저 도출하였음

〈표 11〉 OLS 모형 분석결과

OLS 모형1	독립변수	회귀계수	t-값	p-값
	상수항	0.5564	34.42	0.0000*
평균표고	-0.0012	-5.44	0.0000*	
평균경사	-0.0079	-2.69	0.0071*	
Adj. R ² = 0.003				
OLS 모형2	독립변수	회귀계수	t-값	p-값
	상수항	0.0907	28.42	0.0000*
평균표고	-0.0002	-4.57	0.0000*	
평균경사	-0.001	-1.68	0.0924	
Adj. R ² = 0.0018				
OLS 모형3	독립변수	회귀계수	t-값	p-값
	상수항	0.647172	36.87	0.0000*
평균표고	-0.001446	-5.85	0.0000*	
평균경사	-0.008849	-2.78	0.0054*	
Adj. R ² = 0.0034				

*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한 결과임을 의미함

- <표 2>를 보면 평균표고 및 평균경사 독립변수만으로 구성된 세 가지 OLS 모형 모두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발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표고와 경사와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여건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폭넓게 존재함을 의미함
- 다만 당연한 귀결이지만 평균표고와 평균경사의 t-값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고와 경사와 같은 물리적 환경 변수가 개발행위에 제약조건으로써 가령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행위 발생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필연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개발행위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표고 및 경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발생패턴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의미 있는 분석정보로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됨
- OLS 분석결과는 대상지 전체에서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집계한 정보로 변수 자체가 가지는 방향성(가령 표고가 높을수록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표고의 영향력은 개발행위 발생에 있어서 음의 방향성을 가짐) 정보 이외의 해석적 함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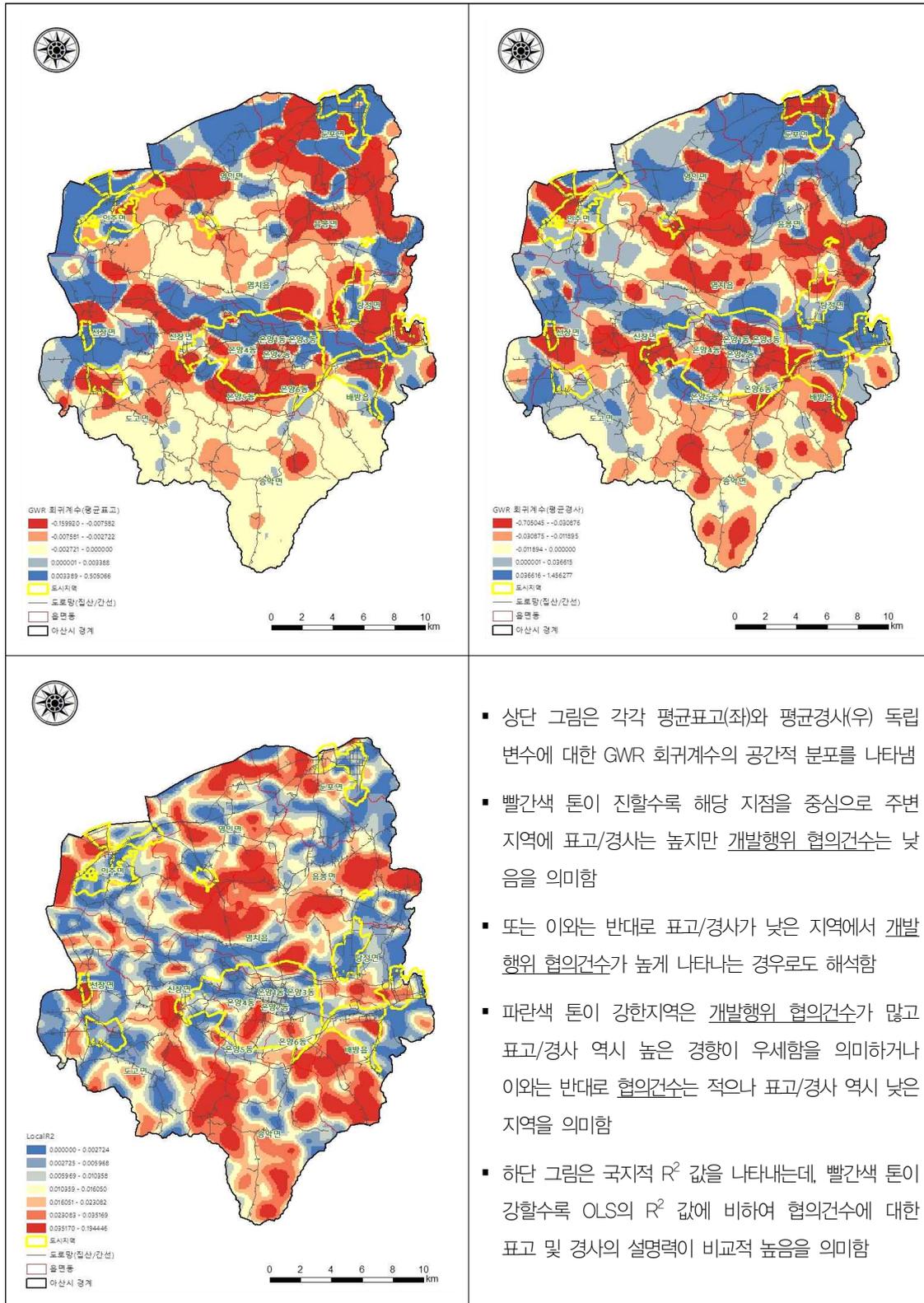
- GWR 분석결과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차이(심지어는 방향성의 차이)가 지리적 공간상에서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지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해석적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음
- 가령 어떤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지역은 표고는 비록 낮지만 개발행위 발생을 방해하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큼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아래의 <표 3>은 GWR 회귀계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임
- 분석결과를 보면 OLS와는 달리 회귀계수 값이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고나 경사 독립변수, 상수항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에서 양의 값에 이르는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독립변수 영향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표 2>와 <표 3>의 Adj. R2 값을 비교해 보면 GWR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크지 않지만 OLS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음
- 개발허가 협의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인 GWR 모형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

<표 3> GWR 회귀계수의 통계적 분포특성

GWR 모형1			
독립변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상수항	-3.96	0.63	6.11
평균표고	-0.16	-0.000077	0.51
평균경사	-0.71	0.01	1.46
Adj. R ² = 0.0804			
GWR 모형2			
독립변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상수항	-0.35	0.11	1.3
평균표고	-0.05	-0.0003	0.04
평균경사	-0.08	0.0012	0.43
Adj. R ² = 0.0414			
GWR 모형3			
독립변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상수항	-4.25	0.75	6.42
평균표고	-0.18	-0.0004	0.54
평균경사	-0.77	0.02	1.53
Adj. R ² = 0.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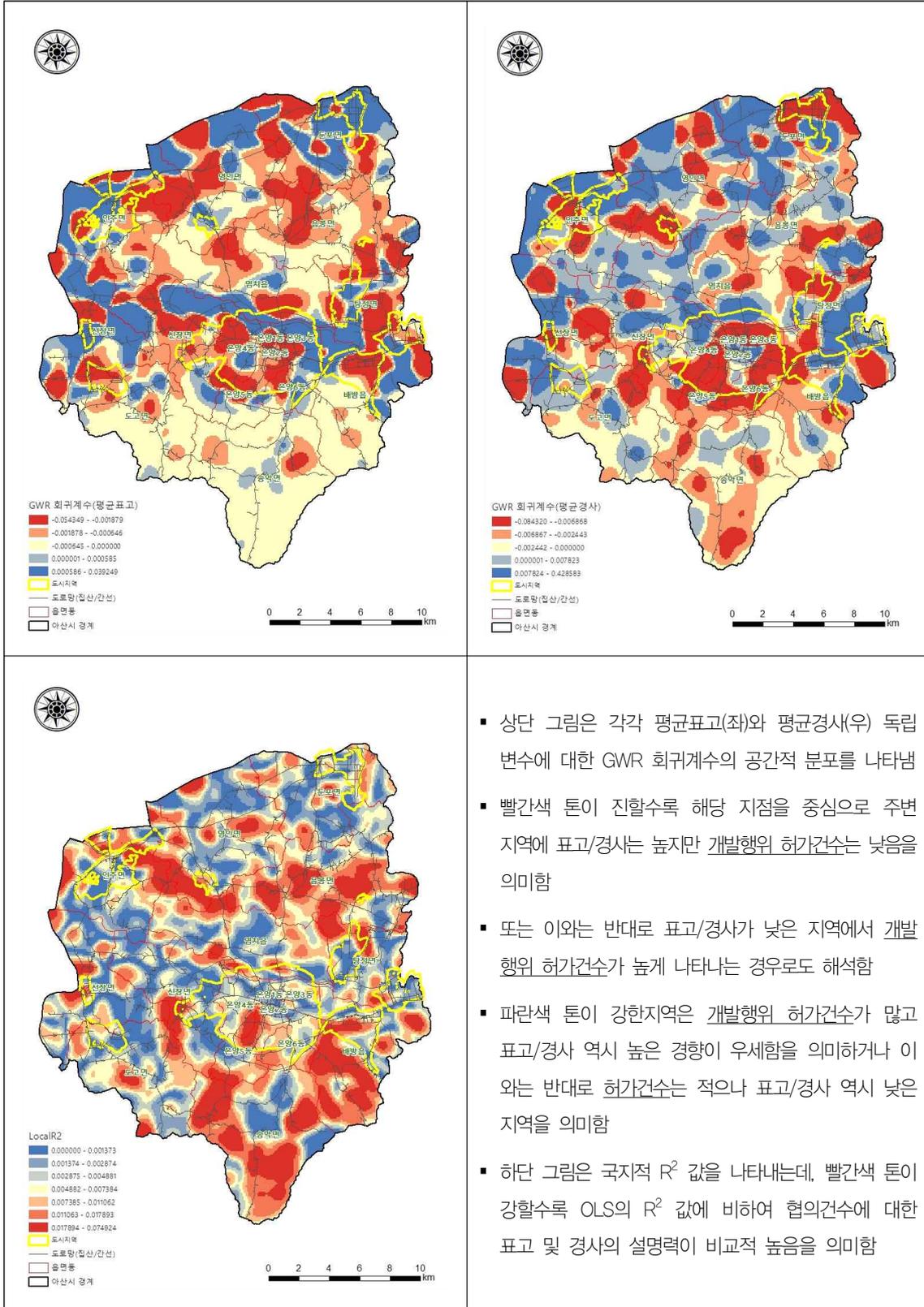
○ 아래 <그림 4>는 GWR 모형1의 분석결과를 나타냄

<그림 4> GWR 모형1 : 종속변수(개발행위 협의) ~ 독립변수(표고 & 경사)



○ 아래 <그림 5>는 GWR 모형2의 분석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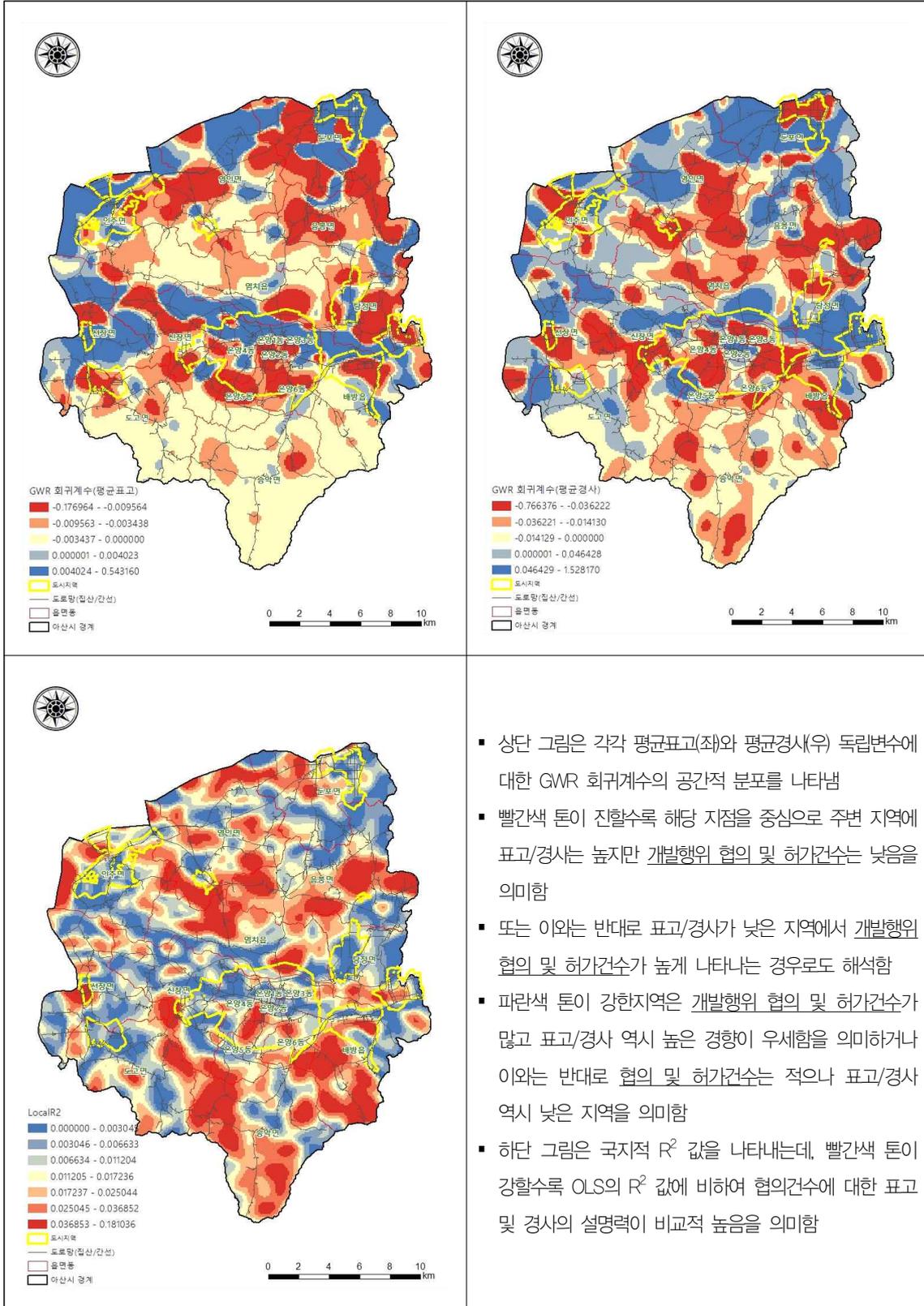
<그림 5> GWR 모형2 : 종속변수(개발행위 허가) ~ 독립변수(표고 & 경사)



- 상단 그림은 각각 평균표고(좌)와 평균경사(우) 독립 변수에 대한 GWR 회귀계수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냄
- 빨간색 톤이 진할수록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표고/경사는 높지만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낮음을 의미함
- 또는 이와는 반대로 표고/경사가 낮은 지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로도 해석함
- 파란색 톤이 강한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많고 표고/경사 역시 높은 경향이 우세함을 의미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허가건수는 적으나 표고/경사 역시 낮은 지역을 의미함
- 하단 그림은 국지적 R² 값을 나타내는데, 빨간색 톤이 강할수록 OLS의 R² 값에 비하여 협의건수에 대한 표고 및 경사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음을 의미함

○ 아래 <그림 6>은 GWR 모형3의 분석결과를 나타냄

<그림 6> GWR 모형3 : 종속변수(개발행위 협의 + 허가) ~ 독립변수(표고 &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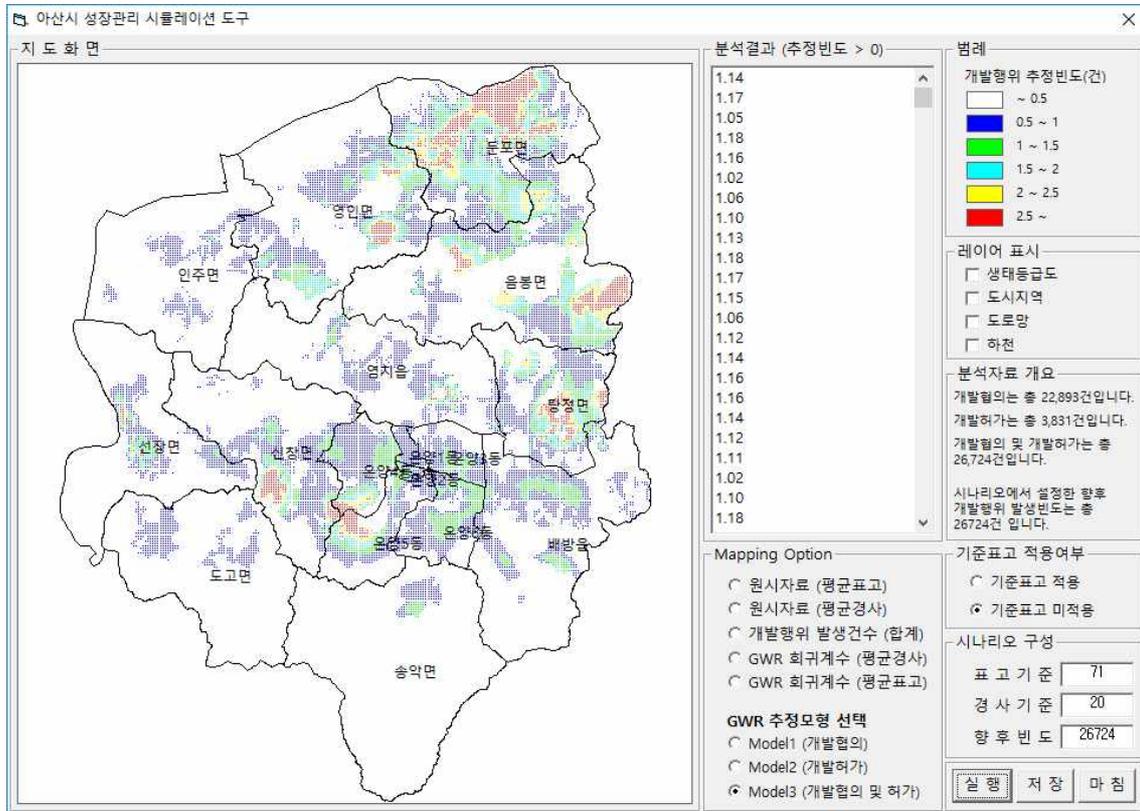


- 상단 그림은 각각 평균표고(좌)와 평균경사(우) 독립변수에 대한 GWR 회귀계수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냄
- 빨간색 톤이 진할수록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표고/경사는 높지만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건수는 낮음을 의미함
- 또는 이와는 반대로 표고/경사가 낮은 지역에서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로도 해석함
- 파란색 톤이 강한지역은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건수가 많고 표고/경사 역시 높은 경향이 우세함을 의미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협의 및 허가건수는 적으나 표고/경사 역시 낮은 지역을 의미함
- 하단 그림은 국지적 R² 값을 나타내는데, 빨간색 톤이 강할수록 OLS의 R² 값에 비하여 협의건수에 대한 표고 및 경사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음을 의미함

4. 개발행위 발생의 공간적 패턴 시뮬레이션

- 상기의 <그림 4>, <그림 5>, <그림 6>의 GWR 모형1, 모형2, 모형3으로부터 추정된 100미터 격자별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행위 발생의 공간적 패턴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음³²⁾
- <그림 7>은 GWR 모형3의 회귀계수 추정치를 기반으로 ‘시나리오1’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임

<그림 7> 개발행위 추정결과 : 시나리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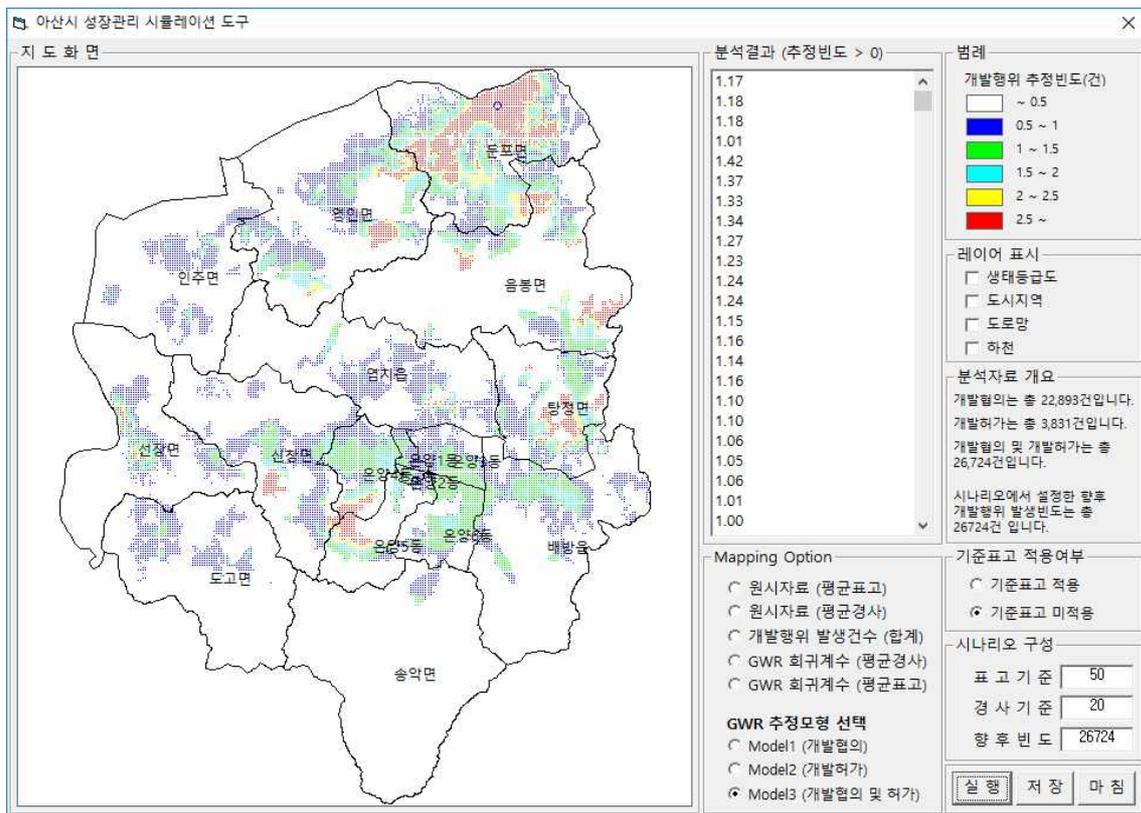


- <그림 7>의 왼쪽은 아산시를 망라하는 100미터 정방형 격자별 향후 개발행위 발생빈도를 단계구분도로 표현한 것임
- 향후 개발행위 발생빈도는 개발 잠재력(DP: Development Potential)을 의미하며 (식7)을 격자별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빨간색 톤이 진할수록 빈도로 정량화되는 향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함

32)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 성장관리 시뮬레이션 도구’ 를 독립적 실행이 가능한 GIS 프로그램(stand-alone GIS software)으로 구축하여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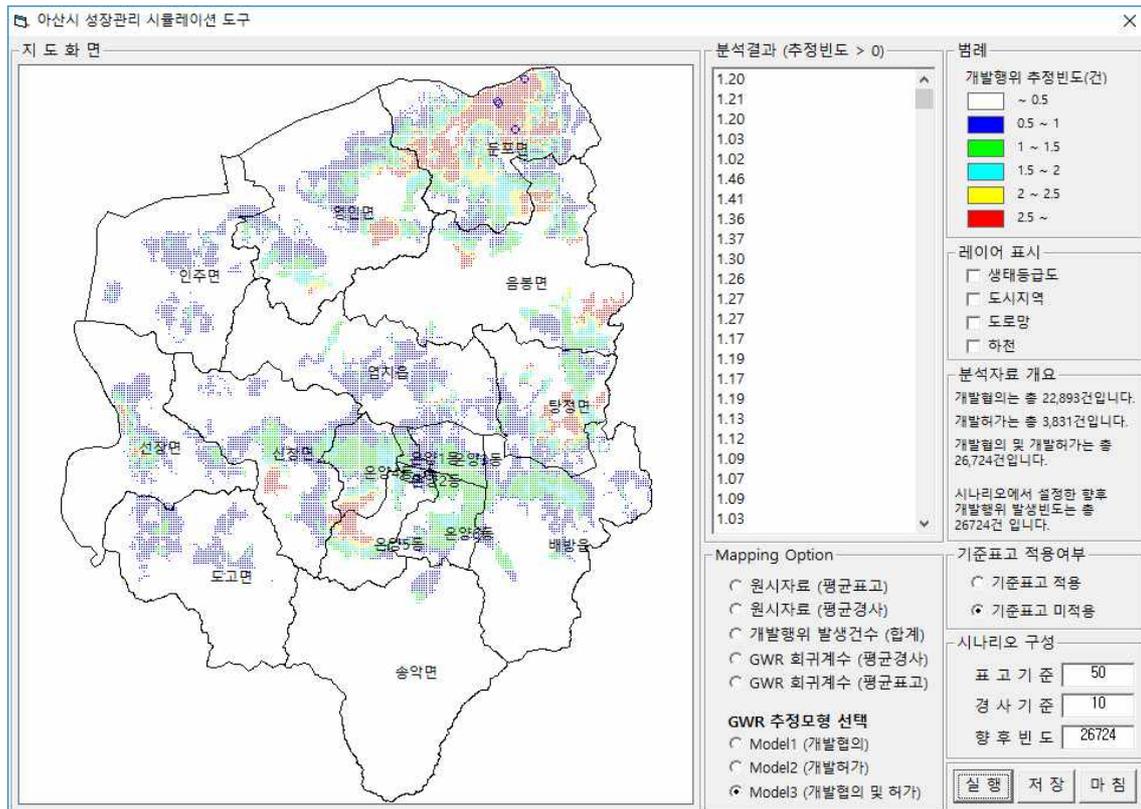
- 프로그램 중간에 있는 「분석결과 (추정빈도 > 0)」 목록상자의 항목들은 100미터 격자들 중 개발행위 예상 발생빈도가 1건 이상인 경우만 표시한 정보임
- 시나리오1은 아산시에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관측된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 건수(26,724건)를 발생빈도로 놓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향후 또 다른 15년 동안 역시 26,724건의 개발행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산시 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될 것인지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
- 즉, 시나리오1은 향후 15년 동안 26,724건의 개발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표고기준을 '71미터 이하', 경사기준을 '20도 이하'로 명시한 제도적 규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개발행위 발생의 공간적 분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임
- 분석결과를 보면, 둔포면과 음봉면, 그리고 시 지역 주변의 온양5동, 신창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시나리오1의 표고기준과 경사기준을 각각 '50미터 이하'와 '20도 이하'로 수정한 시나리오2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8>과 같음

〈그림 8〉 개발행위 추정결과 : 시나리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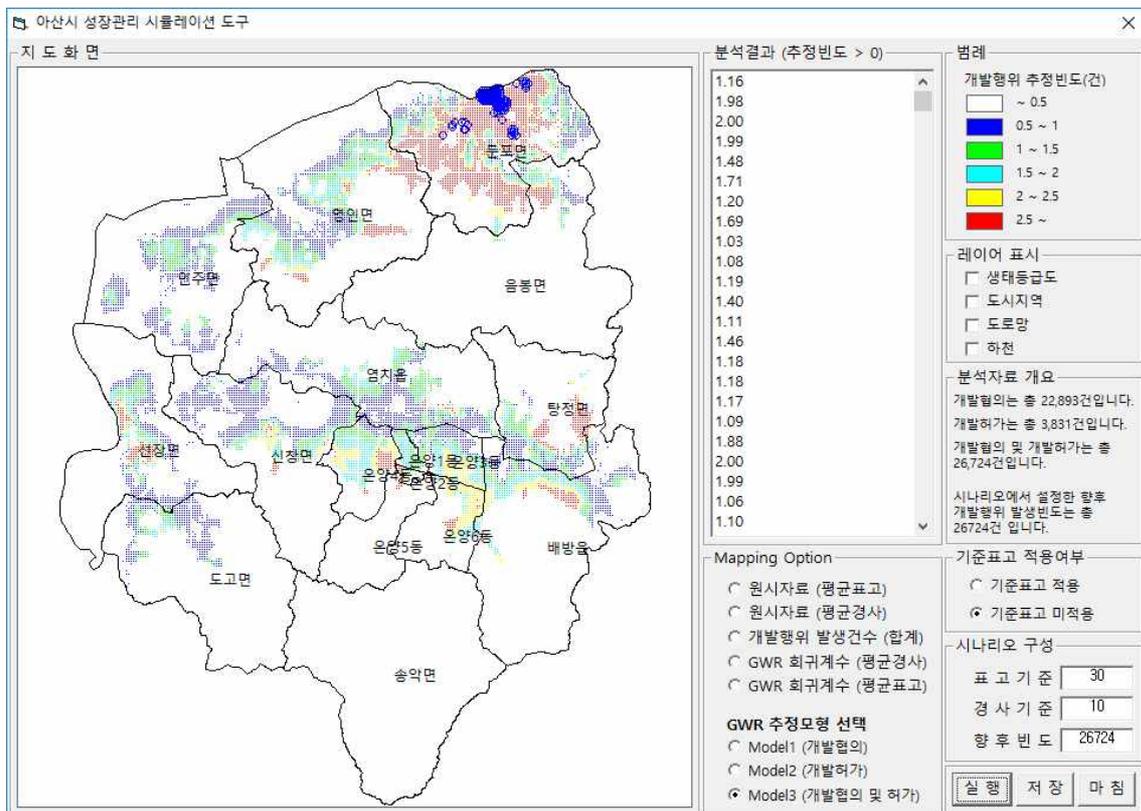
- 시나리오2가 시나리오1과 다른 점은 표고기준을 71미터에서 50미터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 이는 표고에 관한 제도적 규제 조건을 강화한 것을 의미함
- 즉, 시나리오1에서는 71미터 이하 50미터 이상 가령, 표고가 65미터인 정방형 격자에서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나리오2에서는 표고 65미터 격자에서는 개발허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향후 개발 잠재력 즉, 발생빈도를 '0'으로 설정하게 됨
- 결과적으로 시나리오1에서 시나리오2로 조건이 바뀔 경우 개발행위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격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됨. 이 경우 결과적으로는 (식7)의 분모가 시나리오1의 경우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표고가 50미터보다 작은 격자의 향후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가령 26,724건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해당 격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행위는 증가하게 됨
- 즉, 총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주어지고 이들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표고에 관한 제도적 규제 강화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토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토지(격자) 내에서의 개발행위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것임
- <그림 9>는 시나리오3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냄

〈그림 9〉 개발행위 추정결과 : 시나리오3



-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2의 조건에서 경사기준을 10도 낮춘 것으로, 이 역시 규제 강화를 전제하고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은 파란색 원(O)이 둔포면 일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임
- 파란색 원은 규제 강화에 따라 특정한 정방형 격자에 개발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범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2.5건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격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2.5건 이상의 격자들 간 구분이 어려움
- 따라서 향후 발생빈도가 10건 이상인 격자에 대하여 파란색 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임. 결과적으로 파란색 원이 나타난다는 것은 규제 조건 강화로 인하여 개발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증함
- 시나리오3의 규제 강화는 경사 기준을 시나리오1이나 시나리오2의 20도에서 10도로 하향 조정된 상황을 의미함
- <그림 10>은 시나리오4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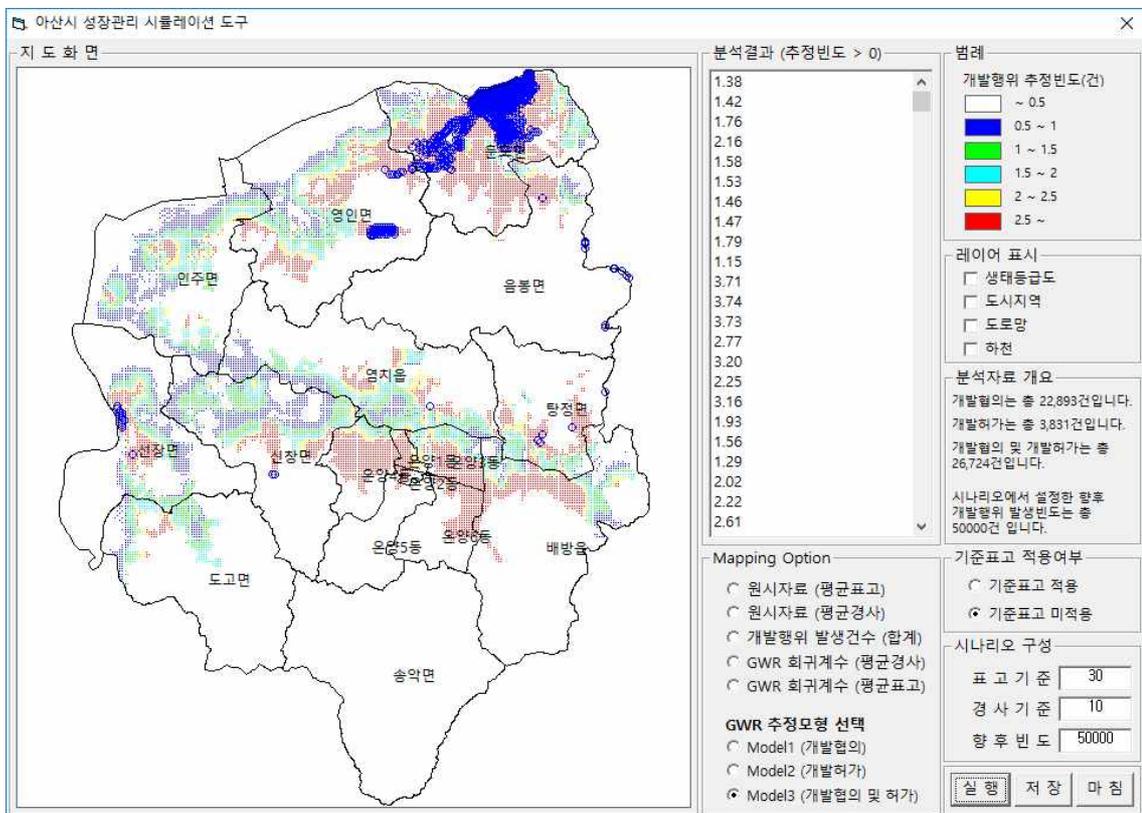
〈그림 10〉 개발행위 추정결과 : 시나리오4



- 시나리오4는 시나리오3에서 표고기준을 50미터에서 30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적 규제를 더욱 강화한 상황을 상정함. 즉, 표고기준과 경사기준 모두 강화된 시나리오임

- 시나리오4로부터 추정된 결과를 보면 둔포면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된 파란색 원이 뚜렷한 공간적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개발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고 및 경사 기준만 놓고 보면 아산시 내 개발행위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임
- 물론 이는 개발행위 발생건수 총량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여 도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만일 개발행위 발생건수가 가령 26,724건에서 50,000건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시나리오5로 놓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면 <그림 1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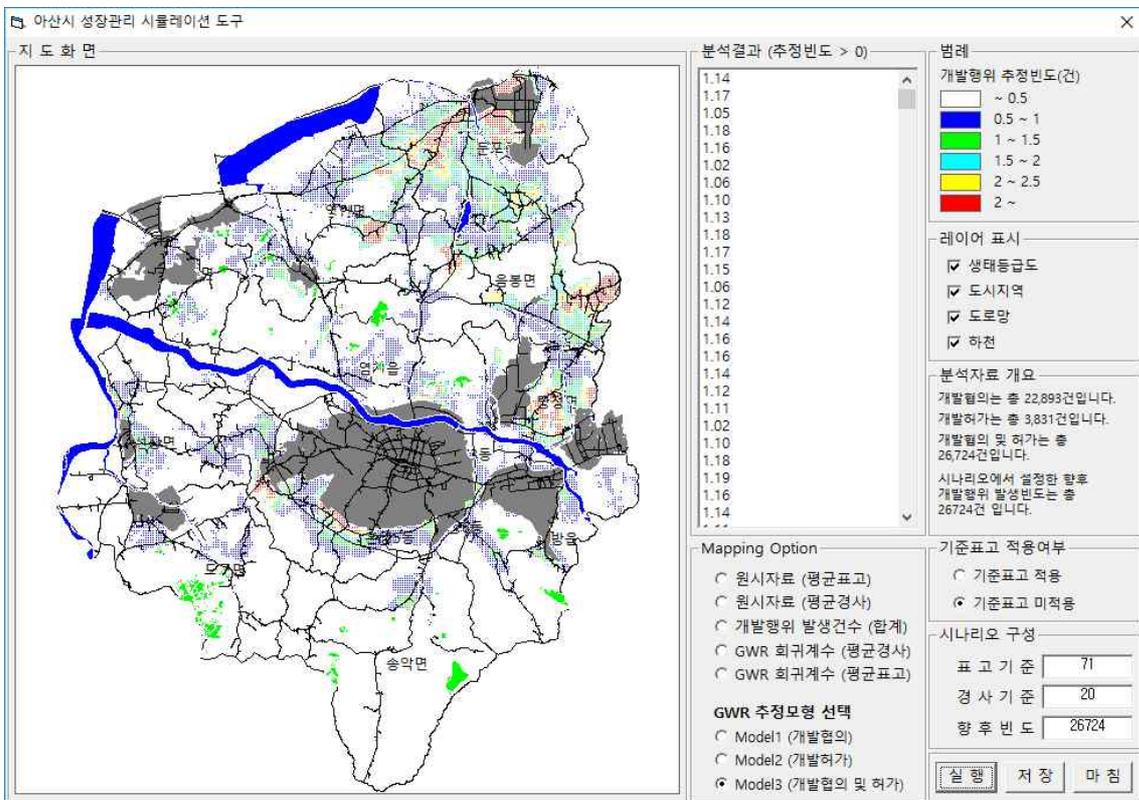
<그림 11> 개발행위 추정결과 : 시나리오5



- <그림 11>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표고와 경사에 대한 제도적 규제 기준이 시나리오4와 동일한 상태에서 개발행위 발생건수의 총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경우 둔포면을 중심으로 뚜렷한 개발행위 발생빈도 즉,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됨
- 시나리오1에서 시나리오4에 이르는 과정은 표고 및 경사 기준에 있어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시나리오5는 이전 시나리오들 중 가장 규제 조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개발행위 발생빈도가 두 배 가량 증가한 상황을 나타냄

-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결과 (추정빈도 > 0)」 목록상자의 수치들을 보면 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 조건이 강화되어 제도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규모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임
- 따라서 향후 개발행위 발생건수 총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상지인 아산시 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관련된 성장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부여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림 12>는 「아산시 성장관리 시뮬레이션 도구」의 추가적인 기능을 예시함

〈그림 12〉 레이어 중첩결과 예시



- 부가적 기능이란 생태등급도(1등급), 도시지역, 도로망, 하천 등의 물리적 환경을 레이어로 중첩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의미함
- <그림 12>에서 초록색 지역은 생태등급 1등급 지역, 파란색은 하천의 분포를 나타냄. 아울러 도로망이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회색의 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레이어 역시 중첩되어 있음. 이는 개발행위 발생빈도 측면에서의 개발 잠재력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물리적 환경 변인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 구현임

5. 결론

- 이 연구에서는 충남 아산시의 개발행위 협의 및 허가 자료와 고도 및 경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고 및 경사가 개발행위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GWR 회귀계수로 정량화한 뒤 이를 토대로 개발행위와 관련된 제도적 규제의 강화 혹은 완화 과정을 표고 및 경사 기준에 시나리오로 담아내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음
-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표고 및 경사 측면에서의 제도적 규제의 강화는 아산시 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발생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계됨
- 다만,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등에 그 기준을 명시하기에 적합한 표고 및 경사 기준만을 적용하여 GWR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모형 자체의 설명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만일 개발행위 발생빈도와 관련성이 있으면서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적 규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추가적인 독립변수에 대한 자료구축이 가능할 경우 개발행위 발생빈도 측면에서의 더욱 설명력이 높은 개발 잠재력 예측결과를 추정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령, 주요 간선도로로부터의 거리나 기성 시가지로부터의 거리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담아낼 수도 있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정보 역시 개발 잠재력 추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록 3) 아산시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사례조사

1. 서론 : 조사방법과 목적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아산시 비전 설정 연구와 관련하여 분야별 일본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산시 비전 설정연구에서는 산업·경제 분야, 환경 분야, 농업·농촌 분야, 지역·도시 분야, 교통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복지·사회 분야, 교육 분야, 안전 분야 등 총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아산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 시책들을 모색한다. 그런데 동 연구에서 제시될 전략 및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두루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사례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실제 적용을 통하여 검증된 시책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자연적·사회문화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사례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겠으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외국사례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주목하는 까닭은 사회·경제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보다 분권화된 지역구조 하에서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일본사례는 거의 인터넷 검색에 의한 것이다. 아산시 비전 설정연구의 초안에 포함된 전략 또는 시책의 키워드를 일본어 검색엔진(야후재팬)에 입력하여 유사한 전략이나 시책이 일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면서 시사점 있는 사례를 찾고자 하였다.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였고 최신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규나 시책, 통계의 변화가 없는지 추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본사례는 총 14개이다. 산업·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복지·사회 분야, 교육 분야, 안전 분야는 각 2개씩, 환경 분야, 농업·농촌 분야, 지역·도시 분야, 교통 분야는 각 1개씩의 사례가 정리되었다.

2. 정책 및 사업 사례

1) 신칸센 역세권 개발

(1) 개요

신칸센 역세권을 업무 및 연구개발 집적지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도카이도신칸센의 신요코하마역(新横浜駅)과 신후지역(新富士駅)을 들 수 있다. 도카이도신칸센은 도쿄역에서 신오사카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으로서,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도시를 연결한다. 신요코하마역은 도쿄역에서 2번째, 신후지역은 6번째 정차역이다.

신요코하마역의 역세권에는 IT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연구개발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신후지역 역세권은 산업업무기능과 연구개발기능 유치를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1〉 일본 도카이도신칸센 노선과 정차역



자료: 일본 위키피디아

(2) 주요 내용

□ 신요코하마역 역세권 개발사례

신요코하마역은 도쿄역에서 신오사카를 연결하는 도카이도신칸센의 정차역으로서 도쿄역에서 25.5km 거리에 위치하며, 1964년에 설치되었다. 신요코하마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IT관련 기업이 집적하여 있으며, MACNICA, Innotech, Fujitsu·Ricoh, ROHM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개발 및 IT관련 회사가 집적하여 있는 외에 Varian Semiconductor Equipment, Erickson, ARM 등의 다국적 기업이 일본본사 또는 연구개발거점이 입지하고 있다.

신요코하마역 역세권이 일본 굴지의 업무·연구개발 중심지로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지역정책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1988년 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업무핵도시정책이다. 도쿄도 구부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기능을 주변의 업무핵도시로 분산함으로써 수도권 공간구조를 일극중심에서 다핵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총 15개 업무핵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신요코하마역이 위치한 요코하마시도 업무핵도시의 하나이다. 1993년에 승인된 「요코하마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에서는 신요코하마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요코하마도심지구를 업무시설집적지구로 지정하였다. 업무시설집적지구 내에 설치되는 연구시설, 정보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또는 방송시설, 전시시설 또는 견본시장시설, 연수시설 또는 회의장시설, 교통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유통·업무시설, 교양·문화시설,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특별토지보유세·사업소세 등의 세제감면, 정책금융 지원, 지방채 특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둘째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2002년 제정)에 의한 구조개혁특구이다. 2004년에 신요코하마역 주변 지역이 「국제IT비즈니스교류특구」라는 명칭으로 구조개혁특구로 지정되어 외국인기술자의 비자 연장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었다. 「국제IT비즈니스교류특구」는 2005년에 요코하마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 신후지역 역세권개발사례

신후지역은 도카이도 신간선의 정차역으로서 도쿄역에서 135km 거리에 위치하며, 1988년에 설치되었다. 신후지역이 소재한 후지시를 포함하는 7개 지자체는 1993년에 지방거점법(1992년 제정)에 의한 지방거점도시지역(「시즈오카현동부지방거점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후지역 주변 약 88ha가 후지시의 거점지구로 지정되었다.

신후지역 거점지구에 대하여는 “광역적 교통거점으로서의 신간선역 주변이라는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산업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능, 산업지원기능, 상업기능, 어뮤즈먼트기능 등을 도입하여 광역도시권의 게이트웨이에 어울리는 고차 도시거점으로 형성”한다는 기본방침이 결정³³⁾되었으며, 이후 4개의 공구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다.

(3) 시사점

천안·아산역은 수도권에서 벗어난 첫 번째 KTX역으로서 수도권에서 분산하는 업무기능 및 연구개발기능의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침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천안·아산역세권을 R&D집적지구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지역성장거점 구축과 관련하여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대규모투자를 혁신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의 신요코하마역 역세권이 업무·연구개발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업무핵도시정책, 구조개혁특구정책 등 정부의 지역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천안·아산역이 업무·연구개발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기능 등의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33) 시즈오카현 누마츠시(沼津市)(<http://www.city.numazu.shizuoka.jp/shisei/gyozaisei/east/mno04.htm>) 참조

2) 일본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1) 개요

일본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은 ①용자·보조금 등의 자금 지원, ②가이드북 또는 사례집 작성, 홈페이지 설치 등과 같은 보급·계발 시책, ③상담창구 설치, 전문가 파견 등과 같은 상담 지원, ④강좌 개최, 창업자 육성 등과 같은 인재 육성, ⑤중간지원단체와의 연계, 활동장소 제공, 사업 위탁, 표창 등의 기타 시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³⁴⁾

(2) 주요 내용

□ 자금지원 사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용자 지원사례로 아오모리현의 ‘커뮤니티비즈니스(CB) 서포트자금’, 가나가와현의 ‘CB지원 비영리법인 용자’, 도야마현의 ‘지역공헌형사업지원 「제도용자」’, 후쿠이현의 ‘지역상조 비즈니스에 대한 용자’ 등을 들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례로는 아키다현의 ‘CB 창업지원 보조금’, 와카야마현의 ‘CB 모델창출 지원사업’, 애히메현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창출지원 사업비 보조금’, 오이타현의 ‘CB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금지원 시책사례

종류	지자체	시책명	개요
용자	아오모리현	커뮤니티비즈니스(CB) 서포트자금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자의 창업·경영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담보 저리 자금 지원
	가나가와현	CB 지원 비영리법인 용자	지역 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창업예정자 포함) CB운영에 필요한 자금 용자
	도야마현	지역공헌형사업 지원 「제도용자」	복지, 환경, 특산물가공 등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으로서 비즈니스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대상 지원
	후쿠이현	지역상조비즈니스에 대한 용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상조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
보조금	아키다현	CB 창업지원 보조금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민활동단체 대상 지원
	와카야마현	CB 모델창출 지원사업	지역 내 CB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자, 기존 CB사업자로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상
	애히메현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창출지원 사업비 보조금	지역의 자연과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비즈니스, 지역·가정의 과제 및 니즈에 대응한 비즈니스 지원
	오이타현	CB 지원사업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과제와 주민 니즈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상

자료: 經濟産業省(<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70925a08j.pdf>)

34)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70925a08j.pdf>) 참조

□ 보급·계발, 정보제공 사례

가이드북, 보고서 발간사례로는 야마가타현의 CB가이드북 작성, 치바현의 CB지침 작성, 사이타마현의 지역밀착형 CB에 관한 보고서 출간, 나가노현의 나가노현 CB선진사례집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홈페이지 설치사례로 군마현과 오카야마현을 들 수 있다. 군마현은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고 있고, 오카야마현은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CB 관련 보조금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상담 사례

상담창구 설치사례로 야마가타현은 ‘소프트비즈니스 상담창구’, 시가현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출 지원기업 상담창구’를 각각 개설하고 있다.

전문가 파견사례로는 미에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가파견사업’, 군마현의 ‘군마현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가파견’ 등을 들 수 있다.

□ 인재육성 사례

강좌 개최사례로는 아오모리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인재육성세미나’, 치바현의 ‘마을창업자 양성 코스’를 들 수 있다.

창업자 육성사례로는 토야마현의 창업미래학원, 오사카부의 ‘사회창업자 활동기반 만들기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기타 지원사례

중간지원단체 설치사례로 아오모리현의 ‘아오모리 커뮤니티비즈니스 서포트센터’, 나가사키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나가사키’를 들 수 있다. 이외에 활동장소 제공사례로는 사가현의 ‘CSO활동 지원 오피스’, 사업위탁 사례로는 군마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 표창사례로는 오사카부의 CB어워드를 각각 들고 있다.

(3)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아산시에 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사례집 발간 등의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개설, 상담창구 설치, 전문가 파견제도, 창업자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의 녹지기본계획제도

(1) 개요

일본은 도시녹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녹지기본계획(緑の基本計画)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도시녹지법 제4조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의 적절한 보전 및 녹화 추진을 위하여 시정촌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반수의 기초지자체들이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다.

(2) 주요 내용

도시녹지법에서는 녹지기본계획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으로 다음 7가지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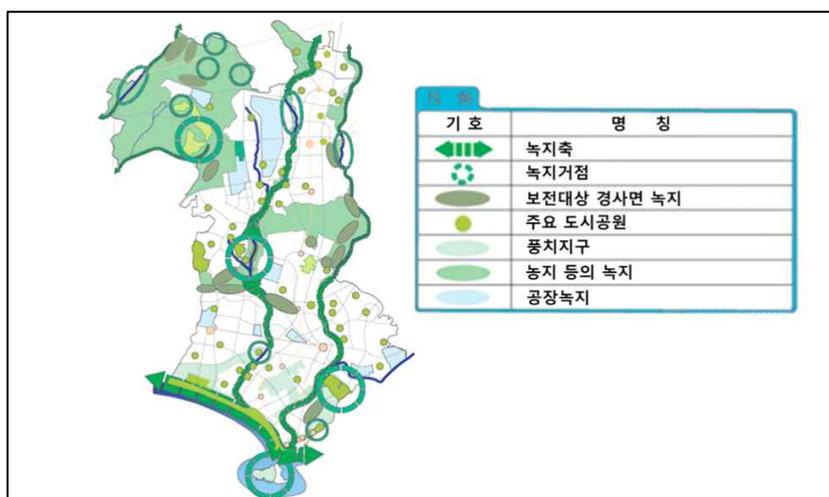
- ① 녹지의 보전 및 녹화 목표
- ②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도시공원 정비방침, 기타 보전해야 할 녹지의 확보 및 녹화 추진 방침에 관한 사항
- ④ 특별녹지보전지구 내에서 녹지 보전을 위한 시설 정비,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매입 토지의 관리, 관리협정 및 시민녹지계약에 따른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녹지보전지역 및 특별녹지보전지구 이외 구역으로서 중점적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구 및 지구 내 녹지 보전에 관한 사항
- ⑥ 녹화지역에서의 녹화 추진에 관한 사항
- ⑦ 녹화지역 이외 구역으로서 중점적 녹지 추진이 필요한 지구 및 지구 내 녹지 보전에 관한 사항

이상의 7가지 사항 외에 2018년 4월 1일부터는 도시공원 관리방침 및 생산녹지지구 내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녹지기본계획 작성주체는 시·구·정·촌이며, 입안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녹지기본계획 수립 실태를 보면, 2016년 3월 31일 현재 688개 지자체가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수립 완료 674개, 수립 중 14개)으로서, 이는 전국 1,374개 지자체(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시구정촌)의 50.1%에 해당한다.

〈그림 2〉 도시 녹지미래상 이미지



자료: 国土交通省(http://www.mlit.go.jp/toshi/park/toshi_parkgreen_tk_000075.html)

(3) 시사점

국내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아산시도 이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은 ①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 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③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④공원녹지의 축(축)과 망(망)에 관한 사항, ⑤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⑥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⑦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일본의 녹지기본계획과 우리나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하면 전자는 시책수단이 구체적이나 후자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자의 경우 녹지 보전을 위한 녹지보전지역, 특별녹지보전지구 지정과 더불어 녹화를 위한 녹화지역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후자는 구체적 수단 없이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아산시 녹지의 체계적 보전 및 녹화 추진을 위해서는 보전지역과 녹화지역의 지정과 같은 구체적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일본 지자체의 로컬푸드 촉진시책: 지산지소촉진계획 제도

(1) 개요

일본에서는 로컬푸드 대신 지산지소(地産地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만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식량자급율의 향상 및 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³⁵⁾.

35) 農林水産省(www.maff.go.jp/chushi/chisanchisyo/pdf/2511_leaflet.pdf) 참조

지산지소의 촉진을 위하여 일본에서는 지산지소촉진계획제도를 두고 있다. 근거법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6차산업화·지산지소법)로서 2010년에 제정·공포되었다. 동법 제41조에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행정구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약칭 “지산지소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이란 (1)국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식품용)을 그 생산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식품가공 포함), (2)지역 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농림수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에서는 지자체가 지산지소촉진계획 책정 시 고려해야 할 기본이념으로 ①생산자와 소비자 간 결속 강화, ②지역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 ③소비자의 풍요로운 식생활 실현, ④식육(食育, 먹는 것의 중요함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미)과 일체적 추진, ⑤도시와 농·산어촌 간 공생·교류와 일체적 추진, ⑥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 ⑦환경부하의 저감에 기여, ⑧사회적 기운(氣運)의 양성 및 지역 주체적 추진 촉진의 8가지를 들고 있다.

지산지소를 위하여 지자체가 강구하여야 할 주요 시책으로는 ①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필요한 기반 정비, ②직판장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 ③학교급식 등에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 ④지역수요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 ⑤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시책을 통한 식육(食育)의 추진 등, ⑥인재의 육성 등, ⑦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 ⑧조사연구 실시, ⑨생산자, 사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의 9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지산지소촉진계획 수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계획 책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활동 교부금」등 지산지소 관련예산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3) 시사점

아산 로컬푸드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별도의 계획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지산지소촉진계획 수립사례를 참고하여 아산시가 독자적 관점에서 로컬푸드촉진계획 수립을 검토할 만하다.

5) 일본의 콤팩트도시 형성 시책사례: 입지적정화계획 제도

(1) 개요

최근 들어 일본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콤팩트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 없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침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4년 8월에 입지적정화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입지적정화계획의 근거법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81조는 입지적정화계획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택 및 도시기능증진시설의 입지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시증진시설이란 의료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기타 도시 거주자의 공동 복리 또는 편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기능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주체는 시정촌이다. 단, 동경도 특별구의 경우에는 구가 작성한다. 복수의 시정촌이 광역생활권이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정촌이 연계하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입지적정화계획의 기재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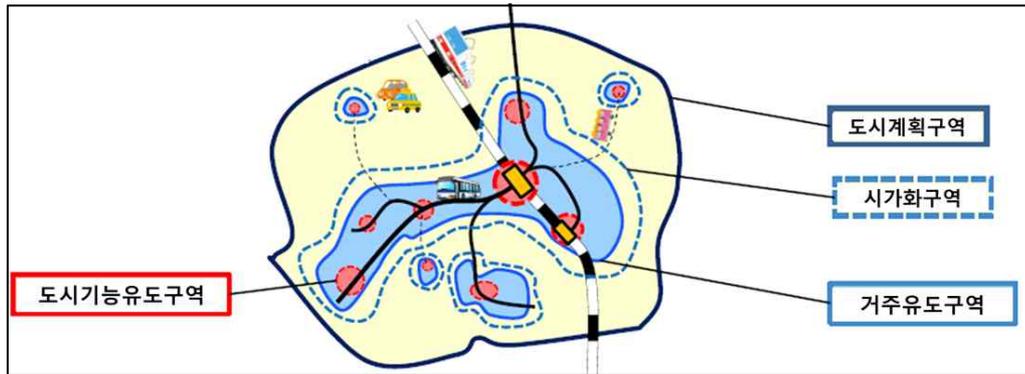
- ① 주택 및 도시기능증진시설의 입지 적정화에 관한 기본방침
- ② 도시 거주민의 거주 유도를 위한 「거주유도구역」의 설정 및 거주환경의 향상, 대중교통의 확보 기타 거주유도구역으로의 거주 유도를 위한 지자체의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도시기능증진시설의 입지 유도를 위한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설정, 각 도시기능유도구역별로 입지 유도 도시기능증진시설(「유도시설」이라 함)의 선정 및 필요 토지의 확보, 비용의 보조 기타 도시기능유도구역으로의 입지 유도를 위한 지자체의 시책에 관한 사항
- ④ 도시기능유도구역에 유도시설 입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로서, 유도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공공공익시설 정비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시정촌마스터플랜)의 일부로 간주된다. 입지적정화계획의 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도시 전체를 조망한다는 관점에서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입지적정화계획구역으로 설정함이 기본이다. 또한 시정촌 내에 복수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함이 기본이다. 단, 토지 이용상황이나 일상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부지역만을 계획구역으로 하거나 계획구역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³⁶⁾ 도시기능유도구역은 원칙적으로 거주유도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가지조정구역에는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6) 国土交通省. 2017.6. 「都市計画運用指針」 참조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상황을 보면, 2017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112개 도시가 입지적정화계획을 작성·공표하였다. 그 중 46개 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만을 설정하고 있고, 나머지 66개 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을 함께 설정하고 있다.

〈그림 2〉 입지적정화계획제도의 이미지



자료: 国土交通省(<http://www.mlit.go.jp/common/001181578.pdf>)

(3) 시사점

아산시를 포함하여 국내 도시들도 대부분 콤팩트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같은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입지적정화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과 유사한 공간 개념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입지규제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유도구역으로의 시설 집중을 도모할 수 있다.

6) 일본의 디맨드택시제도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마이카 보급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 이용자는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이용자가 소수인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사업자의 철퇴가 불가피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버스가 확대되어 왔으나,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계속 확보·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디맨드택시를 비롯한 디맨드형 교통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디맨드형 교통은 정기노선형 교통과 달리 운행방식, 운행시간, 출발 및 도착지점(OD) 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지역주민의 이동수요와 지형, 도로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방식을 선택함이 중요하다.

(2) 주요 내용

디맨드택시 제도가 발달하여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기노선형, 우회루트 에어리어디맨드형, 자유경로 미팅형, 자유경로 도어투도어형 등 다양한 운행방식이 존재한다.³⁷⁾

정기노선형은 노선버스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하지만 예약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정기노선버스의 빈차 운행을 해소할 수 있다.

우회루트 에어리어디맨드형은 정기노선형을 기본으로 하되, 버스정류장이 먼 지역에 별도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두고 예약이 있을 경우에만 우회 운행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공백지역 해소 효과가 있다.

자유경로 미팅형은 운행노선을 정해두지 않고 예약에 따라서 버스정류장 간을 최단경로로 연결 운행하는 방식이다. 최단경로 선택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을 다수 설치함으로써 보행거리 단축이 가능하다.

자유경로 도어투도어형은 운행노선과 버스정류장을 미리 정하여 두지 않고 지정 구역 내에서 예약에 따라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행방식이다. 일반택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목적시설과 출발시설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3〉 일본 디맨드택시의 운행 유형

유형 구분	운행방식의 특징 및 이미지  자택  버스정류장
A. 정기노선형	노선버스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하지만 예약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방식. 정기노선버스의 빈차 운행을 해소할 수 있음 
B. 우회루트 에어리어디맨드형	정기노선형을 기본으로 하되, 버스정류장이 먼 지역에 별도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두고 예약이 있을 경우에만 우회 운행하는 방식. 대중교통공백지역 해소 효과 
C. 자유경로 미팅형	운행노선을 정해두지 않고 예약에 따라서 버스정류장 간을 최단경로로 연결 운행하는 방식. 최단경로 선택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을 다수 설치함으로써 보행거리 단축 가능 
D. 자유경로 도어투도어형	운행노선과 버스정류장을 미리 정하여 두지 않고 지정 구역 내에서 예약에 따라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행방식. 일반택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목적시설과 출발시설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국토교통省中部運輸局, 2013. 「デマンド型交通の手引き」

37) 국토교통省中部運輸局, 2013. 「デマンド型交通の手引き」 참조
 (http://www.ttb.mlit.go.jp/hokkaido/bunyabetsu/tiikikoukyoukoutsuu/31manyuaru/09demandotebiki_tyubu.pdf)

(3) 시사점

아산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도고, 선장, 송악, 음봉면 등 관내 65개 마을에서 마중택시를 운행 중이다. 마중택시의 운행에는 적지 않는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수요행태, 지형,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중택시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중택시 운행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일본의 디맨드택시 운행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7) 일본 지자체의 문화진흥계획 수립사례

(1) 개요

일본의 경우 2016.10.1. 현재 총 139개 지자체(도도부현 29, 시정촌 110)가 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독자적인 문화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진흥조례 제정 지자체 중 상당수는 문화진흥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계획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진흥 추진 중이다.

문화진흥계획 수립의 대표적 사례로 오사카시를 들 수 있다. 오사카시는 2013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에 뒤이어, 2016년에 「제2차 오사카시문화진흥계획」(2016~2020)을 수립한 바 있다.

(2) 주요 내용

2016년에 수립된 제2차 오사카시문화진흥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적인 관점에서 오사카시의 미래상을 「문화자유도시, 오사카시」로 설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수하는 도시”, “오사카가 자랑하는 문화력을 활용한 매력 넘치는 도시”,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통하여 활기차게 활동하는 도시”의 3가지를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래상 실현을 위하여 오사카시가 추진하는 문화시책은 크게 (1)문화 창조기반 만들기, (2)도시를 위한 문화, (3)사회를 위한 문화의 3가지 방향성 하에서 제시되고 있다.

「문화 창조기반 만들기」 관련 시책에는 ①예술문화를 창조하는 인재와 받쳐주는 인재의 육성 및 지원 충실화, ②예술문화를 미래에 계승·발전시킬 청소년의 육성, ③예술가 등이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를 위한 문화」 관련 시책에는 ①오사카의 자랑거리인 가미가타(上方)전통예술을 활용한 매력 홍보, ②예술문화의 매력을 관광자원 및 경제 활성화에 활용, ③도시 전체를 활용한 예술문화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를 위한 문화」 관련 시책에는 ①교육, 복지, 마을만들기 등 모든 시책분야에 활용, ②지역의 특색있는 예술문화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의 성과목표는 오사카시가 「문화자유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을 2015년 15.9%에서 2020년에는 약 40%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 창조기반 만들기」의 성과지표는 문

화적 환경 정비에 대한 만족도, 예술문화진흥사업 보조금 신청건수, 「나니와 예술응원모금」기부건수 등이다. 「도시를 위한 문화」의 성과지표는 “관광자원 및 경제활성화에 문화의 힘이 활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의 비율”이, 「사회를 위한 문화」의 성과지표는 “교육, 복지, 마을만들기 등 모든 시책에 문화의 힘이 활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의 비율”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표 2〉 제2차 오사카시 문화진흥계획의 성과지표와 목표

전체 목표	오사카시가 「문화자유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 15.9%(2015)→약 40%(2020)
문화 창조기반 만들기	· 문화적 환경 정비에 대한 만족도: 9.9%(2015)→약 40%(2020) · 예술문화진흥사업 보조금 신청건수: 167건(2015)→약 200건 이상(2020) · 「나니와 예술응원모금」 기부건수: 336건(2015)→약 650건 이상(2020)
도시를 위한 문화	관광자원 및 경제활성화에 문화의 힘이 활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의 비율: 12.9%(2015)→약 30%(2020)
사회를 위한 문화	교육, 복지, 마을만들기 등 모든 시책에 문화의 힘이 활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의 비율: 14.1%(2015)→약 20%(2020)

자료: 大阪市. 2016. 「第2次大阪市文化振興計画」

(3) 시사점

아산시가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계획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문화예술 진흥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시책들이 체계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일본 지자체의 문화진흥계획 수립 사례는 아산시의 문화진흥의 첫걸음이 문화진흥계획 수립에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문화진흥계획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독자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일본의 뉴투어리즘 시책 및 상품화 사례

(1) 개요

종래의 관광여행이 단순한 볼거리 중심이었다면, 뉴투어리즘은 테마성이 강하고 체험형·교류형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³⁸⁾.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에 수립된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분야로 뉴투어리즘을 제시하고, 관련 여행상품의 개발·유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성 관광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뉴투어리즘 창출·유통촉진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38) 国土交通省 観光庁 홈페이지(<http://www.mlit.go.jp/common/000114212.pdf>) 참조

(2) 주요 내용

뉴투어리즘은 테마에 따라 산업관광, 에코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 헬스투어리즘, 롱 스테이, 문화 관광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산업관광」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장, 기계·기구, 최첨단기술을 구비한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서, 학습과 체험을 병행한다.

「에코투어리즘」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대상으로 하되 이를 훼손함 없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관광으로서 whale watching과 같은 야생생물 관찰투어, 식재·청소 등 환경보전 활동을 병행하는 자원봉사 투어가 이에 해당한다.

「그린투어리즘」은 농산어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주민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제형 여가활동으로서, 농사체험, 농산물 가공체험, 농가 민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헬스투어리즘」은 자연이 풍부한 지역을 방문하여 자연, 온천 및 건강식 요리를 통하여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증진·유지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의료형에서 레저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롱 스테이」는 장기체제형 관광으로서 지역과의 심층 교류를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시대를 맞이하여 여행수요 확대 및 지역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은 역사·전통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2007년의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에서 새로운 관광분야로 뉴투어리즘이 제시된 이후에 국토교통성 관광청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뉴투어리즘 창출·유통촉진사업」을 추진하였다. 뉴투어리즘에 입각한 여행상품 구상을 공모하여 선정되는 경우 상품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2009년의 3년 간 총 392건이 응모하였으며 143건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구상 중 실제 상품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뉴투어리즘 창출·유통 촉진사업」에 의한 관광자원 상품화 사례

투어유형	투어명칭	위치
헬스, 롱스테이, 에코투어리즘	슬리밍(slimming) 스테이~3%아름다워지는 여행(가이케온천(皆生温泉))	돗토리현
헬스투어리즘	시오하라온천(塩原温泉)헬스투어리즘	도치기현
에코, 산업, 문화관광	교토(京都)시네마기행	교토부
산업관광	에코아일랜드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찰투어	오кина와
문화관광	오кина와 원풍경과 예능의 섬 다라마지마(多良間島) 당일투어	오кина와
에코, 산업관광	CSR투어리즘~아키요시다이(秋吉台)석회암콤비나트 순회	아마구치현
헬스, 문화관광	예술과 안식 신슈다테시나(信州蓼科) 아티세라피 투어리즘	나가노현
헬스투어리즘	온천에서 시작·계속·건강증진투어 유무라온천(湯村温泉)	아마나시현

투어유형	투어명칭	위치
그린, 에코, 산업, 문화관광	ETC드라이브플랜 하마나호(浜名湖)	시즈오카현
에코, 헬스, 롱스테이, 문화관광	후라노(富良野) 발 슬로라이프 투어~2008 겨울	홋카이도
문화관광	아이치(愛知) 무장(武將)관광여행	아이치현
헬스투어리즘	디톡스와 젊음 회귀의 여행 언체이징투어(이아미(飯山))	나가노현
헬스투어리즘	노르딕워킹로 돌아보는 일본의 산하	시즈오카현
문화관광	스기에마스미(菅江真澄)도 걸었던 가도·주막 유자오(湯沢)와 요코테(横手)를 찾아서	아키타현
문화관광	감동안내인 스페셜 ANA가고시마 역사심포지엄 사이고다카모리(西郷隆盛)~ 경천애인의 길을 가다	가고시마현
에코투어리즘	오니코베온천(鬼首温泉) 버섯 채취와 역사초원 체험	미야기현
그린, 에코, 문화관광	아와타고원(八幡高原)트래킹투어 농가민박과 우지가미(夜神楽) 견학투어	히로시마현
그린, 헬스, 문화관광	세계유산에서 남성을 연마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구마노(熊野))	와카야마현
문화관광	마츠에(松江) 고스트투어	시마네현

자료: 国土交通省 観光庁(<http://www.mlit.go.jp/common/000114212.pdf>)

(3) 시사점

아산시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볼거리 위주의 전통적 관광자원 뿐 아니라 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개념화된 뉴투어리즘은 아산시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아산시의 농업·농촌, 첨단산업단지, 문화유산, 자연자원, 온천자원은 그린투어리즘, 산업관광, 문화관광, 에코투어리즘, 헬스투어리즘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뉴투어리즘의 상품화에 관한 일본사례를 통하여 아산시 관광 진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다.

9) 일본의 배리어프리기본구상제도

(1) 개요

시정촌이 작성하는 배리어프리기본구상제도의 근거법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에 관한 법률」(약칭 배리어프리법)로서 2006년에 제정되었다. 배리어프리법 제25조에서 시정촌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구역 내의 「중점정비지구」에 대하여 배리어프리기본구상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점정비지구」란 고령자·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시 이용하는 여객시설, 관공서시설, 복지시설 등의 「생활관련시설」이 소재한 곳으로서, 시설 상호간 이동이 주로 도보로 이루어지는 지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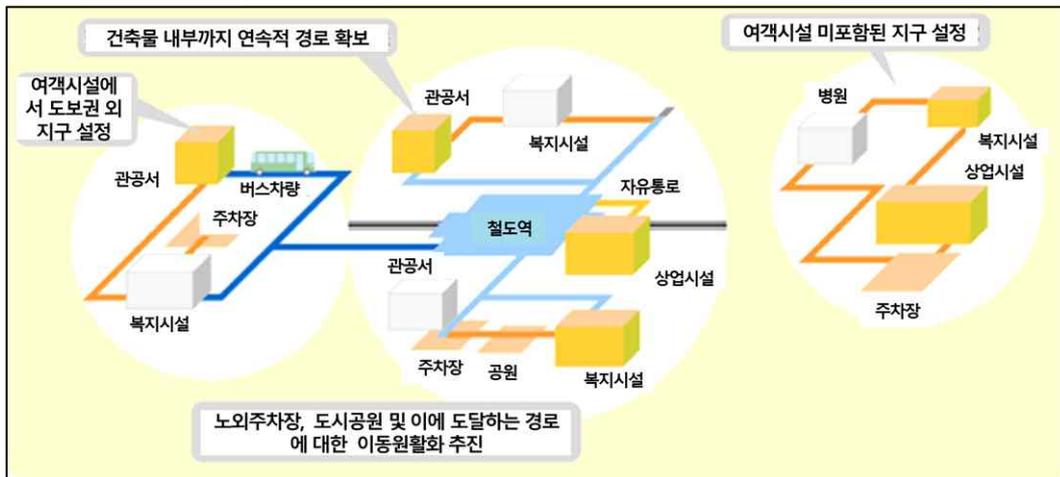
(2) 주요내용

배리어프리기본구상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 ① 중점정비지구의 위치 및 구역
- ② 생활관련시설, 생활관련경로(생활관련시설 상호 간 경로) 및 이들에 대한 이동원활화에 관한 사항
- ③ 생활관련시설, 특정차량 및 생활관련경로를 구성하는 일반 교통용시설(도로, 역전광장, 통로 기타 일반교통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동원활화를 위하여 실시해야 할 특정사업(대중교통, 도로,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건축물 및 교통안전 특정사업)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상기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기타 시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동원활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자전거 기타 차량의 주차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점정비지구 내 이동원활화에 기여하는 시가지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등

2016년 3월 현재 288개 시정촌이 배리어프리기본구상 작성 완료하였는데, 이는 시정촌 총수(1,735개)의 16.6%에 해당한다.

〈그림 3〉 중점정비지구에 대한 배리어프리화 이미지



자료: 柏市(<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300/p005347.html>)

(3) 시사점

천안아산역, 온양온천역을 비롯한 아산시내의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아산시청 등 관공서 주변지역 등은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화가 특히 요구되는 장소이다. 일본은 고령자·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시 이용하는 여객시설, 관공서시설, 복지시설 등이 소재한 곳으로서 시설 상호간 이동이 주로 도보로 이루어지는 지구를 중점정비지구로 정의하고 배리어프리구상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아산시내의 중점정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화 추진계획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상

(1) 개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생활 상 안전·안심·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개호(수발)은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포함한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일상생활권 내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³⁹⁾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제정)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고령자가 자기가 거주하여 온 지역에서 능력에 맞추어 자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자립적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제”로 정의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현재 약 8백만 명인 베이비부머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⁴⁰⁾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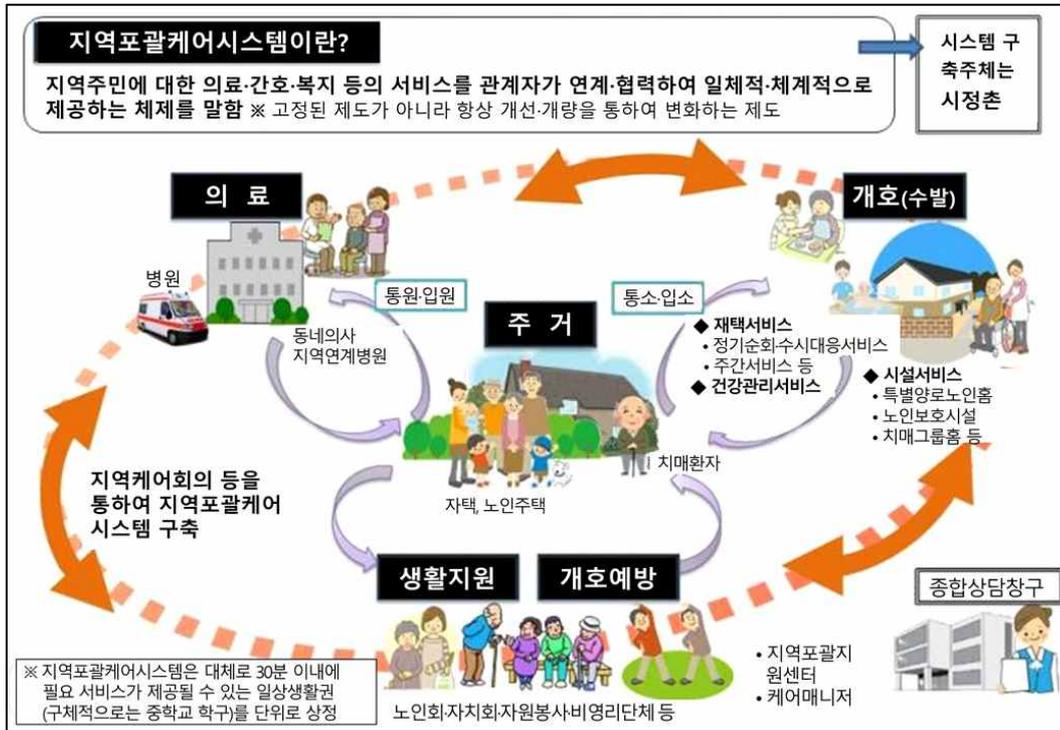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의료와의 연계 강화) 24시간 대응의 재택의료, 방문간호 및 재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② (개호서비스의 충실화) 정기순회·수시대응 서비스 등 24시간 대응의 재택서비스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 ③ (예방 추진) 가능한 한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 및 자립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④ (상태관찰, 배식, 쇼핑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의 확보 및 권리옹호 등) 독신 및 고령부부 가구의 증가, 치매 증가에 대응하여 상태관찰, 배식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와 재산관리 등의 권리옹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⑤ (고령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정비) 일정 기준을 갖춘 유료노인홈,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39) 長寿社会開発センター. 2013. 「地域ケア会議運営マニュアル」 참조 (<http://www.nenrin.or.jp/regional/pdf/manual/kaigimanual00.pdf>)

40)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참조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iki-houkatsu/)

〈그림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이미지



자료: 埼玉県 (https://www.pref.saitama.lg.jp/a0609/chiihoukatukea/chiki_care.html)

(3) 시사점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도 일본에 뒤이어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있다. 고령화대책에 관한 한,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참고할 것이 많은데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상은 그 대표적인 하나이다. 종래에는 학교가 일상생활권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서포트하기 위한 의료복지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이 일상생활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 공간구조를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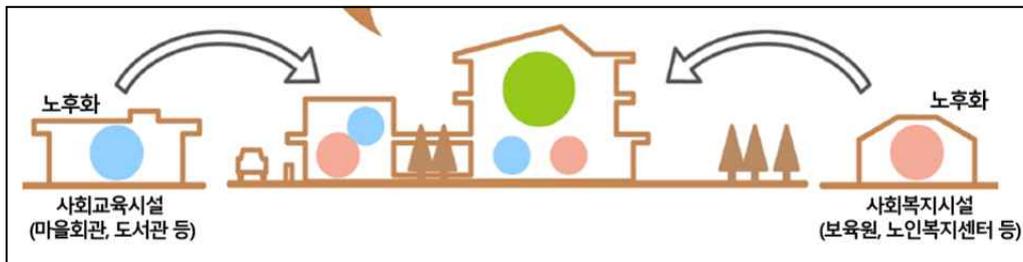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는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11)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동향

(1) 개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기존 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갱신수요 증대로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본에서는 여유교실을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학교시설 복합화의 이미지



자료: 文部科学省. 2015.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표 4〉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이용 현황(2014.5.1. 현재)

복합이용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문교시설	사회교육시설	도서관	38	7
		마을회관 등	383	60
	박물관 등	17	5	
사회체육시설	수영장	18	14	
	체육관 등	42	68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아동클럽	6,294	39
		보육원	97	15
		아동관 등	354	7
	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0	2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	98	13
장애인지원시설 등	10	1		
기타 사회복지시설	11	3		
문교· 사회복지시설 이외 시설	병원·진료소	3	2	
	행정기관	32	17	
	급식공동조리장	99	54	
	지역방재용 비축창고	4,036	1,517	
	민간시설	5	1	
	기타	16	16	
계		11,553	1,841	

자료: 文部科学省. 2015.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 1일 현재 학교시설을 다른 공공시설과 복합 이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전국적으로 13,394개(초등학교 11,553, 중학교 1,841)에 달한다. 복합이용 시설의 종류별로 보면 방과후 아동클럽,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회관·도서관 등의 사회교육시설, 수영장·체육관 등의 사회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행정기관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림 5〉 학교시설의 보육원 복합이용 사례



자료: 文部科学省, 2015.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2) 주요 내용

문부과학성(2015)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효과적 운용사례로 다음 5가지를 들고 있다.

- ① 시설기능의 공유화에 따른 학습환경의 고기능화·다기능화 촉진 사례: 공공도서관과의 복합화에 따라 수업 시 풍부한 자료 활용이 가능해 짐
- ② 아동들과 시설이용자 간 교류 증대 사례: 수업의 일환으로 노인테이서비스센터의 고령자들과 교류 실시
- ③ 지역의 생애학습 및 커뮤니티 거점 형성: 마을회관과의 복합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애학습 거점 역할 수행
- ④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운영 지원사례: 복합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에 의한 체육 및 특활 지원
- ⑤ 효과적·효율적 시설 정비 및 부지 유효활용 사례: 민자사업을 활용한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상업시설 등과의 복합시설 정비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중앙정부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 제정된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학교시설과 사회교육시설 등과의 복합화 및 여유교실 활용을 촉진”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후 2016년 3월에 개정된 「학교시설정비지침」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사회교육시설 또는 고령자복지시설과의 복합화를 계획할 경우에는 시설 간의 상호이용·공동 이용을 통한 학습·생활환경의 고기능화·다기능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시설 내 아동의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과 배리어프리에 배려하여야 한다.
- ③ 학습환경에 장애 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의 복합화는 피하여야 하며, 학습환경의 고기능화·다기능화에 기여하지 않는 시설과의 복합화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3) 시사점

아산시에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복합시설 이용자 뿐 아니라 아동이나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복합이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복합이용시설은 방과후 어린이교실로서 전체 복합이용 시설 수의 50%에 가깝다. 따라서 아산시에서도 방과후 어린이교실과의 복합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사회체육시설 등 아동 또는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과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2) 일본의 학교·가정·지역 연계에 의한 학교지원활동촉진사업

(1) 개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 및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여 지역 전체가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체제 만들기가 필요하다.

문부교육성이 주도하고 있는 「학교·가정·지역 연계에 의한 학교지원활동촉진사업」은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협력하여 수업 학습보조, 교원 업무보조 등의 학교 지원, 방과 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활동장소와 학습·체험·교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 후 지원, 보호자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과 상담에 대응하는 가정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사회성·자주성·창조성을 갖추게 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教育力)을 향상시켜 지역 활성화 및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⁴¹⁾

(2) 주요내용

□ 추진체제

도도부현은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내 교육지원활동 실시방침, 안전관리방침, 홍보활동방침 등을 검토·책정하고 연수의 기획, 사업의 검증·평가 등을 수행한다. 위원은 행정·학교·사회교육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정촌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책정, 안전관리방침, 홍보활동방침, 자원봉사자 등 지역 협력자 확보방침, 활동프로그램 기획, 사업의 검증·평가 등을 수행한다. 위원은 행정·학교·사회교육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정촌은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교육지원활동의 조정, 학교·학교관계자·지역단체와의 연락·조정, 지역 협력자의 확보·등록·배치, 지역 실정에 맞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가를 유도하고, 교육활동추진원, 가정교육지원원, 교육활동서포터 등을 배치한다.

□ 교육지원활동의 종류 및 내용

- ① (학교지원지역본부) 수업 보조, 자습 지원, 특활 지도, 도서 정리와 책 읽어주기, 화단정비 등의 교내 환경정비, 학교행사 운영지원 등 학교가 원하는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② (방과 후 어린이교실) 방과 후 및 주말에 학교의 여유교실 등을 활용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장소를 확보하고, 학습 및 다양한 체험·교류 활동기회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방과 후를 지원한다.
- ③ (가정교육지원활동) 보호자 등에게 가정교육에 관한 정보 및 학습기회 제공, 가정교육지원팀의 조직화, 가정교육 지원거점기능 정비를 통한 상담 대응 등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가정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등·학교 시의 안전지킴이 활동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활동, 기타 어린이가 지역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학교지원활동추진사업에 대한 비용은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에서 각각 1/3씩 부담한다.

□ 교육지원활동 추진실적⁴²⁾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3,527개 학교지원지역본부가 운영 중이며,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939개, 중학교 2,715개로서 전국 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28%에 해당한다. 방과 후 어린이교실은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10,376개가 운영 중으로, 전국 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51%에 해당한다. 이외에 가정교육

41) 學校・家庭・地域の連携による教育支援活動促進事業實施要領

([http://manabi-m\(金\)irai.mext.go.jp/assets/files/pdf_kanrensiryou/H25/H25_sokushin_youryo.pdf](http://manabi-m(金)irai.mext.go.jp/assets/files/pdf_kanrensiryou/H25/H25_sokushin_youryo.pdf))

42) 生涯学習政策局(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03/shiryo/_icsFiles/afieldfile/2014/10/09/1351194_07.pdf)

지원활동으로 보호자 등에게 가정교육에 관한 정보 및 학습기회 제공, 가정교육지원팀 조직 등을 지원하였다

(3) 시사점

어린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체제 만들기가 필요하다. 가정과 지역은 협력하여 학습 보조 등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은 방과 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활동장소와 학습·체험·교류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가정에서의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본의 「학교·가정·지역 연계에 의한 학교지원활동촉진사업」은 이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제도화하는 노력과 함께 아산시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

13) 일본의 지역방재계획제도

(1) 개요

재해대책기본법(1961년 제정)에서는 방재계획을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기본계획」,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지역방재계획」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전 각료와 지정 공공기관의 장,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총리가 회장이다.

지역방재계획은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과 시정촌 지역방재계획으로 구분되는데, 방재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국토교통성은 2017년 7월에 수정된 「국토교통성 방재업무계획」에서 지역방재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복구·부흥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총 59개 항목의 계획사항을 제시하고 있다.⁴³⁾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항목으로 ①방재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②교통이용자·재해피해자의 안전 확보, ③라이프라인시설·공공시설의 재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긴급수송 확보에 관한 사항, ⑤대체수송 확보에 관한 사항, ⑥방재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⑦방재훈련에 관한 사항, ⑧재해 발생 시 안전수칙 등의 홍보·선전에 관한 사항, ⑨수해방지에 관한 시설 및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⑩기차

43) 国土交通省(<http://www.mlit.go.jp/saigai/bousaigyomukeikaku.html>) 참조

재의 비축에 관한 사항, ⑪재해 발생 시 위험구역에 관한 사항, ⑫재해에 대한 경계·피난 체제에 관한 사항, ⑬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백화점, 여관, 지하상가, 고층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⑭주택·건축물의 안전성 지도에 관한 사항, ⑮「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계획」에 의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⑯방재를 위한 적정 토지이용 유도에 관한 사항, ⑰폭설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⑱해상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⑲항공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⑳철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㉑도로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㉒항만위험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㉓석유콤비나트지대 등의 주변시가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㉔대규모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㉕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체제에 관한 사항, ㉖피해 정보의 수집·연락 등에 관한 사항, ㉗타 기관과의 상호 응원에 관한 사항 등 27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 관련 계획항목으로 ①재해 예보·경보의 전달 및 경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재해 발생 시 재해 관련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③재해 발생 시 방재 관련 직원 동원체제에 관한 사항, ④재해 발생 시 홍보·선전에 관한 사항, ⑤피난에 관한 사항, ⑥수해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⑦재해 발생 직후의 시설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⑧재해 발생 시 통신계획에 관한 사항, ⑨재해 발생 시 시설, 공공시설의 응급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⑩재해 발생 시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사항, ⑪긴급수송에 관한 사항, ⑫대체수송에 관한 사항, ⑬건설기재재 현황 파악 및 긴급사용에 관한 사항, ⑭기술자 현황 파악 및 동원에 관한 사항, ⑮재해 발생 시 복구 자재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⑯수질사고 발생 시 방재에 관한 사항, ⑰기름 등 위험물의 대량유출에 따른 방재에 관한 사항, ⑱재해 발생 시 응급공사에 관한 사항, ⑲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⑳댐, 보, 수문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㉑재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㉒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등 22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재해 복구·부흥에 관한 사항

재해 복구·부흥 관련 계획사항으로 ①복구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②피해액조사의 조기 실시에 관한 사항, ③긴급 복구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재해복구 촉진에 관한 사항, ⑤반복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⑥피해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⑦공공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⑧피해건축물 등의 복구지도 추진에 관한 사항, ⑨도시 부흥에 관한 사항, ⑩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조치에 관한 사항 등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3) 시사점

국내에서도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방재계획제도와 같은 체계적 계획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자체 단위의 방재계획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산시를 비롯하여 지자체의 독자적인 방재계획 수립 시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본 지역방재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59개 계획항목 등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14) 일본 가메오카시의 Safe Community운동 실천사례

(1) 개요

Safe Community(SC) 운동은 “부상 및 부상을 일으키는 사고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행정·주민·지역단체가 협력하여 부상과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SC협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에서 주도하고 있다.⁴⁴⁾ 국내에서는 국제안전도시로 번역되어진다.

SC를 위해서는 교통 안전, 가정 안전, 직장 안전, 스포츠 안전, 학교 안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어린이안전, 고령자 안전, 폭력의 회피, 자살 예방, 외상 surveillance 등이 광범위하게 요구된다. WHO의 SC협동센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SC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약 300개 도시가 Safe Community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SC인증을 획득한 도시는 교토부의 가메오카시이다. 가메오카시는 교토부에 위치한 인구 약 4만 4천명의 소도시로서 교토시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2008년 3월에 SC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재인증을 취득하였다. 현재는 2018년 재재인증을 위한 준비 중이다.

(2) 주요내용

가메오카시의 Safe Community 실천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야를 초월한 협력적 추진체제 정립⁴⁵⁾

- ① (가메오카시SC추진 (의회) 안전관련 지역단체 대표, 안전관련 전문가, 보건·복지·의료관계자, 교육관계자, 시 및 행정기관 직원 등 50명 이내로 구성(시장이 회장). SC실시계획 책정 및 성과 평가 등 수행
- ② (가메오카시SC추진본부) 행정조직으로서 시청 내에 설치
- ③ (SC대책위원회) 자살대책, 고령자안전, 교통안전, 방법대책, 여가·스포츠안전, 유아안전, 학교 안전 등 분야별로 SC프로그램 실시
- ④ (가메오카시 SC surveillance 위원회) 외상데이터 수집, 과제 추출 등 업무 수행
- ⑤ (가메오카시고령자외상예방연구회) 시립병원에 설치되어 외상데이터 수집·분석
- ⑥ (SC모델지구 지정)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지구를 모델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주체 활동 전개

44) 京都府(<http://www.pref.kyoto.jp/safecom/>)

45) 亀岡市(<http://www.city.kameoka.kyoto.jp/safecom/shise/shisaku/safe-community/gaiyo/gaisho.html>)

□ 사고·부상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국가, 교토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주요 수집데이터는 구급수송데이터, 화재·구급·구조통계, 노동재해통계, 재해공제급부 신청기록, 개호보험데이터, 후기 고령자진료비계산서, 국민건강보험진료비계산서, 외상발생동향조사, 공립보육원의 아동부상통계, 가정에서의 유아부상 통계, 고령자 골절데이터, 고령자 운동관련 데이터, 스포츠외상조사, 보행능력조사, 멘탈헬스조사, 정신건강 관련조사, 기타 앙케이트조사 등이다.

□ 각종 SC프로그램 추진

- ① (스포츠안전 교육프로그램) 스포츠강습회 개최, 스포츠건강진단 실시, 어린이 부상예방 가이드 작성
- ② (고령자교통사고 방지프로그램) 교통안전지도 작성 및 각종 계발활동 실시, 고령자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촉진, 반사재 보급활동 등 실시
- ③ (자전거안전이용 교육프로그램) 자전거 매너 계발활동, 자전거대회 실시 등
- ④ (방법대책 프로그램) 역전 등에 고정방법카메라 설치, 블랙박스 활용, 주민 협동 방법스테이션 추진
- ⑤ (자살방지 프로그램) 정신보건 복지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살방지·고립방지 상담 대응, 다중 채무 해결 지원, 게이트키퍼 양성 연수 및 계발활동
- ⑥ (유아보호자 안전교육프로그램) 팸플릿 및 포스터 작성, 세이프 스쿨 추진
- ⑦ (고령자운동 프로그램) 체조교실 운영, 체력 측정 실시
- ⑧ (생명캡슐 프로그램) 구급 시 필요 정보가 들어 있는 캡슐 설치
- ⑨ (치매고령자 조기발견프로그램) 치매로 배회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도 등 실시

(3) 시사점

아산시는 2017년 11월에 국내에서 13번째로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런데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5년마다 재심사되므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최초의 Safe Community 인증도시인 가메오카시는 2008년 3월에 최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재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재인증에 도전할 예정이다. 가메오카시의 Safe Community 추진체제, 사고·부상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체제, 그리고 분야별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Safe Community 프로그램들은 국제안전도시 아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표 5〉 사례 개요와 적용 부분

사례 (정책 또는 사업명)	핵심내용	첨부한 보고서 관련 페이지
신칸센 역세권 개발	고속철도역세권을 업무·연구개발 중심지로 개발한 대표적 사례로 사례 도카이도신칸센의 신요코하마역과 신후지역을 살펴봄	3쪽
일본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자금지원, 정보제공, 상담, 인재 육성 등 유형별로 살펴 봄	14쪽
일본의 녹지기본계획제도	도시녹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녹지기본계획의 제도 개요 및 주요 계 획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25쪽
일본 지자체의 로컬푸드 촉진정책: 지산지소촉진계획 제도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지산지소촉진계획의 제도 개요 및 계획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필요성 시사	34쪽
일본의 콤팩트도시 형성 정책사례: 입지적정화계획 제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입지적정화계획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 보고 계획컨셉의 활용 제언	48쪽
일본의 디멘드택시제도	일본 디멘드택시의 4가지 운행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중택시제도의 다양화 시사	64쪽
일본 지자체의 문화진흥계획 수립사례	일본 지자체의 문화진흥조례 제정상황 및 오사카시가 작성한 문화진흥계 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계획적 문화진흥의 필요성 시사	84쪽
일본의 뉴투어리즘 정책 및 상품화 사례	새로운 관광 개념인 뉴투어리즘의 개념 및 상품화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 고 아산 뉴투어리즘 발굴 가능성 시사	87쪽
일본의 배리어프리기본구상제도	• 철도역 등 중점정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기본구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산 적용 가능성 시사	93쪽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상	도보로 30분 거리의 일상생활권에 고령자를 위한 의료, 수발, 생활지원서 비스를 포괄적으로 배치하는 지역포괄시스템 구상을 살펴보고 검토필요 성 시사	95쪽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동향	학교 여유시설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일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아산 적 용 가능성 시사	102쪽
일본의 학교·가정·지역 연계에 의한 학교지원활동촉진사업	• 학교·가정·지역 연계에 의한 학교지원활동촉진사업의 개요 및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도입가능성 시사	111쪽
일본의 지역방재계획제도	지자체가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49가지 계획항목을 살 펴보고 방재계획 수립 필요성 시사	122쪽
일본 가메오카시의 Safe Community운동 실천사례	일본 최초의 SC인증 지자체인 가메오카시의 SC추진체계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아산 국제안전도시에 시사점 제공	125쪽

2) 시사점 및 정책 제안

1. 천안·아산역이 업무·연구개발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요코하마역 역세권처럼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기능 등의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아산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사례집 발간 등의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개설, 상담창구 설치, 전문가 파견제도, 창업자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아산시 녹지의 체계적 보전 및 녹화 추진을 위해서는 보전지역과 녹화지역의 지정과 같은 구체적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일본의 녹지기본계획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국내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별도의 계획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지산지소축진 계획 수립사례를 참고하여 아산시가 독자적 관점에서 로컬푸드축진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콤팩트도시화를 위하여 아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일본 입지적정화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과 유사한 공간 개념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마중택시 운행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정기노선형, 우회루트 에어리어디맨드형, 자유경로 미팅형, 자유경로 도어투도어형 등 다양한 운행방식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일본의 디맨드택시 운행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7. 일본 지자체의 문화진흥계획 수립 사례는 아산시 문화진흥의 첫걸음이 문화진흥계획 수립에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문화진흥계획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독자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아산시의 농업·농촌, 첨단산업단지, 문화유산, 자연자원, 온천자원은 그린투어리즘, 산업관광, 문화관광, 에코투어리즘, 헬스투어리즘 등 다양한 뉴투어리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뉴투어리즘의 상품화에 관한 일본사례를 통하여 아산시 관광 진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 천안아산역, 온양온천역을 비롯한 아산시내의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아산시청 등 관공서 주변지역 등은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화가 특히 요구되는 장소이다. 일본의 배리어프리구상제도를 참고로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화 추진계획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 종래에는 학교가 일상생활권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서포트하기 위한 의료복지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이 일상생활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 공간구조를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상은 좋은 사례이다.
11.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를 참조하여 아산시에서도 학교의 여유시설을 방과후 어린이교실로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사회체육시설 등 아동 또는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과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2. 어린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체제 만들기가 필요하다. 일본의 「학교·가정·지역 연계에 의한 학교지원활동촉진사업」은 이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제도화하는 노력과 함께 아산시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
13. 일본의 방재계획제도와 같은 체계적 계획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자체 단위의 방재계획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산시를 비롯하여 지자체의 독자적인 방재계획 수립 시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본 지역방재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59개 계획항목 등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14. 아산시는 2017년 11월에 국내에서 13번째로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인증을 획득하였다. 일본 최초의 Safe Community 인증도시인 가메오카시의 Safe Community 추진체제, 사고·부상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체제, 그리고 분야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Safe Community 프로그램들은 국제안전도시 아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여 연구진

연구 책임 임 준 흥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부장
연구 간사 김 지 훈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원

내부연구진 송 두 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박 철 희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부장
이 관 룰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부장
백 운 성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부 부장
시공정희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김 용 현 충남연구원 행복복지연구부 책임연구원
김 원 철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박 근 오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외부연구진 이 경 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홍 성 호 공주대학교 교수
이 동 우 전)국토연구원 박사
양 재 섭 서울연구원 박사

자문위원 김 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 주 진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김 선 배 산업연구원 박사
박 진 용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박 성 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박 성 순 아산시의회 의원
박 세 훈 국토연구원 박사
이 동 우 전)국토연구원 박사
이 찬 서 대전일보 천안아산본부장
임 우 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박사

연구 지원 이 현 경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 담당관
윤 금 이 여성정책보좌관
심 용 근 아산시 정책기획팀 팀장
윤 병 일 아산시 미래비전팀 팀장
김 희 경 아산시 정책기획팀 주무관

인쇄·발행 2017년 12월
발행처 아산시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인쇄처 삼성애드피아
ISBN 978-89-90821-49-2